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4-10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목 차

I. 행사 개요	1
II. 2013년 업무계획	5
1. 서면보고서	7
2. Presentation (PPT)	175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219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35
III. 보도자료	243
1. 보도자료	245
2. 보도자료 Q&A	271
IV. 언론보도	357
V. 국회 상임위 보고(4.8)	381

I

행 사 개 요



행 사 개 요

□ 일시 : 2013. 3. 22(금), 10:30 ~ 13:00(150분)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행사개요

○ 업무보고 : 20분(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 질의, 응답 및 토의 : 50분(차관 주제, 마무리말씀 포함)

※ 주제 : 농식품 분야에 창조경제 접목, 정책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 오찬 : 50분(업무보고 참석 공무원 47명, 현장전문가 2명 등)

※ 메뉴 : 육계장

□ 보고내용 : 2013년도 업무계획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보고형식

○ 보고자 : 장 관

○ 업무보고(파워포인트) 후, 토론으로 진행

II

2013년 업무계획

1. 서면보고서
2. Presentation (ppt)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1. 서면보고서

2013년 업무계획

2013. 3. 22.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I. 지난 정부 농정성과와 반성	15
II. 2013년 정책여건 전망 및 분석	23
1. 대내외 여건전망 및 대응방향	25
2. 2013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26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29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31
(1) 농업의 6차 산업화	31
(2) 신성장동력 확충	32
(3) 정예인력 육성	35
(4)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36
(5) 식품산업 육성	38
(6) 농식품 수출확대	40
(7) 산림부국 실현	41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43
(1)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 축소	43
(2) 농산물 직거래 확대	46
(3) 도매시장 유통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 제고	48
(4)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49
(5)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51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2
(1)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52
(2) 자연재해 대응 강화	54
(3) 가축질병 대응	56
(4) 농기계·비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58
(5) FTA 보완대책 추진	60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61
(1) 생활여건 개선	61
(2)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3
(3) 농촌 활력찾기 운동	65
(4)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66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8
(1)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로 자급률 제고	68
(2) 해외에서 안정적 곡물 조달	70
(3)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72
(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영양 정책 강화	74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75
(1) 국민공감대 형성	75
(2) 투융자 점검·평가 및 성과관리	76
(3) 기초통계 확충	78

IV. 부처 협력과제	79
1. 일자리 창출	81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	82
3. 식품안전	83
4. 농공상 융합 협력체계 강화	84
V. 당면 현안	85
1. 쌀 목표가격 재설정	87
2.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88
3. 사료가격 안정 대책	89
4. FTA 추진동향 및 대책	90
5. 봄철 산불방지 대책	91
VI. 과제별 주요일정	93
VII. 참고사항	111
1. 일반현황	113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120
< 별첨1 > 2013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125
< 별첨2 > 2013년 산림청 업무계획	147

I. 지난 정부 농정성과와 반성

1. 현 좌표 진단
2.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1. 현 좌표 진단(2000~2011년까지 변화)

1 농식품산업

- **[생산·부가가치]** 시장개방, 경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생산액(33.0조원 → 43.2)은 연평균 2.5%p씩 증가
 - 축산·원예분야는 성장한 반면, 쌀 등 식량작물은 감소
 - * 곡물자급률 : ('00) 29.7% → ('07) 27.2 → ('11) 22.6
 - 농림업 부가가치(22.8조원 → 26.8)는 연평균 1.5%p씩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경제 내 비중은 감소(GDP 대비 3.8% → 2.2)
 - * 1인당 부가가치 : ('00) 11백만원 → ('07) 15 → ('11) 20
 -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은 GDP의 2%, 취업자의 4% 비중을 차지(100년 이상 구조변화의 결과)
 - 식품, 외식, 자재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
 - * 식품·외식산업 부가가치 : ('00) 24.5조원 → ('07) 32.6 → ('08) 34.9 → ('09) 36.3 → ('10) 37.2
- **[인구]**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 및 농림업 취업자 감소
 - * 농가인구(비중)/60세 이상 : ('00) 403만명(8.6%)/133만명 → ('11) 296(6.0)/131
 - * 농림업 취업자(비중)/60세 이상 : ('00) 224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10.6%)/99만명 → ('11) 154(6.4)/88
 - 농가구조에서 중간층이 줄고 영농 규모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 * 영농 규모별 재배농가 비중(1ha 이하/3ha 이상) : ('00) 60.2%/6.1% → ('11) 65.3/8.3
 - 식품·외식소비, 기계화 증가 등으로 연관산업 취업자는 지속 증가
 - * 식품·외식취업자 : ('00) 1,589천명 → ('07) 1,731 → ('09) 1,767 → ('11) 1,861

2 농가 경제

□ [소득] '06년 이후 농가소득은 정체, 도시근로자와의 격차 확대

○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농업외 소득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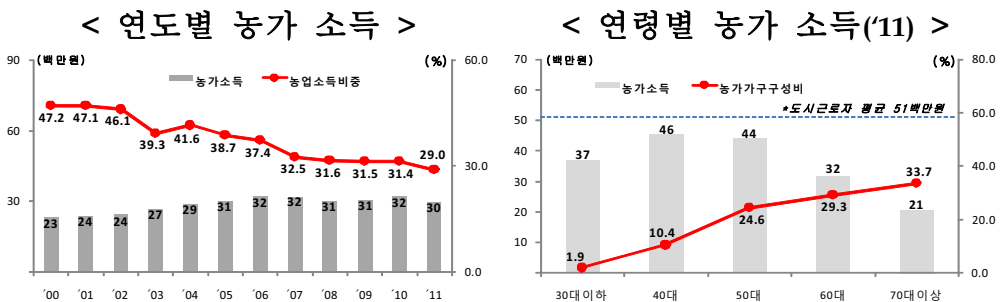
* ('00) 농업소득 11백만원, 농외소득 7백만원, 이전소득 등 5 → ('11) 9, 13, 8

○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추세('00 : 80.5% → '11 : 59.1) 이나, 연령대별 소득격차가 뚜렷

- '11년 기준, 60세 미만 농가소득은 44백만원(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86.9%)인 반면, 60세 이상 농가소득은 25백만원(49.7%)

○ 규모화 진전, 고령화 등으로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

* 농가소득 5분위 배율 : ('03) 9.0배(전국가구의 경우 4.9배) → ('11) 12.3(5.8)



□ [부채] 농가부채는 증가했지만, 농가자산도 증가하여 부채 상환능력은 개선

* ('00) 농가부채 20백만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12.6% → ('11) 26, 6.7(전국가구 52, 16.8)

□ [교역조건] 유류, 농약, 사료 등 투입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되어 농업 소득률은 하락

* 농가교역조건(판매가격지수/구입가격지수) : ('00) 111.7 → ('11) 94.3

* 농업 소득률 : ('00) 47.2% → ('11) 29.0

3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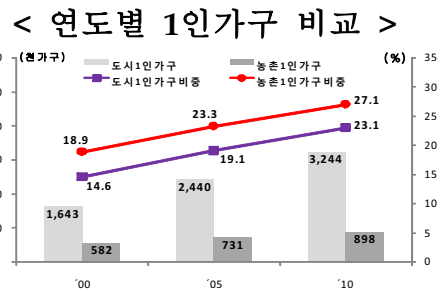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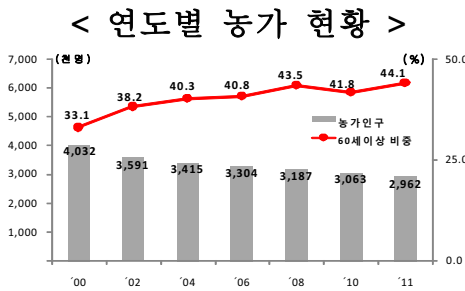
□ [인구] 농촌지역(읍·면)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농촌마을의 과소화 현상 병행

○ 농촌인구는 876만명('10)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 65세 이상 인구비중 : ('00) 14.7% → ('05) 18.6 → ('10) 20.9

○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향촌형 인구이동 증가

* 귀농·귀촌 추이 : ('01) 880호 → ('05) 1,240 → ('07) 2,384 → ('11) 10,503



□ [지역경제] 농촌지역의 취업자는 470만명 수준을 유지

○ 농촌 지역 취업자 중 농업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00 : 47% → '09 : 35)

○ 국민소득 증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라 농촌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농촌 방문객 및 관련 매출 증가

* ('06) 농촌 체험마을 384개소 / 방문객 249만명 / 매출액 314억원 → ('11) 958 / 830 / 1,049

□ [생활여건]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기반이 도시에 비해 여전히 미흡

* 초등학교 : ('00) 농촌 2,691개, 도시 2,576개 → ('11) 2,250, 3,332

* 상수도 보급률 : ('00) 농촌(면지역) 27.9%, 도시 97.3% → ('11) 59.1, 99.4

2.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1 성과

< 지난 5년간의 정책여건 >

- ◇ 거대경제권(미국, EU 등)과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 내부의 양극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08, '12)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재해·질병(보상금 1.8조원) 대비 위험예방과 관리강화 필요성 증대

□ [경쟁력·성장동력] 시장개방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세 차례 보완대책('07.11, '11.8, '12.1) 마련
 - 시설현대화는 저리용자방식으로 전환, 투자 책임성 확보 및 수혜대상 확대
- R&D 투자 확대('08 : 6,554억원 → '12 : 9,089) 및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종자·생명산업 등 신성장분야 투자 확대

□ [식품산업·수출]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뒷받침 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적극 추진

- 농식품부 출범('08.2) 계기, 식품산업육성의 기본 틀(규제 → 진흥) 확립
 - 식품산업진흥법('08.6), 김치·전통주·외식·소금산업법 등 제정 및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08.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1.9) 등 수립
 - 막걸리('09년 히트상품 1위) 시장규모 확대, 소금 상품화·산업화 등
- 차별화된 마케팅,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07 : 38억불 → '12 : 80)하고, 한식 세계화 적극 추진

- **[수급안정]** 유통 투명성·다양성을 높이고, 농협 경제사업 확대
 - 생산지 규모화·조직화,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물류 효율화 등 유통구조개선
 - 사이버거래소(aT) 운영 활성화('09 : 52억원 → '12 : 1조 1천억원)
 - 농업관측 개선,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물량 공급 확대
 - 두 차례 '농협법' 개정('09, '1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12) 등을 통해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해외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곡물 도입기반 마련
- **[소득·경영안정]** 직불제·농업재해보험 확충, 가축질병 방역체계 선진화로 주업농(농업소득 50%이상) 소득 증가('07 : 42백만원 → '11 : 46)
 - 쌀소득보전(목표가격 동결 170,083원/80kg), FTA피해보전, 친환경·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 제도개선 및 밭직불제 신규도입
 - 재해보험('08 : 28개 품목 → '12 : 62) 및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확대
 - 구제역 SOP 개정, 축산업 허가제 마련 등 가축방역 선진화('11)
- **[농어촌 복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34.5조원)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농업인 건강(50%)·연금보험료(최대 50%), 양육비·학자금 등 지원
 - 농촌지역에 대한 최소 공공 서비스 기준 설정, 농촌 영향평가제도 도입('11)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여건 개선
 - 고령농 농지연금제 도입('11) 및 여성농·다문화가정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2 반 성

◇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는 미해결 과제 여전

□ [소득경영안정] 농가경영체 입장에서 직불·보험 등 제도개선·체계화 필요

* 소득 : '07) 농가 32백만원, 전국가구 38백만원 → '11) 30, 46

- 직불제는 쌀 중심(고정+변동)이며 밭작물 등은 도입 초기단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에 대한 도상연습('10~'12)을 해왔지만 개별 농가의 소득과악 한계 등이 있어 당장 도입에 애로
- 가뭄·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재해보험 확대 및 피해지원 사각지대 존재

□ [농촌복지·활력] 도시-농촌간 삶의 질 격차가 여전하고, 농촌의 특성(고령화, 과소화, 접근성 등)을 감안한 복지전달 체계 미흡

* 삶의 질 지수('12) : 일반시 10.4, 도농복합시 9.8, 군 9.4

- 고령화·과소화 등을 극복하고 농촌활력을 높일 필요
- 관계부처에 분산된 농촌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및 성과관리 강화(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기능 확대) 요구

□ [수급안정] 농산물 물가안정 방식, 안정적인 식량공급 인프라 미흡

- 물가지수 관리중심의 수입확대(TRQ) 등 단기적 물가대응 및 배추 등 주요품목 수급불안 반복(유통구조개선에 장시간 소요)
-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하락세

II. 2013년 정책여건 전망 및 분석

1. 대내외 여건전망 및 대응방향
2. 2013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1. 대내외 여건전망 및 대응방향

□ 개방 확대, 기상이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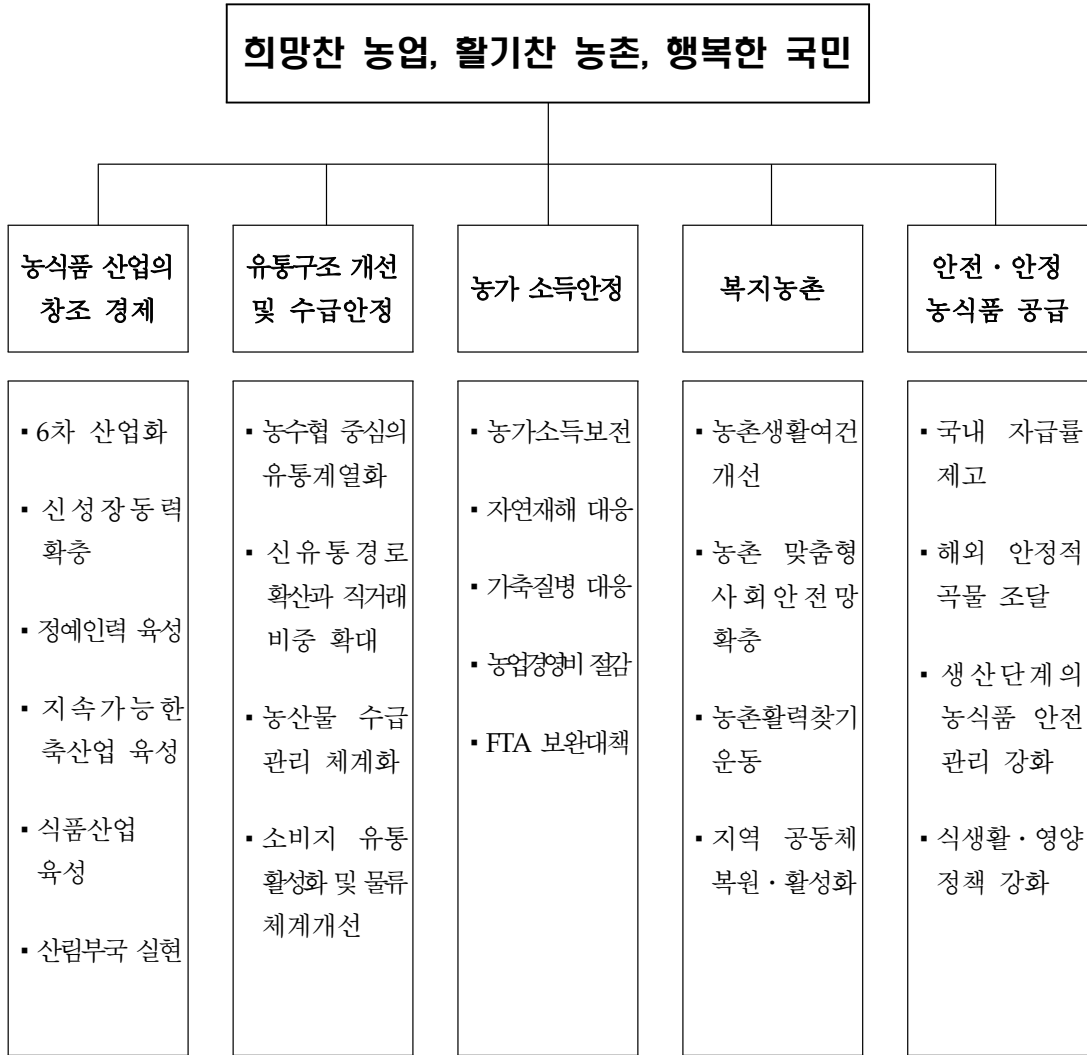
- 중국, 캐나다 등 농업 강국과 FTA협상이 진행되고, 쌀 관세화 유예종료('14년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등 통상이슈 잠재
- 일상화되는 재해에 대비한 지원제도 및 재해보험 개편 요구
- 농촌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충, 체계적 지역개발 필요성 증대

⇒ 개방화 시대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6차 산업화 등)이 중요

□ 제도개선 및 중장기 정책 시행 등 시기별 맞춤형 전략 추진

- **['13 상반기]**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정책로드맵 수립('13.5월)
 -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6차 산업화, 과학기술 활용(IT·BT 등) 귀농·귀촌지원 등 신규인력 유입 등으로 농촌에 새로운 분위기 조성
 - 출범초기 위기관리 차원에서 가축질병, 재해예방에도 만전
- **['13 하반기]** '농촌 활력찾기 운동'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역량 집중
 - * '11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농어촌 운동'을 '농촌 활력찾기 운동'으로 확대·발전
- **['14~'17]** 국민공감 과제를 포함하여 중장기 대책 본격 추진
 - * 주요과제 :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직불제·재해보험 개선,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육성, 6차 산업화,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2. 2013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추진체계

- 국민 공감대 형성 : 국민공감농정추진위원회, 지역 농정체계 구축
- 스마트 농정 : 투융자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통계기반 구축
- 부처협력 강화 : 농공상 융합 협력, 농어촌 복지, 농식품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 네덜란드·스위스 농업 >

◆ 우리나라 농업과의 비교('11)

	네덜란드	스위스	한 국
경지면적 (천ha)	1,858	1,052	1,698
농 가 수 (천호)	70	58	1,163
호당 경지면적 (ha)	26.4	18.3	1.46
농가소득 (만원)	7,711	14,433	3,015
농산물수출액 (억불, '10)	481	113	59
농산물수입액 (억불, '10)	298	28	258

◆ 네덜란드 농업의 강점

①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2011년 농업예산의 37%가 지식 및 혁신관련 예산

② 시장경쟁을 통한 전문화·규모화

- 낙농, 양돈, 화훼 등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생산체제

③ 푸드밸리(Food Valley)를 통한 산학연 연계 발전

- 식품관련 종사자 2만명(75%가 연구개발에 종사)

*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등 세계적 식품기업 연구소 위치

◆ 스위스 농업의 시사점

①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가목표이며 농정 기본방향

- 농업직불금 규모는 농림식품 예산의 74.3%('09)

* 스위스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

- 식량안보 추진(곡물자급률 50% 이상), 소규모 가족농(95%) 지원

② 세계적 식품 기업 성장

- 신젠타(세계 종자 3위, 농화학 2위, 매출액('10) 12조원)

- 네슬레(세계 식품 1위, 매출액('12) 150조원), 앙드레(세계 5대 곡물메이저)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1 농업의 6차 산업화

◇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판매·관광 등 2·3차 산업 연계 지원
 - 특화농공단지 조성('12 : 17개소 → '13 : 22)을 통한 향토산업 집적화 및 농공상 융합·가공·컨설팅 등 지원('12 : 1,697억원 → '13 : 1,714)
 - 양조장 등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6차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식품 명인이 중심이 되는 체험·전승관 설치
- 실태조사(5월), '6차 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6월) 및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12월) 등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특례 조례 제정 확산 등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정비
 -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체험·휴양마을 '12 : 700개소 → '13 : 800)
 - 체험마을, 관광농원 등의 시설,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급제 시행(3월)
 - 1사1촌 등 농촌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선정,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
 - '도농교류의 날(7.7)' 제정, 농촌 인성학교 지정(50개소)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사회공헌 인증제(3월) ○ 농촌6차산업 실태조사(5월) ○ 농촌 6차산업 활성화 대책(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평가(7월) ○ 특화농공단지 5개소 조성(12월) ○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성학교 지정(~'17) ○ 특화농공단지(누계50개소) 조성('17) ○ 향토산업 발굴(266개소, ~'17)

2 신성장동력 확충

◇ 첨단과학농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 '17년까지 R&D 투자를 농식품 예산 대비 10%로 확대('12년 5%)
- 글로벌 종자 수출과 생명산업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IT·BT 융합) 농식품 산업에 IT·BT를 접목, 산업 경쟁력 제고

- 성장환경(온도, 습도 등) 모니터링, 제어 등 첨단기술을 농업·농촌 현장에 접목하는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건*)
 - * IT기반 돈사 모니터링, 사료급이 제어 등의 양돈 교육농장, 유기농 디지털 마켓 구축 등
- **RFID** 등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기술 개발(2건*) 및 BT를 활용한 기능성 농산물, 신소재 개발 추진(6건**)
 - * 농축산물 생산·유통 추적 RFID 태그 개발 등, ** 봉독을 이용한 식의약품 개발 등
- 관계부처와 협의, **농촌 통신비 부담경감 등 통신환경을 개선** 하고 농업인 대상 IT 교육을 통해 생산현장 적용 확대
 - 농촌 통신환경 개선 지원체계 구축, 농업 생산·유통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가칭)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

□ (R&D 효율화) 농식품 과학기술*을 '17년까지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농정목표에 기여하는 손에 잡히는 R&D」 체계 구축

-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농식품) '12년 75%→'17년 82% / (제조업) '11년 82%
- **중장기 R&D 기술 로드맵**을 마련(6월), 농정현안 해결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에 선택과 집중

* 관련 핵심기술 예시: ① 환경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②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 방지를 위한 배추 등의 저장기간 연장 기술, ③ 식품안전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기술

-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
 - * 민간 R&D 투자 비중 : (한국) 26%, (미국) 52, (네덜란드) 58
 - 농식품 벤처 및 민간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
 -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요건 및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등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R&D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 R&D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융합형 연구 촉진
 - 농과위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활성화
 - * 다부처 유전체사업(5개 부처), 인수공통전염병 극복기술개발사업(3개 부처) 등
-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 및 혁신기술을 인증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 개정(6월, 12월)

□ **[종자산업]** 종자관련 R&D 투자 및 첨단연구기반 조성

- **Golden Seed 프로젝트**(’12~’21, 4,911억원)는 품목별(20개) 상세기획 수립(4월) 및 연구 사업단 가동 등 본격적인 연구 착수(7월)
- 딸기, 장미, 국화 등 로열티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13 : 63억원)로 로열티 경감(’12 : 176억원 → ’17 : 112)
- 방사선육종연구센터(정읍, ’13 완공) 및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 ’15 완공)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민간의 종자개발 지원

□ **[생명산업]**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연구자, 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생명자원 통합정보 시스템(BRIS)** 구축 추진 및 자원 DB화율 제고(’12 : 93% → ’13 : 95)

-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생명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16까지 9개소)
 - * 곤충('12~'14, 3개소), 미생물('13~'16, 1), 천연색소('11~'14, 2), 양잠('12~'16, 3)
-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13년 700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곤충 등 생명자원의 **상품화 연구**** 확대
 - * 농생명 식의약 소재, 바이오 장기 개발 등 7개 분야('11~'20, 농진청)
 - ** 곤충의 식약용·가축사료화('11~'15, 27억원), 오디·누에 활용 제품('11~'15, 25억원)

□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투자조합 7개를 추가 결성하여 유망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추진

- * 조합 결성수 / 금액 : ('12) 18개 / 3,300억원 → ('13) 25 / 4,200
- * 7개 펀드 : 농림축산·식품 등 일반펀드 4개, 중소규모 경영체 특수펀드 2개, 상생펀드 1개
- 농식품 대기업과 정부·지자체가 함께 중소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상생펀드'**(1개, 100억원) 시범 추진
- **투자로드쇼 방식을 변경**(지역별 → 직능·주제별), 입체적 투자처 발굴
- 우수 사업아이템 보유 경영체에 사업계획 수립, 회계·법률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사업** 실시(연중)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 추진(연중) ○ 미생물센터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3월) ○ Golden Seed 상세기획(4월) ○ R&D 중장기 로드맵수립(6월) ○ 과학기술육성법 개정(6월) ○ 농식품 상생펀드 시범사업 추진(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Seed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7월) ○ 농촌 통신환경 개선협의(방통위)(10~12월) ○ 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설계 완료(11월) ○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준공(11월) ○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결성(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4) ○ 유전체사업 등 다부처 공동 기획 사업추진('14~) ○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15) ○ 곤충센터·천연색소센터 건립('14) ○ 미생물센터·양잠단지 건립('16)

3 정예인력 육성

◇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

- **[예비 농업인]** 학교별 특성화 유도,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고 : 농산업체 맞춤형 고교 신규 지정('13), 특성화 교과목 운영
 - 농대 : 현장실습, 창업 교육, 멘토링, 인턴십 등 지원(10 → 15개교)
- **[신규 농업인]** 창조적 의지를 가진 농업인의 성공적 영농 창업 지원
 - 농지 구입, 시설 건립 등 창업 초기자금 지원('13년 1,800명)
 - * 지원규모(조건) : 1,012억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경영·기술 교육, 국내외 선진 농가 연수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신보의 신(新) 보증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력 등 사업성 평가 신설(4월)
- **[전문 농업인]**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 학습체계 구축
 - 농협, 농업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습조직 지원('13년 200개)
 - 단·장기 단계별 교육 : 품목 단기 교육(2주) - 농업인 대학(6개월) - 농업마이스터대학(2년)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후계농 선정(3,6월) ○ 농신보 신(新) 보증심사시스템 도입(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고·농대 및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마이스터대 선발('14) ○ 후계농·우수후계농 선정(매년) ○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15)

4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축산업 기본 체질을 개선
 - 분뇨자원화율/공동자원화율 : ('12) 88.7%/91 → ('13) 89/119 → ('17) 91/172
 - 사료비 절감액 : ('12) 1.36조원 → ('13) 1.45

□ [환경부담 완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

-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액비로 전환하여 경종농가에게 공급(자원순환형 축산)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설비 지원 확대
 - * 공동자원화 시설 : ('12) 88개소 → ('13) 101 → ('17) 150
 - * 에너지화 시설 : ('12) 7개소 → ('13) 9 → ('17) 21
 - * 액비유통센터 : ('12) 162개소 → ('13) 177 → ('17) 222
-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4월)

□ [사육관리 선진화] 축산업 현실을 감안한 시설·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무허가축사를 개선하고,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마련(2월) 후 관련법령(건축법·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 개정** (9월)
 - * 지자체별 건폐율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닭·오리 축사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축사거리제한 규제 한시적 유예 등
 - **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4~9월)
-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동물복지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13 : 4,325억원) 지원(4월, 대상자선정)
 - 모든 자동급이기, 젓소 자동착유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모델 도입

□ **[사료가격 안정]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적극 추진**

-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5개 정책조합)* 추진
 - * 농가 직거래구매자금('13년, 1,700억원 신규) 및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가격급등 등 필요시), 할당관세 및 원료구매자금('12 : 600억원 → '13 : 950), 부가세 영세율 적용('11)
- 안정적인 원료조달을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추진
- 조사료 공급 확대(재배면적 '12 : 27만ha → '14이후 : 37)

□ **[친환경축산단지] 유희 농·산지를 활용한 축산농가 단지화**

- 공유지, 간척지 등에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범 추진
 - 부지선정 및 설계('13 : 5개소, 개소당 10ha이상) → 단지조성 및 검증·평가('14~'15)
-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축산 도입 검토
 - 관계기관(진흥청·산림청) 등 참여한 T/F 구성·운영 및 전문가 연구용역 통한 적용모델 검토('13)
 - 시범사업 추진 후 일반농가 적용가능성 검증('14년이후)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4월) ○ 무허가 축사 관련 법령개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4~9월) ○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4월) ○ 산지축산모델개발 T/F구성(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하위 법령 개정(9월)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12월, 35만ha) ○ 산지축산모델개발연구용역(12월) ○ 친환경축산단지 부지선정 및 설계(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재연장('14)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14~ 이후 37만ha)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14~) ○ 산지축산모델 시범사업 추진('14~) ○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및 검증('14~)

5 식품산업 육성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상생하는 식품 공급망 구축

-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화에 참여
 - * 공동가공센터, 지역전략식품사업단, 농공상융합형기업, 농업협동조합 등
- 식품기업-지자체-연구소 등의 융복합을 통해 식품산업 혁신 유도

□ 농업경영체의 농산물 가공업 참여 촉진

- 농업인의 가공 시제품 생산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공동가공센터' 설립 확대('13 : 16개소 → '14 : 24 → '17 : 48)
 - * 문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오미자·사과 농축과즙 등 11개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 촉진 (지역전략식품 사업단 육성 '13 : 67개소 → '14 : 75 → '17 : 100)
 - * 청도 감클러스터사업단 : 감 활용 신제품개발로 매출액 증가('09년 7억원→'12년 59)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농공상융합형기업 육성
 - 시설·운영자금, 컨설팅·R&D 및 판로 촉진 지원 등 대폭 확대
 - * 공주지역 작목반(계약재배)→(주)제이애프드(1차가공)→(주)시용원(즉석조리 식품 생산·판매)

□ 식품·외식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농식품의 안정적 판로 개척

- 국내산 식재료 판매 확대를 위한 '외식 식재료 전문몰(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12 : 15품목 → '13 : 50 → '17 : 170)
 - * HACCP 등 품질인증제품 위주 입점 및 위생기준 위반업체 정보공개시스템 마련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중심의 가공·유통업 진출 확대
 -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가공센터(쌀가공품, 가정편의식) 착공(11월)

□ **중소식품 기업이 주축이 되는 경쟁력있는 식품산업 육성**

○ **식품 R&D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비율** 제고**

* 식품 R&D 예산 : ('13) 313억원 → ('14p) 360 → ('17p) 613

** 중소기업 우선쿼터 배정 비율(자유응모) : ('12) 50% → ('13) 60 → ('17) 70

○ **식품산업 현장 수요에 기초한 전문인력 10만명 양성(~'17년)**

- 특성화고 졸업생의 식품 기업 인턴고용지원('13, 200명), 식품전문 교육 참여기회 강화(교육인원 '12 : 3,275명 → '13 : 4,000 → '17 : 15,000)

○ **중소식품기업 간 협력사업에 의한 공동브랜드 개발, 기능성 연구지원('13, 21억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영세식품기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경영안정 지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 ('13)1,475억 → ('15)1,500 → ('17)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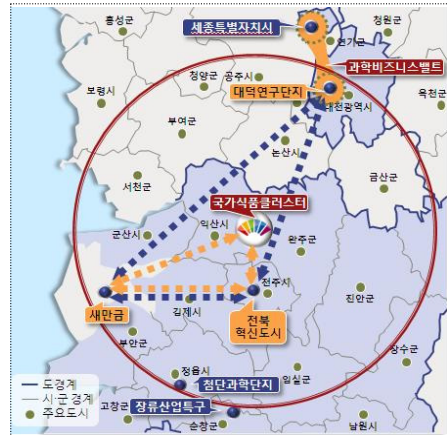
□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15까지, 전북 익산)**

○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형 첨단식품기술 융복합단지 건설**

- 기능성·패키징센터 등 6개 연구시설을 개방형으로 운영, 혁신 거점화

* 2월까지 63개소(CJ 제일제당, 동원F&B, 선옵타, 자룩스 등)와 투자 MOU 체결

○ **전주혁신도시, 대덕연구단지, 새만금 지역과 연계한 식품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5월) ○ 공동가공시설 선정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6~7월) ○ 식품R&D 자유과제 공모(4월) ○ 농공상용합형기업 해외기술 로드쇼(일본,태국)(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의 점검 및 평가 강화(7월) ○ 전략품목 R&D 공모(9월) ○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인턴채용 지원(9월) ○ 공동가공시설 선정(10월) ○ 국내외 식품 기업 투자유치(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가공시설 매년 8개소 선정 추진(매년) ○ 식품 R&D 예산 확대(매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시설 구축('15) ○ 글로벌 식품교육 네트워크 구축 ('14) 및 현장연수 실시('15)

6 농식품 수출확대

◇ 농식품 수출을 '13년 60억불, '17년 100억불로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시장규모화로 수급안정 기여

* 농식품 수출 : ('07) 25억불 → ('08) 30 → ('09) 33 → ('10) 41 → ('11) 54 → ('12) 56

□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현지인시장 공략을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

○ 엔화 환률 급락에 대응한 새로운 **환변동보험*** 개발 및 지원, 중소기업에 물류비, 원물확보자금지원 등 정책지원 집중

* 환율하락시 하락부분의 일정부분 보상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면제

○ 해외시장개척을 보다 체계화하고 유망시장 진출 적극 지원

* 마케팅 지원 체계 : 해외시장정보조사 → 마켓테스트(안테나숍)→ 해외 판촉

*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상담·홍보·체험 등을 결합한 "K-FOOD FAIR" 개최

○ **한식세계화 사업 재정비**로 우리식문화 해외홍보 등 수출 확대에 활용

□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산물 연계성 제고

○ 신선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용 부담 완화** 추진

- 물류비 지원, 수출물량 규모화를 통한 해상·항공 운임절감, 해외 냉장·냉동 물류창고 이용료 지원 등 물류 단계별 지원 제도 강화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 촉진

* 수입쌀 막걸리의 물류비지원(표준물류비의 5%)을 3%로 감축하고 '14년 폐지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추진 계획 마련(3월) 및 공모(4월) ○ 신규 환변동보험상품 개설(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K-Food FAIR개최 (9~11월), 안테나숍 운영(10월) ○ 가공식품 수출 촉진방안 마련(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OOD FAIR 개최(매년) ○ 안테나숍 운영(매년)

7 산림부국 실현

◇ **풍성하게 자란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임업인·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산림자원 육성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세대·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

□ **노령화된 녹화수종을 자원 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교체하고, 지역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전문화된 산림관리 실시**

- 지역별 전략 육성수종을 선정하여 조림(2만ha)하고, 고부가가치 수종인 헛개나무·옻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을 확대(2천ha)
- 기능별 숲가꾸기(30만ha)를 확대하여 숲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발생되는 부산물을 수집(150만m³)하여 자원으로 활용

*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 개최(4.5), 기능별 숲가꾸기 매뉴얼 마련(5월)

- 경제림 육성단지 중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 마련(10월)

□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에 대비**

- 산림관리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12 : 17,717km → '13 : 18,438) 하고, 노후화된 기존 임도를 안전하고 생태적인 구조로 개량(400km)
-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256대) 보급 및 작업시스템 개발

□ **국제 기준에 적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마련 및 거래기반 구축**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기관을 지정(3월)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안을 마련(5월)하여 거래기반 구축

- 산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설명회 개최(5~6월)

- 목재 생산·유통·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를 시행(5월)하고,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목재제품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12월)하고, 산업용·공공용 등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40대)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5월)
- 임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망을 강화
 - 밤·대추 등 유망 소득작물의 BT를 활용한 신품종 개발(30종)
 - * 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위한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설립 추진('13~'15)
 - 산림경영 컨설팅 활성화 추진(임업인·산주 만남행사, 9월)
 -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3월)
- 숲 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법률안」 마련(6월)
 - 유아숲체험원(5개소), 산림교육센터(3개소), 치유의 숲(19개소), 자연휴양림(21개소) 등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
 - * 산림교육종합계획('13~'17) 수립·발표(4월), '숲으로 가자!' 캠페인 연중 전개
 - 도시숲(173개소), 학교숲(149개교), 가로숲(511km) 등을 조성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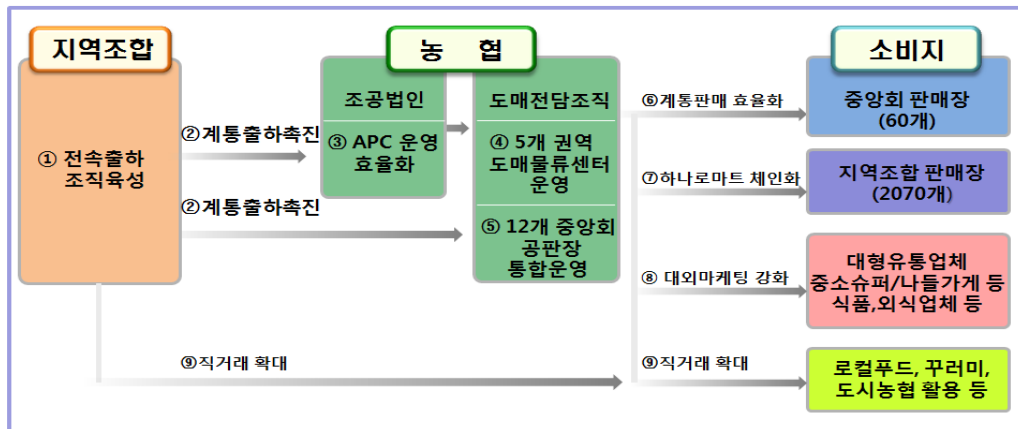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일자리종합대책 추진(3월) ○ 산림탄소 인증기관 지정(3월) ○ 제68회 식목일 행사(4.5) ○ 도시녹화운동 추진계획 수립(4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마련(5월)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시행(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7월~) ○ 임업인·산주만남행사(9월) ○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운영계획 마련(10월)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4) ○ 국립산림교육센터 조성(14)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14) ○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준공(15) ○ 산지은행제도 운영(16)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 축소

- ◇ 생산자는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구조 마련
- (농산물) 산지 규모화·전문화, 도매기능 강화, 소비자 판매확대
 -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을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농산물]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협동조합 채널을 통해 일관 계통출하



□ [산지] 산지 규모화·전문화로 안정적 판매 물량 확보

- 정부, 농협간 협력을 통해 전속출하조직 육성('13-'16, 600개소)
 - * 전속 출하액 : ('12) 1.6천개 / 1.1조원 → ('13) 1.7 / 1.4 → ('16) 2.2 / 2.5
- 지역조합 생산 농산물을 농협 판매조직으로 계통출하 촉진
 - * 계통출하 우수 지역조합(전속출하조직)에 대하여 정부·농협의 지원 우선
- 여러 조합이 함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간 공동경제사업 법인을 산지유통 핵심조직으로 육성('12 : 26개소 → '13 : 28 → '16 : 42)

<비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유통계열화 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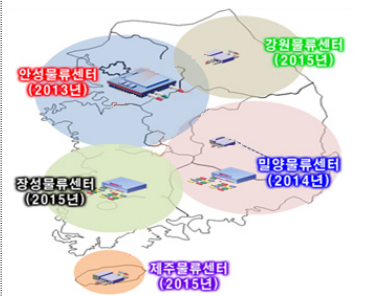
- (단기) '13년부터 정부의 물류지원사업 대행, 유통업체-생산자간 공정거래 시무국 설치(4월) 등
- (중장기) 공동물류센터,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유통 규모화·계열화 유도

□ (도매) 물류센터 효율성 제고 및 공동 판매사업의 거점화

○ 5대 권역별 도매 물류센터 건립(안성, 6월)으로 물류체계 완비('13-'15)

* 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50%(목표: 매출액 대비 16%p→8p) 절감 추진

〈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계획 〉



센터명	준공년도	건립규모 (연면적)	배송권역
안성센터	'13.6월	58,103㎡	수도권, 충청권
밀양센터	'14년	12,222㎡	영남권
장성센터	'15년	6,476㎡	호남권
강원센터	'15년	2,810㎡	강원권
제주센터	'15년	2,810㎡	제주권

-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전통시장 등과의 판매사업 확대

* 계통판매액 : ('12) 6,546억원 → ('13) 7,000 → ('16) 10,029

* 대외판매액 : ('12) 3,050억원 → ('13) 3,500 → ('16) 9,291

○ 농협 공판자회사(12개 공판장 통합) 설립('13년말) 마스터플랜 마련(5월)

- 통합운영시스템 개발(9월)로 통합전자거래* 활성화

* 출하자가 출하 농산물을 통합전자거래시스템에 등록하면, 공판자회사의 모든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거래

- 공판장이 정가·수의 거래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 담당

□ (소비지)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 지역조합 하나로마트(2,070여 개소) 체인화로 계통 판매 확대

- 경영컨설팅 제공, 안성도매물류센터를 활용한 전용상품 공급

*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청과 조달액 확대 : ('12) 1.1천억 → ('13) 1.4 → ('16) 2.8

○ 여건별 대도시 농협 판매모델* 설정('13) 및 경제사업 확대**

* 판매장 확충형, 온라인 사업형, 학교·기업급식형, 기획행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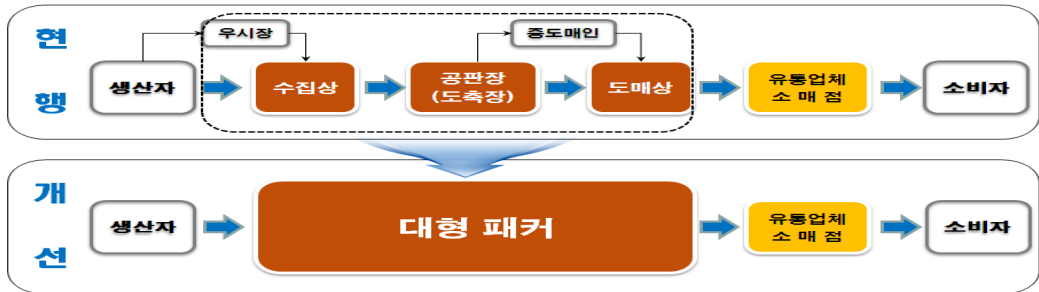
** 대도시농협 경제매출총이익 목표 부여 : ('12) 11% → ('13) 15 → ('16) 25

[축산물] :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 * 안심축산 한우/돼지 시장점유율 : ('12) 11%/4.7% → ('13) 18.6/8.6 → ('16) 37.1/25.0
 - * 육계·오리는 민간업체 중심의 계열화 기 구축('11년 계열화비율 : 육계 94%, 오리 92)

<유통경로 모식도>



- * 유통비용 절감 효과 추정(마리당) : 한우 693천원(소비자가 6.4% 인하 가능), 돼지 36천원(소비자가 6.3% 인하 가능)
- 거점도축장 선정·지원('12 : 11개소 → '15 : 20)을 통해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

□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식당(가맹점, 지역축협 직영점)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도(산지와 소비지 연동 제고)

- * 정육점/정육점식당(개소) : ('12) 297/269 → ('13) 370/300 → ('17) 1,000/600

□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위해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완화(12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계열화 방안마련(3월) ○ 안성물류센터 운용계획수립(4월) ○ 홈플러스 등에 공급계약추진(5월) ○ 대형 패커 육성 등 추진(연중) ○ 식육가공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12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물류센터 완공('15) *농협의 청과물 소매비중 20% 달성('16)

2 농산물 직거래 확대

◇ 소비자 참여 및 IT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추진

- **[직매장장터]** 소비지 접근성을 고려, 직매장·직거래 장터 확대
- **[꾸러미]** 싱글·고령층·맞벌이가구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배송
- **[IT 기반]** 산지유통조직과 소매업체 간 직거래 확대

□ 과거 생산자·장터 중심의 일회성·산발적 성격의 직거래가 아닌, 소비자 참여 및 IT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추진

- 직매장·직거래장터 및 꾸러미 등 유형별 우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17년까지 새로운 유형의 직매장 100개소, 직거래 장터 10개소 설치

<직거래 유형별 활성화 추진내용>

유형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비고
직매장	용진농협 (완주)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계약을 맺은 약 180여 농가가 가격·수량 등을 결정하여 판매대에 진열	매출액('12) : 43억원 매장면적 : 약 85평
	활성화 방안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교육·컨설팅 확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직매장 설치 지원 직매장 운영경비 절감 지원(신용카드 수수료, 홍보비 등)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과천)	매주 수·목요일에 개장하는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에 약 90여 농가가 참여하여 직접 판매	매출액('12) : 83억원 정부지원('12) : 25억원
	활성화 방안	·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연계) 및 지자체(공공시설)와 연계한 운영 · 바로마켓 운영 노하우(운영규정 및 자치회) 교육	
꾸러미	흙살림 (청원)	매주(또는 격주) 단위로 10여개 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	소비자회원 : 1천여구
	활성화 방안	· 꾸러미 업체간 통합 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 꾸러미 제작, 통합 배송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 학교급식 등 식자재 중심의 기존 사이버거래*를 슈퍼마켓 등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등을 신규 구축
 - POS Mall** 및 무선인터넷 기반을 통한 편리한 구매·결제 기능 지원
 - 현재 공급자 중심의 배송에서 지역단위의 물류체계 구축
 - * 사이버거래 운영현황('12) : 거래액 1.1조원(판매사 4,682개사, 구매사 3,953)
 - ** POS Mall : POS(Point of Sale System,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정산하는 시스템)에서 바로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쇼핑 시스템

□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관계부처 협의)

-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14)을 바탕으로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직거래장터·직매장 인증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지 직거래 실적 포함
 - * 공공기관은 공기업 27개소, 지자체 합동평가는 '특·광역시', '도'까지 포함
- 농산물 직매장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1.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4월, aT), 체계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전개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홍보(3월, 5월) ○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4월) ○ 직거래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5월) ○ 직거래 지원법 연구용역(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홍보(10월) ○ 직거래통합사이트구축(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지원법률제정('14) ○ 대규모직거래장터 10개소 운영('17) ○ 직매장 100개소 운영('17) ○ 사이버거래확대 시범사업 및 본격 도입('14~'16)

3 도매시장 유통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 제고

- ◇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거래 안정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구축
 - 정가·수의매매 확대, 최소출하단위 설정,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등

□ 경매로 인한 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5월) 우수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 * 정가·수의 매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 (수의)으로 물량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경매제의 단점 보완 가능
- * 도매시장 거래비중('12, 청과) : 경매·입찰 79.3%, 정가·수의매매 8.9%, 기타 11.8%

□ 일관 파렛트 유통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출하규모화를 위해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물량 설정
 - * ('13) 품목별 경매단위 분석 및 도입방안 마련 → ('14) 산지교육,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 ('15) 과일 적용 → ('16) 채소 적용
- 비포장 농산물 포장화, 하역기계화, 하역노조 개선 등 도매시장 물류개선 방안 마련(11월)

□ 전문가와 함께 도매시장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실천계획 마련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계획 마련(5월)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 '17년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계획 마련(5월)	○ 품목별 경매단위 분석 및 최소출하단위 설정(9월) ○ 하역체계 개선방안, 최소출하단위 도입방안 등 물류 개선 방안 마련(11월)	○도매시장 최소출하단위 설정 (과일 '15, 채소 '16) ○정가·수의매매 20% 달성('16)

4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 「참여와 합의」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

-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 참여, 수급상황별 대응 매뉴얼 사전 공개

□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4월)하여 품목별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하여 최종 결정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

*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우선 운영 후 확대 검토

□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5월)하고 품목별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정형화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

-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안정대」와 3개의 「위기단계」 설정

* 안정대(band) : 통상적으로 허용(예 : 70%빈도 수준)되는 상·하한선 이내 가격범위

* 위기단계 : 주의(수급 약간 불균형), 경계(상당한 불균형), 심각(현저한 불균형)

- 위기단계별 정부와 관련기관·단체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

-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경계·심각단계 진입시 단계적 개입

□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수급안정 사업에 참여 유도

- 배추·무 산지유통인을 품목조합 또는 법인으로 단계 전환('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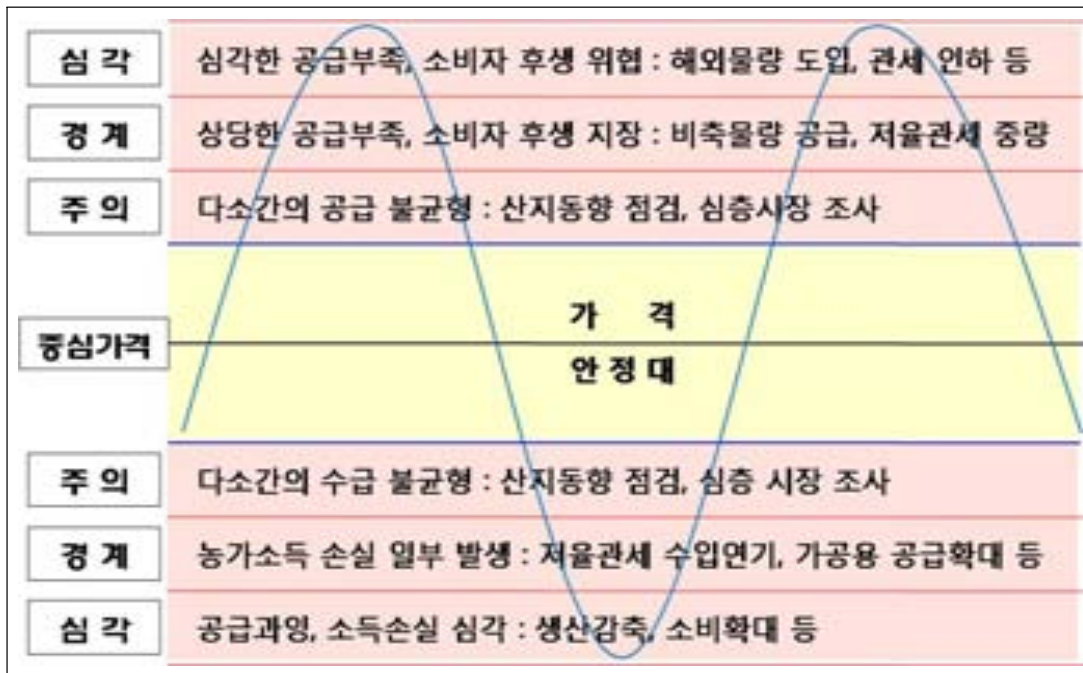
* ('13상) 품목조합/법인 결성 → ('13하) 무·배추 시장점유율 10% 달성 → ('15) 30%

□ 알뜰장보기 정보 제공 등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마련 및 농진청과 관측센터간 작황조사정보 공유로 관측의 예측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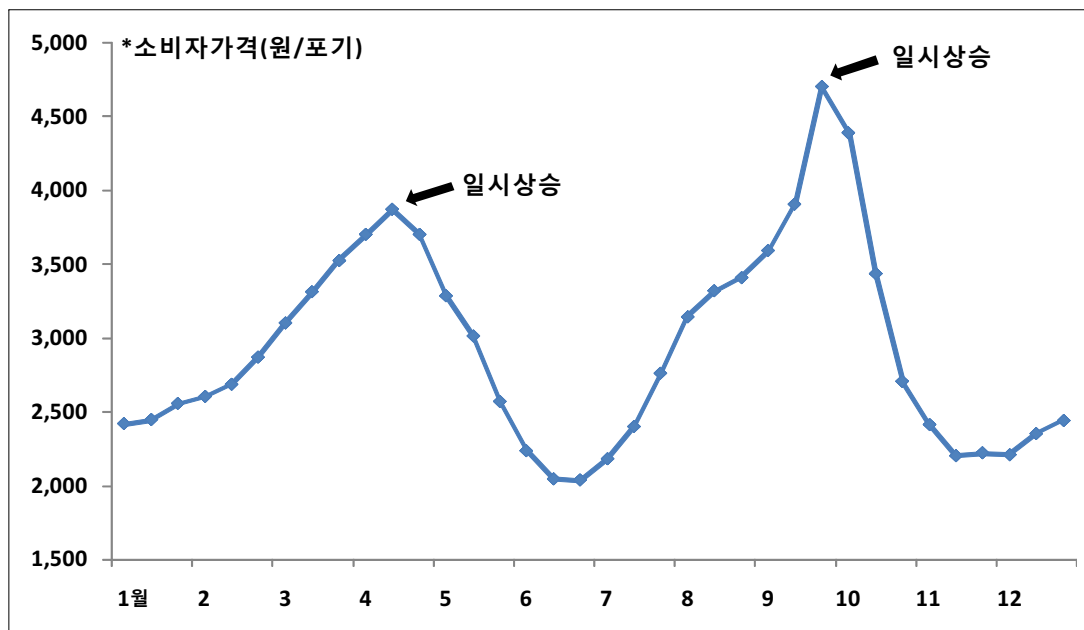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알뜰장보기정보 제공(4월) ○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마련(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고추·마늘 매뉴얼 마련(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절위원회 및 매뉴얼 성과 분석 및 확대 검토(14)

<참고 1> 위기단계별 정책수단(예시)



<참고 2> 배추 작형교체기 가격상승 사례('08~'12 평균가격)



작형	겨울배추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	------	-----	-------	------

5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 지속적인 사례조사·제도개선·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추진

- 공정거래 사무국 운영,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사·홍보 실시

□ '공정거래사무국'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요청 및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 4월부터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 설치한 공정거래사무국 본격 가동(전담 요원 운영)

*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큰 농업법인들의 연합회(190여개사 가입)

- 실태조사(4~9월)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불합리한 조항 개정 추진(공정위 협조)

□ 자율적인 공정거래 정착 노력 확대 유도

- 공정거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

* 공정거래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홍보 추진

-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홍보

- 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구성 : 공정위, 농식품부, aT, 민간전문가, 체인스토어협회, 식품공업협회 등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관련 교육(3월) ○ 공정거래사무국 운영(4월) ○ 자문위원회 개최(6월) ○ 현장 실태조사(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우수업체 선정(10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12월) ○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11월) ○ 자문위원회 개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조사, 홍보 지속(계속)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친환경·경관 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방향으로 추진
 -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급액 : ('12) 128만원 → ('13) 140

□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 지원 추진

- **[전업농]**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IT·BT를 활용한 경영혁신 지원
- **[중소농]** 전문경영체로 육성, 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
- **[영세·고령농]**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원

□ 현행 직불제를 내실화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 **[쌀직불금]**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원/ha(70만원/ha → 80)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 지급단가를 10만원/ha 인상시 농가당 평균 109천원 추가 수령
 - * 쌀고정직불금 : ('12) 70만원/ha → ('13) 80
 - * 쌀 농가당 수급액 : ('12) 76만원 → ('13) 87
 - * '13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고시(5월)
- **[밭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등 7개를 추가하고, 대상 품목 확대, 지목제한 폐지, 지원단가 인상 추진

- 지급대상 품목은 '14년부터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하고, 주요 발작물로 지속 확대
 - * 대상품목 : ('12)19개 → ('13)26 → ('14 이후)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주요 발작물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4월)
- 대상농지의 지목제한을 해제하여 현행 '지목상 밭'에서 '14년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밭'으로 확대

□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 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담보하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제도 도입 검토**

- 보험가입 농가의 당년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을 경우 차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콩 등 5개 품목에 대해 보험도입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3월)

□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 공익·환경형 직불제 개선을 위해 T/F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5월)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보장보험 도상연습 실시(3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4월) -감자 등 발직불 품목 7개 추가 ○ 쌀고정직불금 단가 고시(5월)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향 수립(5월) ○ 공익·환경형 직불제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8월) ○ 발직불제 지목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9월) ○ 쌀고정직불금 및 발직불금 지급(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4) ○ 발직불제 지목제한 해제('14)

2 자연재해 대응 강화

- ◇ 자연재해 사전예방 강화,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지원 현실화
 - 보험 대상품목 확대, 조사기간 단축, 손해평가 전문인력 양성
- ◇ 3대 산림재해별(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 가뭄·홍수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수리시설 점검·관리 강화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

- 전천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을 확대하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추진

* 수리안전답율 : ('12) 56%(541천ha) → ('17) 61%(572)

* 배수개선율 : ('12) 52%(158천ha) → ('17) 60%(183)

- 노후·기능부족 저수지 등 농업기반 시설의 적기 보수·보강

* 시설보강율 : ('12) 42%(2,440개소) → ('17) 53%(3,095)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신속한 손해평가 체계 마련

- 대상품목 확대('12 : 51개 품목 → '13 : 56 → '17 : 66)

*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과수 5개 품목도 '13년 배(시범)부터 '17년까지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받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 전문손해평가 인력 양성·활용 및 평가기법 과학화로 현재 7~10일의 조사소요기간을 3~5일로 단축

* 전문손해평가인력 400명 선발(4월), 교육·훈련을 거쳐 6월부터 피해조사에 투입('16년까지 1,000명 양성)

- 보험업무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관리 전담체계 정비와 함께 보험통계관리기관 지정 등 통계생산·관리체계 구축

* 6월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자연재해 복구지원 수준을 현장에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6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행)
 - 피해산정시 농작물(수확기 과수 등)·가축 피해도 포함시키고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지원
 -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 3대 산림재해별(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 **[산불]** 원인·시기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공중·지상자원을 총 동원한 입체 진화망을 구축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
 - * '17년까지 전국 30분 이내 헬기 출동망 구축(울진·제주 격납고 신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12천명) 확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등 예방사업을 최우선 실시하고, 유사시 주민대피체계 구축
 - * 사방댐/계류보전 : ('13) 785개소/584km → ('17까지) 11,900/8,577
 - **[병해충]** 4대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및 수목전문 진료체계 확충
 - * 4대 산림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 수목진단센터 확충('17년까지 25개소) 및 '나무의사' 제도 도입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 제도개선안 확정(4월) ○ 배수시설 중점관리계획 수립(4월) ○ 영농기 용수공급대책 수립(4월)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3~4월) ○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설(5월) ○ 전문손해평가인력 400명 투입(6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6월)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6월)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고시」 개정(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5~10월)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9월) ○ 과수(배 시범) 종합위험 전환(11월) ○ 생산기반정비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농어촌정비법 개정, 11월) ○ 산림항공본부(김포→원주) 이전(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촌용수개발계획수립('14) ○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14) ○ 나무의사 제도 도입('15) ○ 과수품목 종합위험방식 전환 완료('17) ○ 전문손해평가인력 1,000명 ('16) ○ 대상품목 6개로 확대('17) ○ 제주 격납고 신축('17) ○ 산림헬기 3대 확충('17)

3 가축질병 대응

◇ 국내외 방역·검역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 '14년 구제역 예방접종청정국 지위 회복* 및 AI 청정국 지위 유지
* (4월~) 비발생시 요건 충족 및 보고서 제출 → (10월) OIE 심의 → ('14.5) 정기총회 인증
- 선진국 수준의 질병 대응체계 확립 위한 AI·구제역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4월)

□ AI·구제역 등 예방을 위한 소독·예찰 강화

- 축산시설 일제소독(매주 수요일) 및 전화예찰(월2회이상) 실시
-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08명), 중앙기동점검반*, 농협 공동방제단(400명) 등을 통해 소독·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 점검
* 16개반 32명, 검역검사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 관계자로 구성
- 지자체별 방역실태 평가 후 특별포상·교부금 차등(안행부) 지급

□ AI·구제역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에 대한 특별관리(14일간)를 실시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질병검사 확대

- * (1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 (2차) 필요시, 시·도 시험소가 임상예찰
- * 해외발생 현황 : (구제역) 중국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AI) 호주, 중국, 베트남 등

□ (초동대응태세 유지)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12.10~'13.5)으로 정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 대비

-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시군 무작위 선정).
-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하고, 시군별 기동방역기구 상시 운영(13천명)

□ **구제역 청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백신접종 관리 강화**

- 백신담당 실명제공무원(22천명)을 통해 **농가별 접종실태 점검·지도**(월1회이상 농장방문, 주1회이상 전화·문자발송)
-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과 자체생산을 위한 **백신연구센터 설립 추진**
 - (1단계) 항원 수입 후 완제품 국내제조 및 백신연구센터 설립('13~'16)
 - (2단계) 항원 자체개발 후 국내 백신생산('17년이후)

□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방역시설 의무화,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축산업 영위 가능토록하는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시행
 - * ('13.2.23) 기업농가 → ('14) 전업농가 → ('15) 준전업농가 → ('16) 50㎡이상 농가
- **돼지이력제(12월)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 시행**
- 정부의존형 수동방역에서 농가 자율방역으로 전환을 위하여 **축종·축산시설별 차단방역 매뉴얼*** 제작·보급('13~'14)
 - * 21개 축종(한우, 젃소, 돼지, 닭 등) 및 6개 축산시설(부화장, 도축장 등)
 - * 캐나다 : 축종별 농가 차단방역 매뉴얼, 영국 : 자율형 건강농장 플랜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 AI·구제역 재발방지 종합 대책 마련(4월) ○ 특별방역기간 운영(~5월) ○ 구제역 청정국 추진 TF운영(3월~) ○ 가상방역훈련(5월)	○ 특별방역기간 운영(10월~) ○ 구제역 청정국 추진 TF운영(연중) ○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12월) ○ 구제역 혈청검사(연중)	○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추진('14) ○ 가상방역훈련(연중, 연 2회 이상) ○ 구제역 청정국 추진 TF운영(~'14.5)

4 농기계·비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 농기계 공동이용, 에너지절감시설 등으로 투입비를 절감하고, 담합 방지, 농자재유통센터 설립으로 농자재 가격 안정 도모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농업인 편의성 제고

○ 지자체 발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5년까지 400개소 지원하고 발농업 기계화율을 '17년까지 65%로 확대

* 지자체 임대사업소 : ('12) 250개소 → ('13) 293 → ('15이후) 400

* 발농업 기계화율 : ('12) 50.1% → ('13) 53 → ('15) 60 → ('17) 65

○ 농협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을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 논 농작업 대행면적을 '1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30%로 확대

* 농협 농기계은행 : ('12)692개(전국 지역농협의 80.4%) → ('13)700(81.3) → ('17)800(92.6)

* 논 농작업 대행면적 비중 : ('12) 벼 재배면적의 23%(196천ha) → ('13) 25 → ('15이후) 30

○ 지자체와 농협 임대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불편 해소

- 시·군별 임대사업 통합 콜센터 설치(3~6월)로 농업인 편의 도모

* 지원조건에 통합콜센터 설치 반영, 평가(12월)를 통해 미흡 시군 지원 중단

○ 50ha 이상 면적의 들녘별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공동이용 촉진

- 들녘별 경영체를 중심으로 '15년까지 공동 육묘 30%, 병해충 공동방제를 50%로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

* 들녘별 경영체(누계) : ('12) 163개소 → ('13) 213 → ('15) 353 → ('17) 500

* 공동육묘/공동방제 비율(%) : ('12) 25/45 → ('13) 26/47 → ('15) 30/50

* 한그루 영농조합법인(320ha 경작)은 공동육묘·공동방제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 7.5%, 농작업 경영비 6.5% 절감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시설농업 유류에너지 의존도를 '11년 91%에서 '17년 80%까지 감축

	'12년	'13년	'17년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 냉난방, 목재펠릿 등)	830ha	1,105	2,357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2,780ha	3,545	10,000

* 에너지 절감률 : 지열 78%, 다겹보온커튼 46%, 수막시설 67%, 보온덮개 60%

□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장기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마련(4월)

○ '농기계 종합유통센터'('13~'14) 설치로 농기계 수출 촉진

* 농기계 수출목표 : ('12) 746백만불 → ('15) 1,000

○ 에너지절감형 농자재, 융복합 농기계 R&D 지원('12 : 636억원→'17 : 1,000), 친환경 비료·농약 개발 등을 통한 수입대체 방안 마련

○ '15년까지 3개 권역(중부·호남·영남)에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유통단계 축소(4~5단계 → 3~4단계)

○ 농자재업체의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5월, 공정위 주관)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콜센터 설치(3~6월) ○ 신재생 및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3월) ○ 농자재산업 발전 대책(4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유통센터 설치 이행 상황 점검(7월) ○ 신재생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제도 개선(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개정('14, 공정위) ○ 농자재유통센터 설립('15)

5 FTA 보완대책 추진

- ◇ 한미 FTA 등에 대응하여 FTA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농업인 여론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대책을 지속 보완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보전 추진

* 생산면적(마리)×(기준가격-당년가격)×90%, 폐업면적(마리)×3년치 순수익액

- FTA 이행지원센터(KREI)의 조사·분석(3월)과 지원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보전대상 품목 고시(5월)

□ 금년부터 보완대책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

- FTA 대책 성과보고서(매년 5월) 및 투융자계획(매년 9월) 국회 제출

□ 기 발효 FTA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하여 보완대책 개선 추진

- 매월 FTA로 국내 영향이 큰 42개 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국내 가격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신속 대응

- 농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 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 발굴*

* '13년에는 첨단온실신축,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등 4개 사업 신규 반영(3,354억원)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 '17년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개최(4월)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고시(5월) ○FTA 대책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5월)	○FTA투융자계획 국회제출(9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12월)	○FTA 피해영향 조사분석(매년 3월) ○FTA 대책 지속 개선(연중)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1 생활여건 개선

◇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주여건 실현

□ [기초 인프라]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 읍·면 정비(80개소) : 공공서비스기반 확충 등 중심지 기능 강화
 - 농촌공원(11개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
- 마을 개발(270개소) : 경관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역점
 - 빈집·슬레이트 처리, 공동생활 홈(4개소) 및 공동급식시설(240개) 조성 등 마을환경을 종합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신규 추진(4개소)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법사위 소위 계류)
 - 범죄예방 등 마을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지원('13)
- 지역개발 정책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 (읍·면, 마을 등) 수립 의무화 추진

□ [주거·교통] 경관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량,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주택개량 용자 지원 확대('12 : 8천동, 4천억원 → '13 : 10, 5)
 - 재능기부와 연계,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 추진(410개소)
 - 도시자녀가 노후한 부모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소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예약형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법적근거 마련(국토부) 및 관련 농촌공동체회사 지원(농식품부)

□ **[교육·보육]** 농촌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지역주민·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13 : 4억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440개)에 **보육시설 설치**(36개소)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44천명, 1인당 11만원/월)

□ **[의료]** 농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13년 신규 5개소, 15억원)
- 보건소 등 시설현대화(136개소) 및 기능강화(231개소) (복지부)

□ **[문화]**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44억원)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활성화

□ **[경관]** 농촌다움 보전을 위해 농업유산지정 추진

- 국가농업유산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
* 대상 유산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 '(가칭) 다원적 자원의 보전관리법' 제정안 마련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성학교 1차 지정(2월) ○ 주택개량, 리모델링, 안전보건센터, 마을축제, 아이돌봄센터 사업자 선정(3월) ○ 국가농업유산 FAO GIAHS 등재 신청(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지원(7월~) ○ 농촌 집 고쳐주기(7~9월) ○ 국가농업유산 지정(10월) ○ 농촌 주택 세제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12월) ○ (가칭)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연구용역 및 입안(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 세제개편안 입법 추진('14) ○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14) ○ 농촌 인성학교 지정('17까지 350개 지정) ○ (가칭)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제정('14)

2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고령농·다문화가족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13년 하반기,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 전업농 및 가족·고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임의가입 방식
 - 사망 시 보상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 * 사망 시 유족급여 : (‘12) 80백만원 → (‘13) 90 → (‘14) 100(산재보험 수준)

-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방법 변경**(공시지가 → 감정평가가)
 - * ‘12년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 평균 지급액 : 81만원/월
 - 고령농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2 : 930개소/12일 → ‘13 : 1,400/24일)
 - 질병·사고 농가(‘12년 75세 이하 → ‘13년 80)에 **영농도우미 지원**(10일)

-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농촌의 특성 반영
 - 재가복지, 돌봄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점검·보완

□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15천명, 58억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등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 ('12) 924억원(230천명) → ('13) 1,059억원(257천명)

□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 지원 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 영농교육(600명), 멘토와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700명) 등으로 구분 실시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1,200명)
- 지역농협을 활용,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여성대학' 운영(400명)
 -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600명)
 - * 교육 수료시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면제 혜택
-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수료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210호)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1월) ○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농촌복지실태 조사(4~12월) ○ 결혼이민 대상 영농교육 및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4월~12월) ○ 농지연금 평가방법 관련 연구용역 실시(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개선안 관계부처 협의(7월)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 국회 제출(10월) ○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정 방법 변경(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14) ○ 기초생활보장제 개선('14)

3 농촌 활력찾기 운동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높이는 범국민운동 전개

-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지원조직 확충 및 역량강화 추진
 - 현장활동가 육성(1천명) 및 광역단위 활성화지원센터 설치(9개소)
 - 주민 스스로 자원발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현장포럼 실시(234개소)
- 상향식 마을개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지속가능 농촌마을만들기 지원법’ 제정 추진(‘13)
 -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마을협약제 등 도입
- 농촌에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농촌재능기부운동 본부’를 구성(6월), 범국민 캠페인 전개
 - * (‘12) 재능기부자 31천명, 1천여 마을 기부 → (‘13) 50천명 확보, 2천개 마을
 - 봉사단체, 기업체 및 지자체 등과 연계(‘12 : 38개 단체 → ‘13 : 45개 단체, 10개 지자체)
- 강소농, 마이스터 졸업자 등을 마을발전을 이끌 핵심리더 후보군으로 선정(43천명), 역량강화 모델 정립 및 프로그램 마련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인증제 도입(3월) ○ 현장포럼대상마을 선정(3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구축(4월) ○ 농촌재능기부운동본부 구성(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도사지본 유치 대책 마련(9월) ○ 현장활동가 육성(12월) ○ 농촌마을만들기 지원법 국회 제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나눔 페스티벌(‘14) ○ 현장활동가 육성(‘17:24천명) ○ 색깔마을 육성(‘17:5천개) ○ 재능기부자 확보(‘17:20만명)

4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 ◇ 농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경영체 활성화
- ◇ 귀농·귀촌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농촌활력 창출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공동경영체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육성
 - * 발전가능성이 큰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선정('13년: 54개소)하여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및 컨설팅 등 지원(15억원, 개소당 50백만원)

< 사례: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

- ◇ 양평군 내 21개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교육·상담·홍보·마케팅 등)
 -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고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도시민 체험객 증가 : ('06) 535명 → ('12) 4만명
 - '12년도 매출액 11억원('11년 대비 28% 증가)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3 : 72개소)
 -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및 현장모니터링, 재정 일자리사업비(고용부·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 사회적기업 인증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고용부 지정 전문지원기관)
-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상반기)

□ 귀농·귀촌인('11년 현재 10,503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정착 단계별 One-Stop 맞춤형 정책 서비스 지원

- (관심단계)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

* 상담실적('12년말 기준) : 19,911건(전화 18,085, 방문 1,093, 인터넷 733)

- (교육단계)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창업·영농 교육

* 귀농귀촌 교육 지원 : ('12) 13억원, 1,600명 → ('13) 21억원, 3,000명

- (정착단계) 농지·주택자금 등 창업 및 세제지원

* 농지·주택 용자지원(3%, 5년거치 10년상환) : ('12) 600억원 → ('13) 700

○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 모든 귀농·귀촌 교육과정(29개 기관, 36개 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융화합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기존 주민이 주관이 되어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신규 지원

* 마을회관 초청, 집들이, 우수사례 홍보자료 제작·보급 등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제1차 지정(3월) ○ '13 귀농귀촌 교육실시(3월~) ○ 공동체회사 워크숍 및 실태조사 실시(4~6월) ○ 공동체회사 및 협동조합 교육과정 개설(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제2차 지정(7월) ○ 공동체회사 경영컨설팅(7~11월) ○ 농업·농촌분야 공동체회사 및 협동조합 활성화방안 마련(8월) ○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9월) ○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10월) ○ 우수사례집 발간(12월) ○ 채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매년)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 ○ 지자체 귀농귀촌 표준조례 제정·확산('14)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로 자급률 제고

◇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자급률 제고('11 : 22.6% → '15 : 30)

-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66만ha)의 경작 확대 최대한 유도

□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 최대한 보전

- * 전체 농경지 면적 : ('68) 2,319천ha(역대 최고치) → ('12) 1,730(△25.4%)
-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최소한 '20년 기준으로 165만ha 필요(농촌경제연구원, '09년)
- 우량농지 전용 억제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축소 조정**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연구용역(3~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12월)
 - * 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를 부과, 규정에 따라 50~100%까지 감면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 축소 조정 검토
 - * 운동시설 등 농업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의 신규 설치 제한
- **농지매입비축 확대**('12 : 1,921ha → '13 : 2,921 → '17 : 6,921, 누계)
- 농업진흥지역 논·밭 고정직불금 우대 확대(5월 단가 확정·고시)
 - * ha당 고정직불금(진흥/비진흥) : ('12) 746천원/597 → ('13안) 851천원/681
- 유휴 농지를 '14년부터 농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원 추진
 - 전국 유휴농지 실태조사 실시(4~10월),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12월)
 - * 유휴농지 규모 : 25만ha 추정(KREI, '07), '11년 7천ha 유휴농지 발생(통계청)

- '17년까지 동계 유희 논(이모작가능 66만ha 중 29만ha) 전부 재배 유도, 자급률 5%p 제고 효과 기대
 - * 동계작물 재배면적 : ('11/'12) 365천ha → ('13/'14) 450 → ('17/'18) 640
- '13년 겨울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부터 직불금 지원('14)
 - 발농업직불금 또는 고정직불금 가산지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발기반 정비 등 농지이용 범용화계획 수립(12월)
 - 발 기반정비 단지규모 완화(30ha→10) 및 대상면적 확대(110천ha→180)
 - 동계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 범용화사업(광특회계) 확대
 - * 사업 면적 : ('12) 146ha → ('13) 173ha → ('17누계) 2천ha
- 50ha 이상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을 기존 하계 “쌀”에서 동계 “밀·보리”까지 확대 추진(12월, 50ha 이상 들녘 : 2,832개소)
 - 직불금 수급권을 들녘별경영체·공동체회사 등에도 부여하고, 개별농가보다 우대하는 방안 검토
- 위기사 대응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 대상도 현행 쌀에서 주요양곡(밀·콩)으로 확대(9월)
 - 쌀은 공공비축 물량(72만톤) 외 ASEAN 비상 원조용 10만톤 추가 비축 추진('14)
 - 밀은 10천톤, 콩은 5천톤을 '14년에 첫 매입·비축하고, '17년까지 소비량 5% 수준(수입산 포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비축 추진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농지 실태조사(4월) ○ 쌀 고정직불금 단가 고시(5월) ○ 양곡관리법 개정(3월) ○ 농지보전부담금 연구용역(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농지 활용계획 수립(12월)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농지법시행령 개정, 12월) ○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9월) ○ 농지이용 범용화 계획수립(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콩 공공비축 매입('14) ○ ASEAN 원조용 쌀 비축('14) ○ 들녘별경영체 대상 확대('14) ○ 유희농지 복원('14)

2 해외에서 안정적 곡물 조달

◇ 해외 농업생산 확대 및 곡물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곡물도입 역량을 확충하여 곡물자주율을 제고

○ 곡물자주율 : ('11) 24.6% → ('15) 55%

□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대응능력 확충

○ 밀·콩·쌀·옥수수 4개 품목의 “국제곡물 가격전망 모형”을 해외 연구기관(FAPRI)과 공동으로 개발(7월), 시범 운영

- 모형을 바탕으로 “분기별 미래 선물가격지수” 개발(12월)

* 기존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선물가격, 재고율 전망치 등을 이용하여 현재 또는 과거 1개월 전의 가격 수준을 제시하는 구조로 실효성이 낮아 운용 중단

○ 선물가격지수를 바탕으로 단계별 **경보발령시스템** 운용('14)

- 곡물시장 선물가격지수의 호전·악화 전망에 따라 **5단계 경보발령**

- 경보 등급에 따라 할당관세·TRQ물량 조정, 곡물업체 재고물량 확대 권고, 농가 경영비 지원 등 사전대응방안 마련

□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 및 해외 곡물 국내반입 활성화 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 확보 목표 : ('12) 218천톤 → ('13) 530(143%↑) → ('17) 1,280

○ 투자재원을 정부 융자금(연리 2%) 외에 농식품 모태펀드, 수출입 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제3국 합작투자 등으로 다각화

* 한-UAE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합작투자 MOU 체결(5월)

- 해외 농장에 필요한 SOC(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구축에 유·무상 ODA를 연계 지원하여 민간 부담 완화 및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 필리핀 해외농업개발 진출과 연계한 농촌개발 ODA 지원('11~'13)
- 해외생산 곡물의 국내반입 확대를 위해 **수입관리제도 개선**
 - 해외농업개발협회에 옥수수 할당관세물량 수입추천권 부여(1월), 식용콩 수입권 공매방식 도입(3월)
- 진출지역 다변화, 곡물매입비 지원, 지원품목 확대, 조방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5월)
- 국내 실수요업체(제분·사료), 유통업체(해운사·종합상사) 등과 합작 곡물기업을 설립, **해외 곡물유통망** 지분 확보 및 곡물도입 추진
 - * 해외 곡물유통망을 통한 도입량 : ('13) 126만톤 → ('15) 215 → ('17) 306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 곡물유통망 확보방안 마련(4월)
 - * 미국내 곡물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합작기업 설립 협상 중('12.10, MOU 체결)
- 해외곡물유통망을 활용, 사료용 밀·콩·옥수수 해외비축 검토('14)
-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 유통망 구축을 통한 곡물확보 가능량을 검토하여 곡물자주율 목표치 달성가능성 점검(7월)
 - * 국제곡물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곡물자주율 목표치 재설정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수입관리제도 개선(3월) ○ 해외곡물유통망 확보방안(4월)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방안(5월) ○ 한-UAE 해외농업개발 합작 투자 MOU 체결(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 가격 전망모형 개발(7월) ○ 곡물자주율 추진여건 분석·점검(7월) ○ 분기별 미래선물가격지수 개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등급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14) ○ 사료용 곡물 해외비축('14)

3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 ◇ 친환경농산물 · GAP · HACCP 등 안전관리체계 내실화
- ◇ 인증 · 표시제 관리 강화로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 유통기반 강화

- 광역 친환경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 지구(10ha 이상) 조성 확대
 - * 광역단지/지구 : ('12) 42개소/1,076개소 → ('13) 44/1,112 → ('15) 60/1,300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12~'15, 나주)

□ 농가의 GAP(농산물우수관리) · HACCP(안전위생관리기준) 적용 확대 등을 통한 유해물질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집단인증제 도입('12.7)에 따라 농협 등의 생산 · 출하조직을 GAP 선도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GAP 시설도 확대
 - * GAP 참여농가/시설지원: ('12) 40천호/718개소 → ('13) 45/800 → ('15) 120/1,000
- 소 · 돼지 · 닭 등 주요 축종별 'HACCP 표준모델' 보급* 및 집유업의 HACCP 적용 의무화 추진(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 주요 내용 : 동물약품 휴약기준 준수, 주사침 잔류 확인, 원유냉각 보관 등

□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강화

- 상추 등 다소비 품목(54개) 및 인증농식품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12 : 80천건 → '13 : 84)
- 폐광산(89개소)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2,511개소) 주변 농경지 모니터링 강화('12 : 5,600건 → '13 : 8,200)

- 학교로 납품되기 이전 사전 안전성조사* 실시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4월, 40개) 등 추진

* 급식단계 잔류조사('12 : 6,500건 → '13 : 7,500) 외 급식 이전 조사('13 : 4,500건) 신설

□ 소비자 안심 제고를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 강화

- 적정 사육밀도 등 동물복지형 축사환경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6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정)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육우 및 젖소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해서 '삼진아웃제' 도입(6월)

* 위반행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년간 위반사항 3회 발생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 농산물 표준규격품 외 포장·유통 농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1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현행) 표준규격품은 의무표시(전체 농산물의 80%) → (개선) 전 농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농산물명, 산지, 중량, 생산연도, 생산·판매업자, 영양표시(권장) 등)

□ 수입량 및 식품 소비량 증가 고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 ('12) 쇠고기, 쌀, 김치 등 12품목 → ('13.6) 염소고기 등 4품목 → ('14) 콩(두부) 등

- 커피류(4종), 오디·빵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6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고시 개정)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대('12 : 6.8천명 → '13 : 8 → '17 : 10)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제 고시개정(6월) ○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6월) ○ 동물복지 돼지농장 인증제(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9월) ○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 안전성 조사 강화(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유업 HACCP 도입('14)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14)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4~)

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영양 정책 강화

◇ 국민 건강·영양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영양정책 추진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연계한 식생활 문화 확산

- 교육기관별로 상이한 식생활교육 내용 표준화 및 체계화 추진
 - 학생, 교사, 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식생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4월)
 - 식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평가제 도입
- 지자체의 식생활교육 참여 활성화 등 추진여건 개선
 - 지자체 조례제정(13 시도, 9 시군구) 및 식생활 교육사업 신규 지원(15.5억원)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5월), 지역(진주) 식생활박람회 신규 개최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식생활 안내서 및 조리법 등 개발·보급(9월)

□ 취약계층 식생활·영양문제 해소 방안 강구(관계부처 합동)

- 농촌 노령인구 등 영양 취약계층 실태 조사 실시(6월)

□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자와 농촌의 연계 강화

- 지역 영농법인, 지자체 및 학교 간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촉진
 - 계약재배 등 농업과 연계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신규, 220억원)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협의체 운영(4월) ○ 취약계층 실태조사(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내서 등 제작(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및 학교급식 정책 지원 확대('14~)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1 국민공감대 형성

◇ 정책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신뢰 농정 추진

-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농정방향 설정
 - 정부부처·학계·언론계·소비자·생산자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도 위원으로 참여
 - 농업부문 대기업 참여·물가 등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방향설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논의
 - 논의 결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에 반영(5월)
- 지방농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 * 종합계획 수립시 시군 농어업회의소('12년까지 8개소) 의견을 적극 반영
-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드백 강화
 - SNS(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책공모 실시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감 농정추진 위원회 구성·운영(3~5월) ○ 정책공모(3~4월) ○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 마련(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농정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11월) ○ 시·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지침 마련(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개정('14)

2 투융자 점검평가 및 성과관리

◇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 반영

- (선정) 사업추진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자금지원의 투명성 제고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자료 등을 활용, 주업농 중심 경쟁력 지원 등 지원대상의 적정성 확보
 -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및 지역설명회 개최
 - 보조금 이력관리, 전체 보조금 지원대상자 홈페이지 공지
 - 중복지원 방지 등 이력관리를 위해 경영체 DB, 공간 DB, 농식품 R&D 정보시스템(FRIS) 등 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체 DB는 직불제 사업위주로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
 - 공간 DB는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적용, 각종 시설관리 분야로 확대
 - 기 구축된 R&D DB는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 (점검) 현장점검·교육 강화 및 신고센터의 한시 운영
 - 산하·유관기관과 현지합동 확인·조사 정례적 실시
 - 농식품부 내에 부당수령 신고 접수처 설치·운영
 - * 신고포상금제 시행(근거 : 보조금법 제39조)을 위한 검토
 - 중요재산(3천만원 이상) 등기부 열람, 담보권 설정 확인 등 지자체 대상 교육 강화

□ (성과평가) 분야별·사업별 성과목표 체계를 재점검하고 예산 편성·집행과 연계

- 농어가 소득향상,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 분야별 정책목표의 주지표, 단위 정책·사업별 보조 지표 등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이 어려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일몰
 - * 주지표 예시 : 농가소득 향상(도시근로자 가구대비 농가소득)·경쟁력 제고(농림업 부가가치)·농업인복지(만족도) 등
- 자체 정책·사업 평가와 함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층평가 병행 실시
- 일정 규모이상 사업(예: 500억이상)은 1% 수준 평가예산을 반영, 계획수립·사후관리 등 전 과정 평가 실시(기재부 협조)
-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성과를 DB화하여 과학적 정책관리 도모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스템 개편(4월) ○ 현지실태 조사(4월) ○ 접수처 설치(4월~)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성과 평가(7월~) ○ 농식품 통합 D/B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7월~) ○ 평가성과 D/B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평가관리 체계 정착('14~) ○ 농식품 통합 D/B 고도화('14~)

3 기초통계 확충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규통계 개발 및 농식품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 여건변화에 맞게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보완

- 유기 농어업 실태, 말 산업실태, 외식산업 기초, 김치산업현황, 농어촌 삶의질·에너지·생명산업 관련통계 등 생산
 - 경영체 등록제, 쌀 직불제 등 기존 DB를 분석·가공, 신규통계 개발
 - 가축마리수, 작물생산량 등 기초통계 불일치 해소 방안 마련
 - 작물의 재배시기별 조사 세분화 등 생산통계의 품질 개선
- * '12년 : 고랭지 작물면적 2회 → 3회, 행정보고통계 표본조사화(봄배추 등 3개)

□ 성과측정을 위한 유형별 통계 생산

- 연령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별 농가소득 등 유형별 구분

□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농식품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통계청 생산통계, 행정자료 등을 통합한 DB 구축
 - 통계청 조사통계 원시자료, 경영체등록 자료, 쇠고기이력추적제 등
- 검역검사본부, 농진청, 농유공, 농경연 등 관련 DB 연계 추진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통계 생산방안 마련(4월) ○ 농식품통계 발전방안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통계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종합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 수립('14) - 종합DB 구축('15~'17)

IV. 부처 협력과제

1. 일자리 창출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
3. 식품안전
4. 농공상 융합 협력체계 강화

1. 일자리 창출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 농식품 산업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6월)
 - 귀농인·후계농 창업 지원, 6차 산업 활성화, 농촌 공동 경영체 지원, 식품·농자재 등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등
 - * 체험마을 사무장, 숲가꾸기, 산불감시요원 등 녹색일자리 사업 확대 병행
-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
 -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특례 조례 제정 확산 등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제 정비(식약처)
 - 농공상 융합 기업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및 R&D·홍보·자금지원 등 농공상 융합을 위한 공동 지원 사업 확대(중기청)
 - 도시 어린이 정서함양 등을 위한 농촌 인성학교 지정 및 체험학기제 도입(교육부)
 - 농촌 특성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개선(고용부)
 - * (예시)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에 농촌의 계절적 고용여건 반영 등
 - 농산업 인턴·해외농업인턴 규모 확대 협의(고용부, 교육부)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상 융합 육성 지원단 공동 T/F 구성(5월) ○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상 융합기업 성과평가 및 우수업체 발굴(11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14) ○ 규제개선, 제도보완(계속) ○ 산림 일자리 관련 법령제정 및 조직 정비('14)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

◇ 삶의 질 위원회(위원장 : 총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농촌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삶의 질 특별법」 제정('04.3), 위원회 구성·운영('04.12)

*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11개 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전문가(9)

○ 범정부적인 삶의 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수립('05.4)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당초 계획 20.3조원 대비 113%)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 수립('09.12)

-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 삶의 질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추진

- 위원회 사무국의 총괄·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사무국 설치 추진(총리실 또는 농식품부) 및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실시(분기 1회)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시행령 개정, 8월)

* (현행) 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8개부문 → (보완) 안전 추가

- 농어촌영향평가제 활성화 위해 사전 의무평가제로 전환 검토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3~4월) ○ 전문지원기관 지정(4월) ○ 삶의 질 위원회 개최(4월) ○ 전문가 토론회(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토론회(7월, 10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8월) ○ 농어촌영향평가제 심층평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기준 수정 보완('14)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15~'19) 마련('14)

3. 식품안전

◇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 강국 구현

-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되, 생산 단계의 집행 기능은 농식품부로 위탁
- 효율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총리실(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약처) 및 관련기관(교육부, 관세청)과의 상설 협의체 구성(4월)
 - * 식약처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3월)과 연계, 연 5~6회 협의회 개최
 -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 매뉴얼, 농촌 현실에 맞는 식품관련 규제 등 협의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정보의 실시간 생산지 추적조사·차단 네트워크 구축(12월)
 - * 도매시장 부적합 사례(식약처) ↔ 생산자(법인) 출하중단(농축산물)
 -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식품종합정보망 구축, 소비자 알권리 향상(9월)
 - 식품 안전성 외 식생활·영양·가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제공시스템(푸드나라)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연계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 상설협의체 구성(4월) ○ 정보공유 구축 협의(연중)	○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 ○ 부적합 정보공유 네트워크(12월)	○ 협의회 운영(연5~6회)

4. 농공상 융합 협력체계 강화

◇ 농식품부-중기청간 협력체계를 통한 중소 식품기업 육성

- R&D, 교육, 컨설팅 등 정부정책 통합 운영으로 성과 제고

□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중소기업청간 협력체계 구축('10.7)

- 양 기관 직원 교환근무 실시, 현장평가 및 기업 설명회 등 공동 수행
- 당초 목표대로 '12년까지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300개소 선정 완료

□ 관계기관 공동 T/F 구성, 공동사업 수행으로 협력체제 강화

- 농공상 융합 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공동 T/F 운영(5월)

-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도보완 등 추진

* 참여예정기관 : 농식품부, 중기청, 유통공사,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매년 합동으로 현장점검(7월) 및 지원대상 기업평가 실시(11월)

-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 시상, 부실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R&D, 교육, 자금지원 등 공동지원 사업 확대('13~'17)

* ('12) 10사업, 467억원 지원 → ('13) 25, 600 → ('17) 40, 1,000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농공상 기업연합회 결성 지원

<실천계획>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지원(4월) ○ 농공상 융합 육성 지원단 공동 T/F구성(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청과 공동 현장점검(7월) ○ 하나로마트 시험판매(8월) ○ 성과평가, 우수업체 발굴(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교육, 자금지원 등 공동지원 사업 확대(계속) ○ 규제개선, 제도보완(계속)

V. 당면 현안

1. 쌀 목표가격 재설정
2.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3. 사료가격 안정 대책
4. FTA 추진동향 및 대책
5. 봄철 산불방지 대책

1. 쌀 목표가격 재설정

◇ 쌀농가 소득안정 장치인 쌀 목표가격을 170,083원/80kg에서 **174,083원/80kg**으로 4천원(2.4%) 인상

* ha당 214천원 쌀 소득 증대 효과,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 수취금액을 최소 166천원/80kg(목표가격의 95%) 수준 보장

□ '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시 변동직불금(하락분의 85%)을 지급하는 직불제 도입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수확기 산지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기존 쌀 목표가격(170,083원/80kg)은 '05~'12년산까지 적용하고 '13~'17년산 5년간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 필요

* 새로운 목표가격은 기존 목표가격에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산출(쌀소득보전법 시행령 제6조)

□ 쌀 재배 농업인은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농식품위 계류)

○ 법 개정안은 현행 목표가격에 지난 8년간 물가상승률(26.8%), 생산비 증가분 반영 등을 포함(200,218원~217,719원/80kg 수준)

* 목표가격 217,719원/80kg, 산지쌀값 174천원 가정시 변동직불금 1조 1,512억원 소요

□ 현행 법 규정에 따른 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4,083원/kg)을 마련(2월), 국회 제출(4월) 추진

* 변경절차 : 정부안 마련(2월)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2.6~8, 가결) → 국무회의(4월) →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 다만, 국회의 목표가격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정부내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

2.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 농업인·생산자단체의 공급량 감축 및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 수요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

□ 공급과잉, 소비부진으로 소·돼지가격이 낮은 상황

○ 소는 '10년까지 가격호조가 이어지면서 사육마리수 증가 등으로 '11년부터 지속 하락, **큰수소가격은 평년(548만원) 대비 13% 낮은 수준**

* 큰수소가격 : ('10.3) 634만원/600kg → ('11.3) 496 → ('12.3) 540 → ('13.3월상순) 477

* 사육마리수 : ('09) 264만마리 → ('10) 292 → ('11) 295 → ('12) 306

○ 돼지는 구제역('11년 332만 마리 매몰) 이후 생산기반 회복과 생산성 증가로 가격 하락, 비수기(1~3월)를 맞아 **평년(33만원)대비 27.3% 낮음**

* 돼지가격 : ('10.3) 30만원/110kg → ('11.3) 50 → ('12.3) 33 → ('13.3월상순) 24

* 사육마리수 : ('09) 959만마리 → ('10) 988 → ('11) 817 → ('12) 992

□ 생산자단체와 함께 공급감축과 소비촉진 지속 추진

○ **암소 20만마리('12.1~'13.5) 및 모돈 10만마리 자율감축('13.3~10), 출하체중 자율 감축(115kg → 110) 등**

* 어미가축 감축 실적('13.3.13일 기준) : 소 15.8만마리(장려금 8.4, 자율 7.4)

○ 농협매장을 통한 **할인행사, 쇠고기 군납** 등을 통한 수요 확대

○ **관측자료 발간주기 단축(3개월 → 1), 관측모형(KASMO) 개선** 등 축산물 수급예측 기능 강화

3. 사료가격 안정 대책

◇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 부담 완화 및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2.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7월) 299→(8월) 316→(10월) 295→('13.2) 278
- 국제곡물가격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어 '13년 상반기 국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KREI)
- 축산단체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요구하며,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 중(4건, 상임위)
 -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농가참여 저조 및 사료업체 부담금의 사료가격 전가 우려 등으로 실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 김영록·홍문표 의원안: 총 기금보전액 21,269억원, 정부부담액 8,508(총액 중 40%)
- 기금 도입보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료가격안정방안 강구
 -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신규 지원('13 : 1,700억원) 및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연장('11말 → '14말)
 - * 향후 사료가격 급등시 특별구매자금 한시적 지원 검토('08년 1.5조원 지원 사례)
 -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 확대(22개)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12 : 600억원 → '13 : 950)
 - 조사료 공급 확대('12 : 재배면적 27만ha → '13 : 35), 축산물등급제 개선(체지방기준 하향 조정 등) 등 사료급여량 절감 추진

4. FTA 추진동향 및 대책

◇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를 신중히 추진

- 한중 FTA 등 협상에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고려

□ 국가경제적 실익을 판단하여 FTA 협상을 추진하되,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전략으로 대응

- (한중 FTA)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 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산물에 우선 배정

* 한중 FTA는 2단계 협상구조를 채택, 1단계는 개별품목의 논의없이 상품을 일반품목군(10년내철폐), 민감품목군(10년초과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부분철폐 등)으로 구분하고 각 품목군 비중을 결정

- (한개/한호주 FTA) 쇠고기 등 잔여쟁점품목의 양허 수준 등은 전체협상을 고려하여 탄력 대응하되 우리측 입장 관철 노력

- (한중일 FTA, RCEP*) 한중 및 한일 FTA** 협상 추진동향, 한ASEAN FTA의 기개방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6개국이 추진중인 광역 FTA

** 한일 FTA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중단되어 있으며, 일본은 협상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

□ 농민단체·품목단체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노력을 통해 FTA 추진에 따른 불안감 해소

- 협상 전, 한중 FTA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전략 자문

* 한중 FTA 자문단 : 농민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

- 협상 후, 업계·이해관계자에게 협상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

5. 봄철 산불방지 대책

- ◇ 산불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토 보전과 국민안전 보장
 - 빠르고 강한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 현황과 전망

- 3.21 현재 예년 대비 **산불건수는 89%, 피해면적은 151%** 수준
 - * 산불피해 : (최근 10년 평균) 116건 101ha → (금년) 103건, 153ha
 - * 산불원인 : 논·밭두렁소각39%, 쓰레기소각23%, 입산자 실화 7%, 기타 31%
- **3.9일(토) ‘건조주의보’, ‘강풍주의보’ 속에 21건의** 산불 발생
 - * 포항·울산 산불로 인해 인명(28명), 가옥(138, 이재민 163명), 산림(359ha) 피해 발생
- 기온 상승 및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산** 전망
 - * (3~4월) 산불 발생건수의 51%, 피해면적 84% 집중

□ 향후 추진계획

<산불예방>

-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조기·연장 운영**(당초 3.20~4.20 → 변경 3.11~4.30)하고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 전국산불관계관회의, 동해안 대형산불 대책회의(3.28) 개최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강화**로 입산자 실화 경감 유도
 - 입산통제구역(산림 30%까지) 및 등산로 폐쇄구역(50%)을 지정·관리 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입산정보 제공

- 현장인력과 감시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감시인력(23천명)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 단말기(14천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시 조기 신고체계 가동,
 - 무인감시 카메라(913대)로 지상감시망을 강화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대형헬기 공중계도 및 산불발생 시 진화에 즉시 투입
-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여 산불위험 사전 차단
 -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의 불법 소각우려 지역 사전정리(104천ha) 완료, 3.20일부터 「소각 금지기간」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철저 단속
- 국민공감 및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채널 다양화**
 - TV, 라디오 등 파급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3~4월에 집중 활용하고, 캠페인, 반상회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산불진화>

-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통합지휘권자(시군구청장)는 발생초기 현장지휘 및 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산불(100ha 이상)로 확산될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지휘권을 인수
- **산불헬기(산림 47, 임차 50대) 30분 이내 출동**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헬기는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격납고 10, 계류장 6)로 초동대응
 - 야간정비, 이동정비팀 운영으로 산림헬기 가동률 90% 이상유지
 -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헬기(소방 26, 군 21대) 협조 및 지원
-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해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시·군,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진화대(193대)를 편성, 대형산불 확산 시 군, 공무원, 경찰 등 자원을 총력 투입

VI. 과제별 주요일정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7. 부처 협력과제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1. 농업의 6차 산업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특화 농공단지 5개소 추가 조성	연중
	▪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록	연중
1분기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고시 시행	3월
	▪ 농촌 사회공헌 인증제	3월
2분기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실시	5월
	▪ 농촌 6차 산업 실태조사	5월
	▪ 농촌 6차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6월
3분기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평가	7월
4분기	▪ 농촌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12월

2. 신성장동력 확충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생명산업 기술개발 R&D 추진	연중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추진	연중
	▪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 과제 선정	연중
1분기	▪ 미생물센터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	3월
	▪ '13년 R&D 사업계획 수립	3월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결성	3~12월
2분기	▪ Golden Seed 상세기획 수립	4월
	▪ '13년도 IT융합 선정과제 사업 추진	4~12월
	▪ R&D 중장기 로드맵수립	6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	6월
	▪ 농식품 상생펀드 시범사업 추진	6월

3분기	▪ Golden Seed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	7월
	▪ 생명산업대전 개최	9월
4분기	▪ 농촌 통신환경 개선협의(방통위)	10~12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설계 완료	11월
	▪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준공	11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2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14년 시행계획 수립	12월

3. 정예인력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1차)	3월
	▪ 농고·농대 및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3~12월
	▪ 후계농 및 우수 후계농 자금 및 교육 지원	3~12월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12월
2분기	▪ 농신보 신(新) 보증심사시스템 도입	4월
	▪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도입 연구용역	5~7월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2차) 및 우수후계농 선정	6월
	▪ 제1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선정	6월
4분기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홍보 및 접수	10~12월

4.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설치	연중
1분기	▪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마련	2월
	▪ 산지축산모델개발 T/F 구성	3월
	▪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 선정 및 설계	3~12월
2분기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수립	4월

	▪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 마련	4월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대상자 선정	4월
	▪ 무허가 축사 관련 법령개정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4~9월
	▪ 산지축산모델 개발 연구용역	5~12월
3분기	▪ 무허가 축사관련 건축법·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9월

5. 식품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국내외 식품 기업·연구소 투자유치	연중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	연중
	▪ 농공상용합형기업 컨설팅지원	연중
1분기	▪ 식품교육 및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설명회 개최	2월
	▪ 중소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식품교육 실시	2~12월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3월
	▪ 농공상용합형기업해외기술로드쇼 신청접수	3월
2분기	▪ 식품 R&D 자유응모과제 공모	4월
	▪ 중소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식품교육 확대 개설	4월
	▪ 중소식품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인력 인턴고용 지원	4~12월
	▪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	5월
	▪ 인력수급 동향분석 등 설계 연구용역 실시	6월
3분기	▪ 전략품목 R&D 공모	9월
	▪ 농공상용합형기업 해외기술로드쇼(중국)	9월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의 점검 및 평가(115개)	7월, 9월
4분기	▪ 공동가공시설 선정	10월
	▪ 농공상용합형기업 해외기술로드쇼(베트남)	10월

6. 농식품 수출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물류비 및 수출보험 지원, 식품박람회 참가,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소비자체험행사	연중
1분기	▪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3월
	▪ 물류비 지원 제도 개선	3월
2분기	▪ 신규 환변동보험 상품 개설 및 지원	4월
	▪ 하반기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업체선정	6월
3분기	▪ 해외공동물류센터 상반기 실적평가	7월
	▪ K-FOOD FAIR 개최, 안테나숍 운영	9~12월
4분기	▪ 가공식품 수출 촉진방안 마련	12월

7. 산림부국 실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3~4월
2분기	▪ 제68회 식목일 행사	4월
	▪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4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안 마련	5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5~10월
3분기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시행	7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	7월~
4분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12월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 축소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전속 출하조직(공선출하회) 육성	연중
	▪ 안심축산 전문점 확대	연중
1분기	▪ 농협의 농산물 유통계열화 방안 마련	3월
2분기	▪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4월
	▪ 안성물류센터 물류운용 계획 수립	4월
	▪ 공판 자회사 설립 마스터플랜 마련	5월
	▪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준공	6월
4분기	▪ 안심한우 사이버 쇼핑몰 개설	11월
	▪ 정육점 영업규제 완화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2월
	▪ 계열화에 따른 유통비용 감축효과 모니터링	12월

2. 농산물 직거래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 마련	3월
2분기	▪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	4월
	▪ 직거래 지원법 연구용역	5~9월
	▪ 직거래 정부 지원 사업자 선정	5월
3분기	▪ 직거래 통합사이트 구축	8월
4분기	▪ 직거래 홍보	10월

3. 도매시장 유통 개선으로 거래효율성 제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추진	연중
2분기	▪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방안 마련	5월
3분기	▪ 최소출하단위 설정을 위한 품목별 경매단위 분석	9월
4분기	▪ 하역체계 개선방안 등 물류개선 방안 마련	11월

4.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2분기	▪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4월
	▪ 알뜰장보기 정보제공	4월 ~ 12월
	▪ 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5월
3분기	▪ 무·고추·마늘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9월

5.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공정거래 관련 교육	3월
2분기	▪ 공정거래 사무국 운영	4월
	▪ 현장 실태조사	4~9월
	▪ 공정거래 자문위원회 개최	6월
4분기	▪ 공정거래 우수사례 선정	10월
	▪ 불공정 거래 사례 조사	11월
	▪ 공정거래 자문위원회 개최	12월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산물의 생산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월
2분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4월
	▪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4월
	▪ 쌀직불제 및 밭직불제사업 현지 점검	4~9월
	▪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고시	5월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향 수립	5월
	▪ 공익·환경형 직불제 개선을 위한 T/F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	5월
3분기	▪ 개별 사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8월
	▪ 밭직불제 지목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9월
4분기	▪ 쌀고정직불금 지급	12월

2. 자연재해 대응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3~4월
2분기	▪ 재해보험 제도 개선안 확정	4월
	▪ 우기철 대비 배수시설 중점관리 계획 수립	4월
	▪ 영농기 용수공급대책 수립	4월
	▪ 산사태 예방단 신설	5월
	▪ 전문손해평가인력 400명 선발·투입	5월
	▪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운영	5~10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6월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6월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고시 개정	6월	
3분기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9월
4분기	▪ 과수(배 시범) 종합위험방식 전환	11월
	▪ 생산기반정비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농어촌정비법 개정)	11월
	▪ 산림항공본부(김포→원주) 이전	11월

3. 가축질병 대응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일제소독 및 상시예찰	연중
	▪ 방역 실태 상시점검	연중
	▪ 질병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특별관리	연중
1분기	▪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1~5월
	▪ 축산업 허가제 시행	2월
2분기	▪ AI·구제역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4월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	4~12월
4분기	▪ 돼지 이력제 시행	12월
	▪ 축산시설별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12월

4. 농기계·비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 콜센터 설치	3~6월
	▪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	3월
2분기	▪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마련	4월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소 현지점검	4~12월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공정위 주관)	5월
3분기	▪ 농자재 유통센터 설치 이행상황 점검	7월
4분기	▪ 신재생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10월
	▪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평가	12월

5. FTA 보완대책 추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FTA 대책 지속 개선	연중
1분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월
	▪ FTA 피해영향 조사 분석	3월
2분기	▪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개최	4월
	▪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고시	5월
	▪ FTA대책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	5월
3분기	▪ FTA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	9월
4분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12월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1. 생활여건 개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주택개량사업 추진	연중
	▪ 농어촌경관가꾸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연중
	▪ 농산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지원(헬프데스크)	연중
	▪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 지원	연중
	▪ 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연중
1분기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3월
	▪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3월
	▪ 리모델링 사업 관계자 워크숍	3월
	▪ 안전보건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사업자 선정	3월
	▪ 마을축제 지원대상 선정	3월
2분기	▪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향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 발주	4월
	▪ 농촌주택세제지원방안 보고	4월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4월
	▪ '14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4월
	▪ 농어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시행계획서 수립	4월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주제 포럼 참석(일본)	5월
	▪ 하반기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6월
	▪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봉사활동 발대식	6월
	▪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추진	6월
3분기	▪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봉사활동	7~8월
	▪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7월~
4분기	▪ 국가농업유산 심의지정	10월
	▪ 농촌주택세제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12월
	▪ (가칭)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연구용역 및 입안	12월

2.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중
	▪ 농지연금 지원	연중
1분기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월
	▪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1월
2분기	▪ 결혼이민여성 대상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실시	4~12월
	▪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농촌복지실태조사	4~12월
	▪ 가사도우미 운영 현황 점검	4월
	▪ 농지연금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산정모델 연구용역 실시	4월
3분기	▪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개선안 관계부처 협의	7월
	▪ 영농도우미 및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현장 점검	9월
4분기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 국회제출	10월
	▪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정방법 변경	12월

3. 농촌 활력찾기 운동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촌재능기부 활동 지원	연중
	▪ 현장포럼 실시 및 현장활동가 육성	연중
1분기	▪ 농촌재능기부 캠페인 일간지 선정 및 캠페인 전개	3~12월
	▪ 현장포럼 대상 마을 선정(234개소)	3월
	▪ 사회공헌 인증제	3월
2분기	▪ 색깔있는 마을 현장활동가 육성계획 수립(4월말)	4월
	▪ 농촌재능기부 공모사업대상자 선정	4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	4월
	▪ 농촌재능기부 운동본부 결성	6월
3분기	▪ 핵심리더 후보군 선정	9월
	▪ 인재, 도시자본 유치 대책 마련	9월
4분기	▪ 농촌재능기부 수기공모전	10월
	▪ 지속가능한 농촌마을만들기법 국회제출	12월
	▪ 대한민국 마을대상 시상	12월

4.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	연중
	▪ 농어촌 공동경영체 창업상담, 홍보 등 진행	연중
1분기	▪ 농어촌공동체회사 '13년 지원대상 선정	3월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13년 제1차 지정	3월
	▪ 귀농귀촌 교육	3~12월
2분기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4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워크숍 및 실태조사 실시	4~6월
	▪ 공동체회사 및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4~12월
3분기	▪ 공동체회사 경영전략컨설팅 실시	7~11월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제2차 지정	7월
	▪ 공동체회사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8월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9월
4분기	▪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	10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례집 발간	12월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12월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제고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방안 연구용역	3~6월
	▪ 공공비축 대상 확대(양곡관리법 개정)	3월
2분기	▪ 전국 유휴농지 실태조사	4~10월
	▪ 쌀 고정직불금 단가 확정·고시	5월
3분기	▪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정(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9월
4분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농지법 시행령 개정)	12월
	▪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	12월
	▪ 밭기반 정비 등 농지이용 범용화 계획 수립	12월

2. 해외에서 안정적 곡물 조달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필리핀 해외농업개발 진출과 연계한 농촌개발 ODA 지원	연중
1분기	▪ 옥수수 할당관세물량 수입추천권 부여	1월
	▪ 식용콩 수입권 공매방식 도입	3월
2분기	▪ ‘해외 곡물유통망 확보방안’ 마련	4월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5월
	▪ 한-UAE 해외농업개발 합작투자 MOU 체결	5월
3분기	▪ 국제곡물 가격전망 모형 개발	7월
	▪ 곡물자주율 추진여건 분석·점검	7월
4분기	▪ 분기별 미래선물가격지수 개발	12월

3.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	연중
	▪ GAP 시설 지정	연중
2분기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4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집유업 등 HACCP 의무화)	6월
	▪ 원산지 표시제 고시 개정(커피, 양잠산물 원산지 표시)	6월
	▪ 친환경민간인증기관 삼진아우체 도입	6월
	▪ 동물복지 돼지농장 인증제 추진	6월

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영양 정책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업·농촌 가치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강화	3~12월
	▪ 초·중고 학생 대상 농업·농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확대	3~12월
2분기	▪ 식생활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4월~
	▪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4월~
	▪ 농촌 노인 등 영양 취약층 식생활·영양 실태조사	6월
3분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생활 안내서 및 요리법 등 제작	9월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1. 국민공감대 형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실시	연중
1분기	▪ SNS 등을 통한 정책공모 실시	3월~4월
	▪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월~5월
2분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마련	5월
4분기	▪ 지방농정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11월
	▪ 시·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지침 마련	12월

2. 투융자 평가 및 성과관리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분야별 심층평가 연구용역	7~12월
	▪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경영체등록 활용)	7~12월
	▪ 부당신고 접수처 설치·운영	4~12월
2분기	▪ 농식품 재정·투융자 평가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4월
	▪ 자체평가위원회 재구성	4월
	▪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및 컨설팅	5~8월
3분기	▪ 농식품 통합 D/B 구축방안 마련	7월
	▪ 쌀, 밭 등 5개 직불제 위주 통합DB 구축	9~12월
4분기	▪ 주요사업 평가성과 D/B화	12월

3. 기초통계 확충

	실천과제	세부일정
2분기	▪ 농식품통계 발전방안 수립	6월
3분기	▪ 기초통계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9월

[7] 부처 협력과제

1. 일자리 창출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공상 공동 지원사업 확대	1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3~12월
2분기	▪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4월
	▪ 농공상 융합 육성 지원단 공동 T/F 구성	5월
	▪ 산림박람회와 연계된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5월
	▪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6월
3분기	▪ 공동 현장점검 및 하나로 마트 시험 판매 지원	7~8월
	▪ 농촌형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 협의	9월
4분기	▪ 농공상 융합기업 성과평가 및 우수업체 발굴	11월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삶의 질 계획 중점추진과제 점검	연중
	▪ 농어촌영향평가제 심층평가	연중
1분기	▪ 1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3~4월
	▪ 13년 삶의 질 시행계획 마련	3~4월
2분기	▪ 삶의 질 위원회 개최	4월
	▪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지정	4월
	▪ 전문가 토론회	4월
3분기	▪ 전문가 토론회	7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	8월
4분기	▪ 전문가 토론회	10월
	▪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12월

3. 식품안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식품안전 정보공유 구축 협의	3~9월
2분기	▪ 생산단계 상설협의체 구성	4월
3분기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9월
4분기	▪ 부적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12월

4. 농공상 융합 협력체계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연중
	▪ 공동 지원사업 확대	연중
2분기	▪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4월
	▪ 농공상 융합 육성 지원단 공동 T/F 구성	5월
3분기	▪ 중기청과 공동 현장점검	7월
	▪ 하나로 마트 시험 판매 지원	8월
4분기	▪ 사업 평가, 우수업체 발굴	11월

VII.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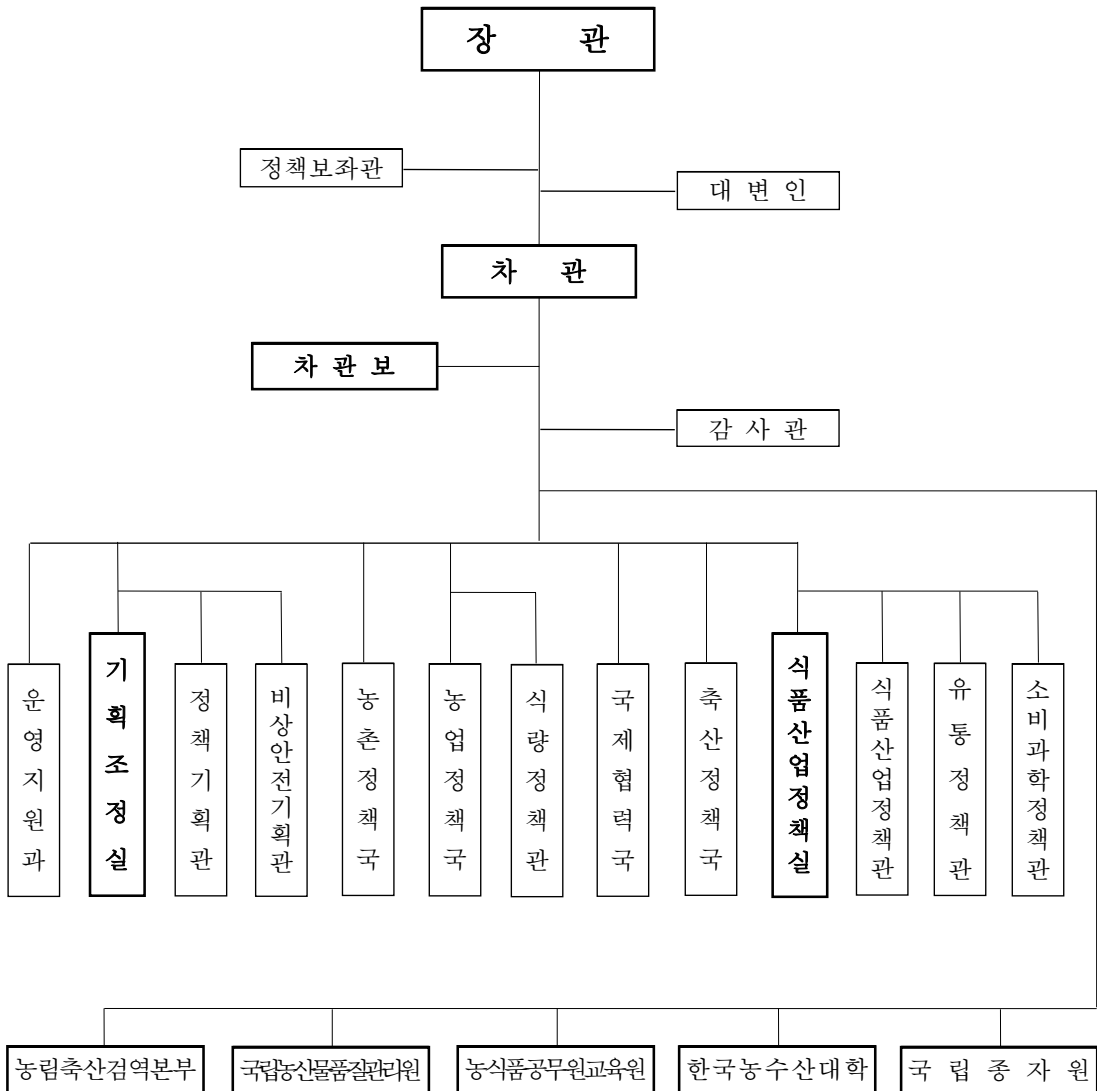
1. 일반현황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참고1

일반현황

1

조직 : 1차관, 1차관보, 2실, 4국, 8관, 43과(담당관)



2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계약직 (정책보좌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특정직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채임)	소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일반	일반·연구																		
농림축산 식품부	3,200	2	21	12	8	1	2	2	2	2,705	14	86	54	337	784	708	602	70	26	132	45	233	
본부	529	2	13	10	2	1	2		2	475	11	30	44	169	143	47	28	3	5	1		29	
관서 소계	2,671		8	2	6			2		2,230	3	56	10	218	641	661	574	67	21	131	45	234	
농림축산 검역본부	922		6		6					741	2	28	7	68	246	266	113	11	16	95		6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1,436		1	1						1,338	1	13	1	127	355	357	433	51		8		89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41		1	1						32		3	1	8	9	5	5	1					8
한국농수산 대학	86							1		19		1		2	5	5	4	2	2		45	19	
국립중자원	186							1		100		11	1	13	26	28	19	2	3	28		54	

3 부서별 주요기능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기 능	
대 변 인	주요정책 대국민 홍보, 정보·상황관리, 정책발표 관리 및 브리핑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감사, 재산등록·심사	
운 영 지 원 과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상훈관리,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농정시책조정, 국회업무, 농수산통계, 예·결산 및 기금총괄, 투유자 심사 평가, 변화관리, 조직·정원 관리, 성과관리, 법무행정, 정보화
	비상안전기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농 촌 정 책 국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유자계획 수립, 농업인 인력 육성, 농촌 지역개발, 농촌 복지, 여성정책, 농촌산업정책	
농 업 정 책 국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농지관리, 농업자금 관리, 협동조합 정책 수립·조정, 농가소득안정, 농업재해보험·대책, 농협경제지원	
식 량 정 책 관	식량정책 총괄 및 수급계획, 양곡 매입·공급, 영농대책, 농업기계화,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농업기반정비, 새만금 사업	
국 제 협 력 국	국제 통상협력 및 협상, 해외농업 개발, 국제농업협력(ODA),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양(다)자간 무역협정, 검역업무 총괄	
축 산 정 책 국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수급, 축산물 유통 및 동물 보호,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식 품 산 업 정 책 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 육성 및 학교 급식 식품가공 활성화, 전통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유통정책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직거래활성화, 농업관측, 채소류·특용작물·과채류·과수류·화훼류 생산 및 수급안정, 시설원예산업,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소비과학정책관	농식품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농축산물·식품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관리,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지산업 육성 및 유전자원 관리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기 능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및 동물 검역, 동물질병관리, 동식물 위생연구, 동물약품관리, 해외 병해충 예찰·방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원산지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시험연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축산식품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교육훈련
한국농수산대학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주요 농작물 보급종 공급, 품종육종지원 및 종자관리

4 예산 및 기금 개요 ('13.3.19일 현재)

가 구성 및 규모

□ 농식품부소관 재정은 6개 회계와 7개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

- 회계(6) :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단위 : 억원)

회 계 명	설치	목적	'13년
▪ 일반회계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수행	4,87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94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및 후생복지·소득보전	47,671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05	지역의 특화발전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	14,14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0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40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95	에너지의 가격안정과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1,022
▪ 양곡관리특별회계	1950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14,177

- 기금(7)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FTA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단위 : 억원)

기 금 명	설치	목 적	'13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66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26,306
▪ 축산발전기금	1974	축산업발전과 축산물 수급·가격안정	9,664
▪ 농지관리기금	1981	영농규모화 및 대체농지조성	10,242
▪ 양곡증권정리기금	1994	양곡증권 및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2003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329
▪ FTA이행지원기금	2004	개방 피해지원 및 경쟁력 제고	6,266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005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237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05)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09) 통합('10년부터 적용)

** 내부거래 1조 2,055억원

나 2013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13년 농식품부 소관 총지출(예산 + 기금) 규모는 13조 5,337억원으로 '12년 대비 1.1% 감소(감1,489억원)

	'08	'09	'10	'11	'12	'13
* 총지출	124,242	130,940	129,918	131,970	136,826	135,337
- 예산	79,269	87,536	84,543	84,238	91,237	82,293
- 기금	44,973	43,404	45,375	47,732	45,589	53,044

□ 분야별로는 농업체질강화(11.6%), 식품산업(9.5%), 양곡관리·농산물유통(8.2%), 농가소득·경영안정(5.7%), 농촌개발·복지증진(3.7%)은 증가

○ 반면, 농업생산기반조성(△29.7%)과 기타 사업비(△67.6)는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
총지출(예산+기금)	136,826	135,337	△1,489	△1.1
□ 예산 일반지출	91,237	82,293	△8,944	△9.8
□ 기금 일반지출	45,589	53,044	7,455	16.4
I. 사업비	133,365	131,803	△1,562	△1.2
▣ 농업·농촌	125,206	123,946	△1,260	△1.0
○ 농업체질강화	27,468	30,666	3,198	11.6
○ 농가소득·경영안정	19,782	20,907	1,124	5.7
○ 농촌개발·복지증진	15,902	16,484	581	3.7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330	34,995	2,666	8.2
○ 농업생산기반조성	29,723	20,894	△8,830	△29.7
▣ 식품산업	6,760	7,404	644	9.5
▣ 기타사업비	1,399	453	△946	△67.6
II. 기본적경비	3,461	3,534	73	2.1

5

소관법률 현황(총86개 / 본부66(공동 20), 농진청2, 산림청18)

소관	실록	법률	소관	실록	법률									
66	기획 (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18)	○ 산림기본법 ○ 사방사업법 ○ 산지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3.5.24 시행)									
	농촌 (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해수공동 19	농촌 (6)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농어촌정비법							
	농업 (7)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업생산개선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1.18 시행) ○ 농지법 ○ 방조제관리법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농업 (3)	식품산업 (1)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식량 (7)	○ 양곡관리법 ○ 비료관리법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쌀기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 시행)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13.9.12 폐지)							유통 (3)	유통 (3)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3.2.23 시행)			
		국제협력 (1)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소비과학 (6)	소비과학 (6)	○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 종자산업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식물신품종 보호법(13.6.2 시행)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3.6.2 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 (4)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김치산업진흥법 ○ 외식산업진흥법			농림해수식품공동 1
	유통 (2)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 인삼산업법					농진청 (2)							
	소비과학 (5)	○ 식품방역법 ○ 농약관리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능성암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업육성법(13.6.2 폐지)												
	축산 (16)	○ 축산법 ○ 초지법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 한국마사회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사료관리법 ○ 낙농진흥법 ○ 수의사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 도축장구조조정법 ○ 말산업육성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13.2.23 시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농진청 (2)	○ 농촌진흥법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6

산하공공기관 현황

(2013. 3월말 기준)

기관명 (기관장)		조직	정원	자산 (12년말)	예산 (13년)	주요 기능
공 기 업	한국마사회 (장태평) * 준시장형	·5본부, 3지역본부, 17실(처), 1단 52팀 11부속기관 5권역지사	815 명	24,914 억원	7,645 억원	○경마의 시행보급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수익금의 사회환원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본사 : 5본부, 19처(실) ·지방 : 3원,9지역본부,93지사, 7사업단, 1기술본부	5,164	83,508	35,38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준 정 부 기 관 * 위 탁 집 행 형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김재수)	·본사 : 4본부, 14처·실·팀, 6사업소 ·지사 : 11국내, 9해외	632	12,968	2,553	○우수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국영무역관리품목 수입·방출 ○유통개선 지원, 식품산업 육성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본원 : 3본부,1센터,1실,10팀 ·지방 : 10지원(2팀), 25출장소	262	19	283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축산물이력제사업
	농림수산물 기술기획평가원 (유병린)	·본원 : 3본부, 7실 ·센터 : 2실(한시적으로 운영)	65	278	1,635	○농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R&D정책개발 지원 ○농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조규담)	·본원 : 1실, 3처, 1역 12팀 ·지원 : 3지원(9팀)	105	21	10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연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조사평가 등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하영효)	·5본부, 2실, 15팀	108	107	521	○농식품분야의 정보화 촉진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제고 및 인적자원 육성 ○통상정책과 국제협력 정보지원
	농업정책자금 관리단 (김풍식)	·1실, 4부	32	23	46	○농특회계 융자금 운용·관리 및 정책자금 검사 ○농어업재해보험자금 관리·운용 및 모태펀드 운용
기 타 공 공 기 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이주호)	·본부 : 1본부, 2처, 6부, 3검역사무소 ·지방 : 8도본부,42사무소	43	113	339	○가축질병 근절 및 초동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지원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박창용)	·본원 : 4팀 ·지방 : 5사무소	44	5	66	○항만구역 병해충 예찰·방제 ○수입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참고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하위법령(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 제도를 실시 하기 위한 세부 근거 마련(인증대상, 심사, 평가 및 인증절차 등)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 규정(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개발 투자통계에 관한 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13. 12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현재 법사위 계류 중)
건축법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및 축사 소방관련 시설 개선 등 무허가 축산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예정일 : '13년 하반기
농촌산업지원 특별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6차 산업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귀농·귀촌 지원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정의, 지원 범위, 개별지원 내용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 귀농인 지원법안(이종걸의원 발의, '12.9.21)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계류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절차 및 타당성 조사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상반기(의원입법)
산림기술진흥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 시행업을 통합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관리를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의원입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 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의원입법)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환경 개선, IT융합 지원 체계 및 사이버농업인 육성 등 세부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 하반기

[2]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인증제, 타 법 예외규정 등	○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	○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완화	○ 개정 예정일 : '13년 하반기

[3]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칙(개정)	○ 밭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등 7개 품목 반영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개정 예정일 : '13. 4월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 농업정책보험을 전담할 전문 기관 설립, 손해평가인력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 국회제출 예정일 : '13. 6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농작물·가축 피해도 피해 산정에 포함,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2차피해 지원 등	○ 소방방재청 소관법령 개정 예정일 : '13. 6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고시(개정)	○ 복구지원 단가 상향조정 등	○ 4개 부처 합동 고시 : '13. 6월
산림보호법(개정)	○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전담 기관 설립근거 마련	○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정부입법)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제정)	○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을 통한 일손부족 문제 해소 지원	○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예정일 : '14. 12월 -시행 : '15. 1.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2.1.26 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예정일 : '14. 12월 -시행 : '15. 1.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2.1.26 제정

[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제정)	○빈집·슬레이트 처리, 공동생활 홈 조성 등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근거 제도화	○제정안 기 제출 : 법사위 상정('12.11.21)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제정)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10월 * 농업인 재해보장 법안(황영철의원 발의 '12.6.2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계류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개정)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개정 완료 : '13.12월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지원 특별법(제정)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시행일 : '13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제정)	○농촌 경관·환경·전통문화 등 농촌다움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

[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집유업 등 식품위해 취약업종에 대한 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개정 예정일 : '13년 상반기(6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12.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개정 예정일 : '13년 상반기(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친환경민간인증기관의 삼진 아웃제 도입	○개정 예정일 : '13년 상반기(6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커피류, 오디류 등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고시 개정)	○개정 예정일 : '13년 상반기(6월)
	○콩(두부)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법률 개정)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 하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개정)	○공공비축 대상 양곡 명시	○개정 완료 : '13.9월
농지법 시행령(개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감면비율 축소) 조정	○개정 예정일 : '13 .1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포장·유통 농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	○국회제출 예정일 : '14년 하반기

[6] 부처협력과제

법령명	주요내용	제·개정시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	○개정 예정일 : '13. 8월

[별첨 1]

2013년 업무계획

-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 선도 -

2013. 3. 22.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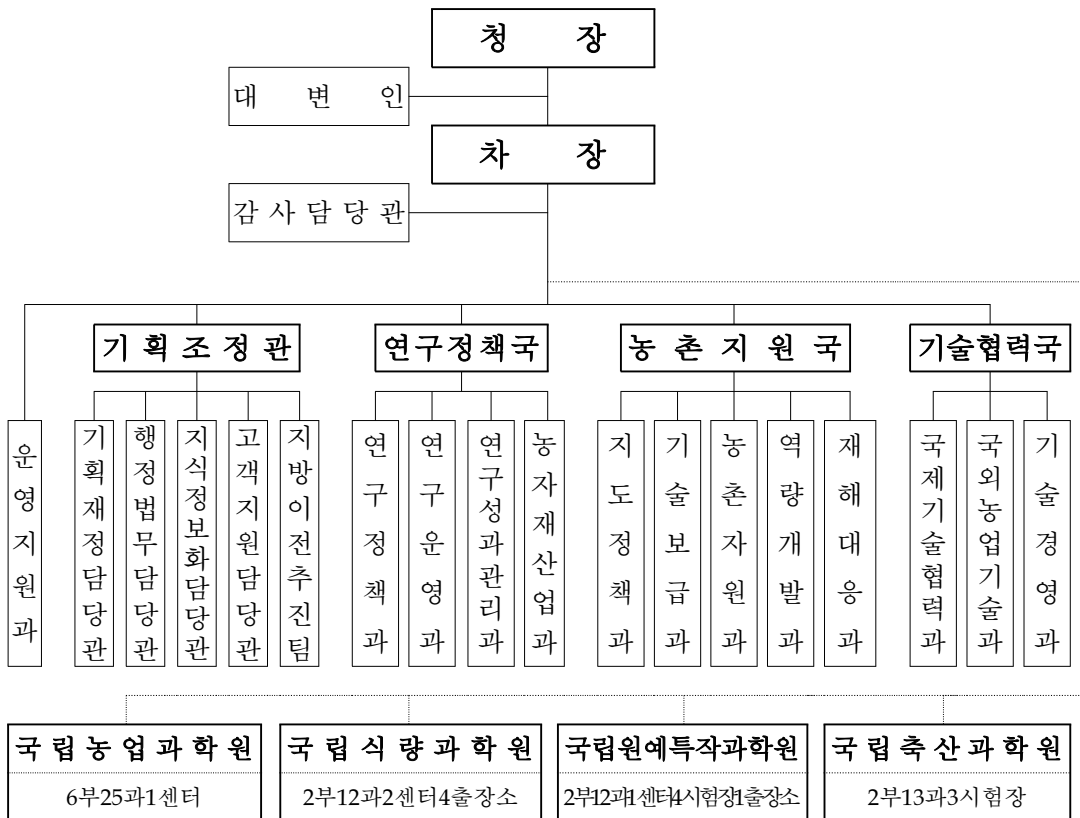
I. 일반현황	129
II.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31
III.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133
1. 종자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4
2.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135
3.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137
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138
5.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139
6. 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140
7.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기술농업을 달성하겠습니다. ...	141
IV. 부처간 협업과제	143
1. 농작물 병해충 협력 방제로 피해 최소화	143
2.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로 국격제고	144
V. 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 체계 강화	145
VI. 과제별 주요일정	147

I. 일반현황

1 임무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 복지·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2 기구 : 1관 3국 20과(담당관·팀), 4연구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관 : 도농업기술원 9, 시군 농업기술센터 158

3 정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행정·농업· 전산등	기능직
계	1,850	22	1,166	93	321	248
본청(1관 3국)	339	6	113	66	133	21
소속기관(4)	1,511	16	1,053	27	188	227

* 지자체 : 8,349명(연구직 761, 지도직 4,338, 행정·농업직 1,771, 기능직 기타 1,429)

4 예 산

□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689억원으로 2012년 예산(8,726억원) 대비 1,963억원(22.4%) 증가

○ 그 중 지방이전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6,440억원으로 2012년 예산(6,170억원) 대비 270억원(4.4%) 증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건설비 2,800억원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726	10,689	1,963	22.4
□ 사업비	7,332	9,240	1,908	26.0
○ 순수사업비	6,170	6,440	270	4.4
- 연구개발	4,158	4,314	156	3.7
- 국제협력	158	178	20	12.7
- 기술보급	1,690	1,778	88	5.2
- 정보화	164	170	6	3.7
○ 공공기관 지방이전	1,162	2,800	1,638	141.0
□ 기본경비	189	193	4	2.1
□ 인건비	1,205	1,256	51	4.2

II.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 2013년 여건전망

- FTA 확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국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 농생명산업의 역할 증대
 - FTA를 통한 개방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 * FTA 현황('13) : 발효(45개국), 협상타결(2개국), 협상진행(8건), 여건조성(3개국) 1)
 - 향후 DDA 협상 타결시 농산물 개방 폭은 더욱 확대 전망
 - 첨단기술,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기능성·식의약 소재산업 증가
 - *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규모 : ('08) 2,697억\$ → ('10) 3,000 → ('13) 3,973
- 이상기상 급증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식량수급 불안정 심화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상화
 - *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 : (60년대) 1,067억원 → (2000년대) 2.7조원(20배 ↑)
 - 기상이변은 농산물 생산감소, 가격 급등 등 수급 불안정 야기
 - * 세계식량가격지수(FAO) : ('02~'04 평균) 100 → ('08) 200 → ('12) 215 → ('13.2) 210
- 농작업 안전관련 연구 확대와 함께 생산·가공·유통·외식·관광 등이 결합된 6차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 * 6차산업 : 농산물생산(1차)·가공(2차)·체험관광·식품·외식 등(3차)의 결합
-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공유요청 증가
 - 우리의 주곡자급 및 녹색혁명, 농업·농촌 과학기술 개발 경험 등

1)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www.fta.go.kr)

2 추진방향

- (시장개방 대응) 기술농업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및 수출농업 강화
 - 농산물 안정생산, 수출경쟁력 확보에 역점
 -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비 절감(에너지·사료비 등), 로열티 대응 기술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 준비
 - * 유전자원 활용, 농업생명공학, 신소재·신품종, 기능성 농산물 등 IBNT 융복합

- (기후변화 대응) 예측·영향평가, 적응 품종개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 선제적 대응
 - 이상기상 및 온난화 대비 농작물 영향평가, 안정생산체계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등
 - 안정적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유지기술 확보
 - 국가 주요종축 안전관리,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행복한 농촌 만들기) 농업인 삶의질 향상과 농촌활력화 증진
 - 농촌체험 등 농촌방문 수요 증가에 따른 6차산업화 확대
 -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업인 건강관리기술 개발·보급
 -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국제기술협력) 대상국 확대 및 협력사업 규모화·내실화 강화
 - 기술공여를 통한 자원 공동개발 및 해외거점기반 확대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및 아시아·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사업 확대
 -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 대응 국가·기구간 협력 강화

III.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비 전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 선도

목 표

1.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농업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 견인
3. 바이오 기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4.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세부 국정과제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자산업 육성 지원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3. 농업 경쟁력 및 수출농업을 지원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5.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연구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7.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개발
⑳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친환경 기술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6. 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
⑫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⑤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

1. 종자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유전자원 확보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 식물유전자원 확보 : ('12) 20만점 → ('13) 21(원예·특용작물 중심)
 - *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 아시아 → 동유럽, 중남미
 - * 자원부국 및 국제기구 보존 유용자원 대량도입(5~6월)
- 식물유전자원 증식, 보존, 특성평가 강화 및 민간분양 확대(1~12월)
 - * 증식·특성평가 : ('13) 30천점, 민간분양 : ('13) 20천점

□ 우량 신품종 집중육성으로 종자강국 도약

- (식량) 고품질, 다수성, 기능성 및 가공용 쌀, 밀, 콩 등 육성
 - * 비타민·아미노산 강화 쌀, 기능성 잡곡, 가공용 쌀·밀, 다수성 콩, 조사료 등
 - * 최고품질쌀 ('12) 11품종 → ('13) 12, 말·보리 ('12) 2 → ('13) 5, 콩 ('12) 2 → ('13) 4
- (원예) 내재해, 고품질, 신소비 창출 및 수출용 등 육성
 - * 병저항성·기능성 채소, 껍질째 먹는 배, 수출용 사과·배 및 화훼 등
 - * (채소) ('12) 11품종 → ('13) 13, (과수) ('12) 12품종 → ('13) 14
- (축산) 한우·젓소 능력개량 및 수입대체 종돈·종계 육성(6월)
 - * 보증 씨수소(한우 15두, 젓소 2두) 선발, '축진종돈' 보급 150두(60두/6월)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국 맞춤형 종자 개발

- 골든씨드 식량(쌀, 옥수수, 감자), 종축(돼지, 닭) 사업단 출범(5월)
- 국산품종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국외 적응시험 및 품종보호출원(3~12월)
 - * (적응시험) ('12) 5개국/31품종 → ('13) 6/39, (출원) ('12) 7개국/98품종 → ('13) 7/105
- 민간 종자개발 지원을 위한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 강화(2~12월)
 - * DNA 마커 개발, 육종정보 제공 등 민간 육종애로 해결

2.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쌀) 기후변화 적응 쌀 생산성 향상 및 가공이용 기술 확립

- 신수요 창출을 위한 품질고급화 및 가공이용성 증진
 - 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식품산업체와의 MOU 협약(4월)
 - 쌀 용도 다양화 품질 기준 설정 및 산업화 기술 지원(6월)
- 이상기상 대응 벼 생태연구 및 생육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벼 생산성 변화 및 수량 기여도 분석(6월말)
- 가공용 품종개발 : 제과·제빵('13), 제면('15), 초다수성('17)
- 쌀가루 이용 제품화 및 대량 유통을 위한 품질 기준 설정

□ (밀·콩·잡곡)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밀) 초다수성 밀(700kg/10a) 육성 및 생산단지 조성 지원
 - * 생산단지 조성 : ('12) 8개소/1.2천ha → ('17) 20/10.0
 - 국산 밀 생산수익모델 개발 및 현장평가회(5월, 천안, 전주)
 - * 생산단지규모: 호두과자용(100ha, 천안), 과자용 밀(50ha, 전주)
- (콩) 안정생산 및 기계화 기술 조기 실용화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적응 재배기술 개발
 - * 파종 한계기, 권역별 맞춤형 재배법 및 2모작 작부체계 재설정
 - 권역별 최대 생산단지 조성 및 신품종 실증(6월)
 - * 단지조성(우량콩) : ('12) 3개소, 47ha → ('13) 6개소, 60ha(SPC²) 연계
 - * 신품종 실증 : 진풍(장류용, 영월), 해품(나물용, 제주, 완주 등)
- (잡곡) 기능성 및 기계화 적합성 향상(기계화율 30% ↑)
 - * 수량 ('12) 220kg/10a → ('17) 280(쓰러짐에 강함), 미네랄(조·피), 항산화(수수) 등

2) SPC : Soybean Processing Complex

□ (조사료) 최대 생산기술 개발 및 경지이용률 제고

- 조사료 생산량 증대 : (동계) 20 → 25톤/ha, (하계) 45 → 50
 - *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논 2모작 확대 : 남부 → 중부 지역('15)
- 간척지 활용을 위한 조기 숙전화 : 염해경감, 비옥도 증진 등
- 간척지(내염), 논(내습) 재배용 품종개발('13~'17) : 25품종
- 기후변화 및 생산불리지역 적응 최대생산 기술 개발
 - 권역별 조사료 안정생산에 적합한 작물 선발 : 동계작물 선발 (4~5월)
 - 최적 사료작물 선발 및 섞어짓기 기술 확립 : 하계작물 파종(5월)
 - * 중부지역 조사료 생산기술 현장 워크숍 : 5월, 안성, 상주

□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13~'17)
 - * 농업기상자동관측망 구축 ('12) 120개소 → ('13) 147 → ('14) 160 → ('17) 200
 - * 기상재해발생 위험지도 : ('13) 동상해 → ('14) 가뭄해 → ('15) 풍수해
- 돌발·새로운 문제 병해충·잡초 분류 동정 및 조기경보체계 확립
 - * 돌발 병해충 조기에찰 시스템 구축(누계) : ('12) 55종 → ('13) 65
 - * 새로운 문제 병해충·잡초 유전자 진단기술(누계) : ('12) 9종 → ('13) 15
- 위성정보 이용 국내외 농업정보 모니터링 평가기술 개발
 - 위성영상과 모형 기반 농작물 작황 추정 : 콩, 옥수수(미국, 중국)
 - 침수취약성 평가: 상습 피해현황 자료 DB 구축 및 디지털지도 작성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 작물 및 축종별
 - * 온실가스(CO₂) 감축 : ('12) - → ('15) 649천톤
 - * 농식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13) 통계정보 웹 포털

3.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

-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술 확립
 - * 고추 비가림재배, 사과 적화·적과제 선발, 배 인공수분 기술 등
- 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 한우 비육기간 단축(30개월령 이상 → 28 내외), 돼지생산성(MSY) 증대(15두 → 17)
 - * 젓소 국제유전평가 참여(4~6월), 우수 종축업체 인증(3~6월)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 지중저수열, 빗물 이용 및 지열냉난방시스템(성능향상 15%, 설치비 10% 저감) 등

□ IT·BT·NT 융복합 첨단 농업기술 개발

- 첨단 정밀농업 실용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 * 벼농사용 제초로봇, 무인 농작업 기술 등 생산기술 자동화
- 인공광형 식물공장 표준 매뉴얼 및 경영모델 개발(4월)
 - * 친환경 배지, 자동육묘, 생육모델링, 광조절, 모듈화 등 핵심기술
- 발작물 농기계 개발 및 일관기계화 작업체계 확립
 - * 조·수수 파종기 및 수확기 : 파종·수확 노력절감 80%('13~'14)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 * 수출용 농산물 생산 모델, 복합 환경조절 전용온실 모델 등 개발

□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전통식품 및 소재 개발

- 과수 및 약용자원 생활소재 활용기술 개발
 - * 배를 이용한 기능성 비누 등(3종), 천연조미용 소재 등(2건)
- 전통주, 고추장 등 발효미생물 활용 전통식품 개발
 - * 전통누룩 양조기반 기술 : ('13) 주종별 맞춤형 누룩 등 5종

4.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비료·농약 등 농자재 저투입 기술개발 보급

- 토양검정 기반의 맞춤형 농경지 양분관리 기술 개발
 - * '흙토람' 이용 비료사용처방(290천건), 토양 질 지표 개발·보급 등
- 환경친화적 병해충 및 잡초 종합관리 체계 구축
 - * 돌발 병해충 예찰지침서 신규 작성·보급 : ('12) 55종 → ('13) 65

□ 농생물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개발 및 실용화

-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 미생물제제 개발
 - * 생육촉진, 병해충방제용 등 미생물제 개발 : ('12) 15종 → ('13) 18
- 우수천적을 이용한 해충 생물적방제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 * 농작물 해충 방제용 천적의 현장 실용화: ('12) 31종 → ('13) 32

□ 친환경 안전 농산물·식품 생산기술 개발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1~12월)
 - * 위해요소 안전기준(안) 마련(누적) : ('12) 5건 → ('13) 9
- 농산물 안전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 지원
 - * 독소 안전기준 : ('13) 2건 → ('17) 6, GAP 실천 매뉴얼 : ('13) 10건 → ('17) 30
-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농작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흙을 살리기 위한 토양 보전·복원 및 농업용수 수질 개선

- 경사 농경지 토양유실 제어 및 영향평가 기술 개발
 - * 토양보전농법 개발 : 물리성 개량기준, 작물 유효 근권심 기준 설정 등
- 토양·작물 특성에 알맞은 양분 진단 및 관리기술 확립
 - * 시설재배지 과학적 진단·처방 기술('13): 인산집적 한계농도 설정(2작물)

5.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 IT·BT 접목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농생물자원 유전체 해독 및 유용유전자 개발 확대
 - * 유전체 해독 : 국화, 재래돼지, 토종닭, 흑염소 등 6종('13)
 - * 기능성, 내병성, 산업용 효소 등 유용유전자 개발 : ('13) 20종
- 바이오장기/신약생산 가속 등 미래 대비 축산 신기술 개발
 - * 신약 생산용 형질전환돼지 2종(백혈구성장축진, 당뇨질환모델)
 - * 형질전환돼지 장기 영장류 이식 생존기간 연장 : 25일 → 60일
 - * 특수목적견 체세포 채취 및 복제란 생산(4~6월), 복제생산(12월)
- 유전자변형 작물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환경·식품안전성 평가기술 표준화(2건) 및 GM 종자 보존 체계 구축

□ 식·의약 융합 기능성 신소재 개발

- 누에산물 및 실크단백질의 식의약, 의료용 소재화 : 6종
 - * 누에 혈당강하 성분의 천연물 의약품 등록 임상시험(3~4월)
- 봉독의 관절염 치료제 등록을 위한 인체독성 평가(1~3월)
- 곤충유래 항균펩타이드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실시(1~3월)
- 약용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안전 식의약 소재 개발
 - * 천연항생제, 식품유해균 억제 자원 개발 : ('12) 3점 → ('15) 6

□ 바이오에너지 소재 및 고효율 생산공정 개발

- 바이오에너지용 단수수 등 품종개발 : 2품종
- 바이오에너지 생산공정 개발 : 전처리, 공정, 분해균주 등
 - * 효소당화율 ('12) 80~85% → ('13) 90, 균주 선발 ('12) 2종 → ('13) 3

6. 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보급

○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개발 : 3종

* 고추수확 운반차, 보행지지 수확물 운반장비, 미끄럼 방지용 농작업화 등

○ 농작업 위해성 구명 및 작업환경 개선 : 옥수수, 생강 등 3작물

* 파종, 농약살포, 수확, 선별 작업단계별 온열, 분진, 가스 등 노출평가

○ 농기계 안전사고 및 농작업 손상조사(3~6월) : 사고원인, 예방대책 등

* 10,000농가 표본 조사(4월 용역조사 발주)

□ 고령·다문화·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

○ 고령자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분석(전국 1,000명)(6월)

○ 농어업복지실태조사(4천호)를 통한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 지원

○ 귀농인의 농촌 정주, 생활향상 및 농업창업 지원 연구 강화

- 귀농자 생활 실태 및 정착 과정 장기분석 : 6가구

○ 농촌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신규개발 : ('13) 자녀적응 등 3건

□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경관·전통자원·관광·체험 기술 개발

○ 농촌 마을 경관 및 주거 환경 개선 기술 개발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개발 : 3유형

- 마을축제 프로그램 가이드북 등 개발 및 현장 적용(4~6월)

○ 농촌 전통자원 소재 및 농촌관광 마케팅 전략 개발

-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을 농촌관광농가 보급(1~2월)

- 세시풍속, 마을숲 등 전통자원 콘텐츠 소재 발굴(1~3월)

7.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기술농업을 달성하겠습니다.

□ 농가 유형, 기술수준 및 영농시기에 맞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보급을 강화

○ (고령농 등) 품목별 교육 및 연시, 현장기술 컨설팅, 소책자·리플릿 등 다양한 전통적 방법 활용

- * 새로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화('13년, 101종)
- * 농업기술지(월1회, 3만부), 리플릿·소책자(30종 60만부) 등 기술정보 제공

○ (전업농 등)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 등 최근 IT접목 활용

- * 최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기술길잡이를 농업인용 e-book으로 제공(110종)
- * 개발된 영농활용기술 정보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12, 1,204건)
- * e-mail을 통한 주간농사정보(1만명), 병해충 진단용 모바일앱 제공(수시)

□ 시·군센터 등 기술보급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선도 농업인 양성으로 신기술 조기 확산에 활용

○ (공무원) 경력별·기술수준별 현장의 농업기술보급전문가 양성

- * 개발기술 학습과정(76과정 2,710명), 장단기 연수(3과정 140명) 등
- * 전문지도연구회 등 자율학습모임 활동 강화('13) : 49개회, 2,235명

○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강화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선도적 자립경영체 육성('17년까지 10만 강소농)
 - * 연간 실천목표 : 농가소득 10%↑ + 경영역량(기술·경영수준) 20%↑
-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 136개소 13천명

□ **금년도 중점 기술보급과제는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보급**

○ **(재해예방) IT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최소화 기술 지원**

- 재해요인별 선제적 기술정보 확산으로 상시 대비체계 구축
 - * 재해예방관리기술(월 1회), 당면영농기술(5~10월, 격주), 사전·사후대책(수시)
 - * 동해(3~4월) 등 피해실태조사,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과제 발굴·해결, 정책건의 등
-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조치 : 지역별, 품목별 SMS(14만명)
- 주요 작목 중심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피해상황 점검 및 피드백(연중) : 8작목, 110시군

○ **(일자리 창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체험·소규모창업 지원 등 농식품의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농산물 가공상품화 및 농가맛집 조성 : ('13) 31개소
 - * 농식품가공CEO교육(4월), 창업경영교육(7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12월)
-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및 농장교사 양성
 - * 코레일·지자체 협력 체험상품 '레일그린' 운영 시범('13) : 13개소
 - * 농촌교육농장 확대 조성 : ('12) 52농장 → ('13) 72

○ **(귀농·귀촌) 베이비부머 등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및 맞춤형 기술지원**

- 통합형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서비스
 - * 농촌진흥청(농업기술), 농식품부(정책), 농어촌공사(농지), 농협(금융) 등 합동근무
- 농업기술, 농촌생활 등 현장실습형 영농정착교육(3~10월) : 4,560명
 - * 이론·실습·창업설계 등 농업기술기초(4천명), 농장입주 실습(560명) 등

IV. 부처간 협업과제

1 농작물 병해충 협력 방제로 피해 최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의 방제업무를 식물방역법 개정(2012. 1. 15)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여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일원화
 - 신규발생 외래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 ('12) 7회
 - 바이러스, 선충 등 병해충 공적방제 : ('12) 5종 77.9ha
- 효율적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대응 필요
 - 이동성 해충이 농경지와 산림, 공원 등에서 동시 발생
 - * 포도원 꽃매미 발생 ('09) 2,765ha → ('10) 8,378 → ('11) 7,463 → ('12) 6,905
 -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병해충 발생 증가
 - * '12년 발생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블루베리혹파리 등
 - * 최근 6년('07~'12) 동안 외래병해충 유입 증가 : 18종(병 9, 충 9)

<협업 추진계획>

- 병해충 확산방지 및 조기 박멸을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등 총괄 조정
 - 검역검사본부 : 외래병해충 유입차단 및 신종 병해충 역학조사
 - 농촌진흥청 : 사전예찰·방제계획 수립, 방제비 및 기술 지원
 - 연구개발, 발생 분포조사, 방제대책회의, 공적방제명령 시행 등
 - 산림청 : 농경지 인근 산림지역의 이동성 해충 방제 협조
 - 지자체 : 관할 지역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수행
 - 발생조사, 농가교육·홍보, 신규병해충 공적방제 실행

2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로 국격제고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개도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식품부, 농진청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
 - 외교부(KOICA)와는 사업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주력
 - * 우리청의 농업기술과 KOICA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패키지 사업 추진
 - 안전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는 새마을 ODA사업에 농업 기술 전문인력 지원
 - 농식품부의 베트남 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기술지원 참여
 -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³⁾센터 등을 통한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전수
- 보리고개를 극복하고 50년간 축적된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과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청의 지원은 기술위주로 시설과 장비 연계시 시너지 창출가능

<협업 추진계획>

- 관련부처와 민간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개도국 농업협력 성과향상으로 국격제고 및 수출시장 개척
 - 청의 농업기술, KOICA 및 농어촌공사 등 타부처의 시설·장비를 연계한 패키지방식 사업 적극 발굴
 - 청의 재배기술과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 관련 산업체와의 민관협력 사업 확대 추진

3)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2009년 출범, 15개국 설치)

V. 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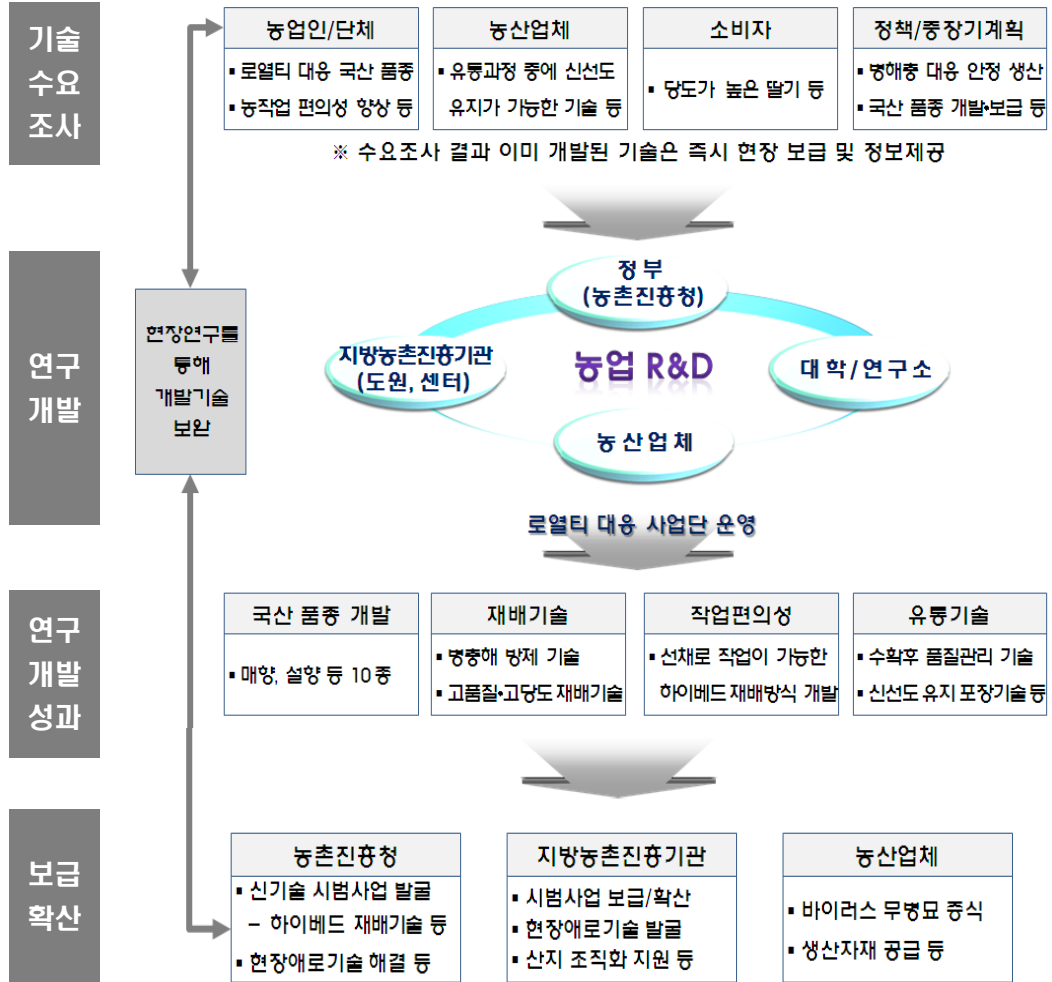
-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확대
 - 고객별 기술수요조사 : 농업인, 소비자, 단체, 지방기관 등
 - *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기술수요조사(2.27~3.26)
 - 농업기술센터(158개), 전문지도연구회 (49개 연구회, 2,235명) 등
 - 농산업체 대상 심층인터뷰 신규 실시 : 110개 업체

- 기술수요조사 내용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연구과제로 적극 반영
 - 기 개발된 기술이 있는 과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현장기술지원단 등을 통해 즉시 개발기술 정보제공 및 전파
 - 시급한 현안기술은 긴급공모 또는 자체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신속히 연구수행
 - * 관련 대학, 민간 등과 공동연구추진팀 구성·운영
 - 시급성은 낮으나 꼭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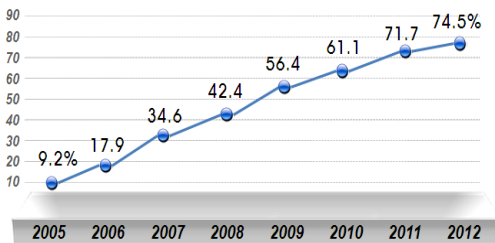
- 성과 유형별로 신속한 기술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신제품종 :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종자·종묘 업체를 통해 농가보급 확대
 - 영농활용기술 : 새해농업인교육,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급
 - 특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농산업체에 기술이전
 - 정책제안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 설명회를 통해 사업 제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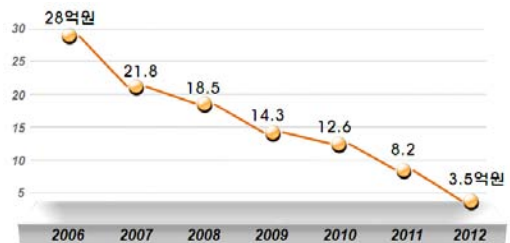
딸기 품종 개발 및 보급 사례



<딸기 국산품종 보급률>



<딸기 로열티 경감>



VI. 과제별 주요일정

구 분	주요 세부업무	일 정
1/4 분기	▪ 전국단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2월
	▪ 2014년 신기술시범사업 신규 공동과제 선정	1~2월
	▪ 농촌 리모델링 및 경관디자인 연구 협의회	2월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 실천방안 협의	2월
	▪ 아프리카 KOPIA센터 협력사업 사전조사	2월
	▪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기술 현장평가회	3월
	▪ 인삼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설명회	3월
2/4 분기	▪ KOPIA센터 협력사업 연찬회	4월
	▪ 농촌관광을 통한 6차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4월
	▪ 창조적 과학기술농업 실천 다짐 대회	4월
	▪ 주민참여형 농촌어메니티 공간디자인 현장 적용	4~5월
	▪ 오이 흰가루병 방제 유용미생물 현장평가회	5월
	▪ 쌀자급률 향상방안, 농업유전자원 기능성 소재화 심포지엄	5월
	▪ KAFACI 2차 총회 개최(아프리카, 우간다) ▪ 고령자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6월 6월
하반기	▪ 시험연구사업 진도관리, 현장 평가	7월
	▪ 2013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선발	8~12월
	▪ 전통지식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현장접목	8~11월
	▪ AFACI사업 연례 평가회(태국 등)	9~10월
	▪ 전통주 활성화 심포지엄 및 소믈리에 선발대회	10월
	▪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신청서류 평가심의	10월
	▪ 원예특작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11월 12월
연 중	▪ 연구개발 어젠다 운영위원회, 연구사업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연중
	▪ 주요작물 시기별 생육조사 및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연중
	▪ 돌발·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예찰·방제단 운영	연중
	▪ 국제협력사업, KOPIA, AFACI, KAFACI 사업추진	연중

[별 첨 2]

2013년 업무 계획

-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

2013. 3. 22



순 서

I. 일반현황	153
II. 정책여건 및 전망	157
III. '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158
1.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59
2.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161
3. 임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63
4. 아이부터 어른까지 숲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65
5.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녹화를 선도하겠습니다.	167
IV. 부처간 협업과제	168
V. 과제별 주요일정	171
[참고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	172
[참고2]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산림사업 추진계획 ...	173

I.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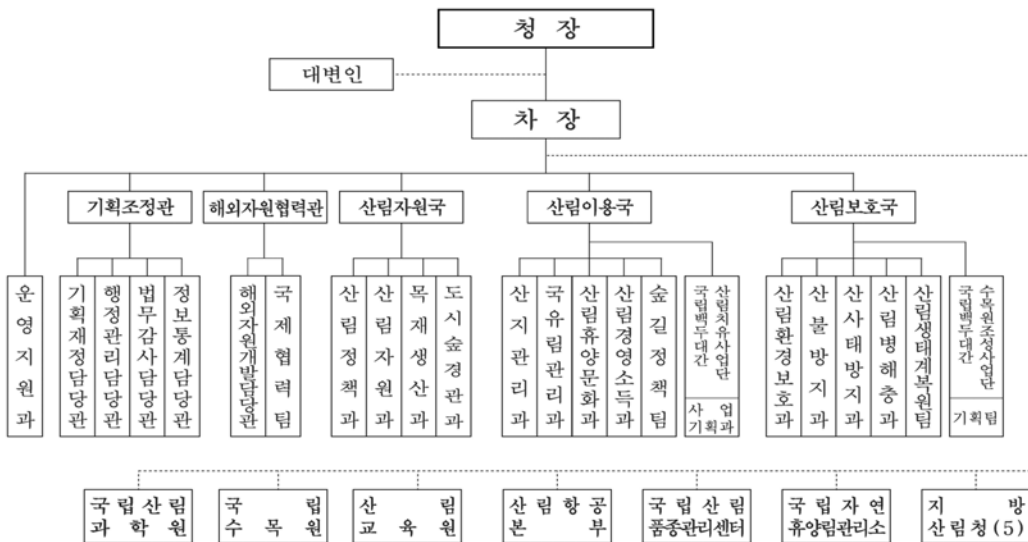
1 임무

산림이 가진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을 보호·증식하고, 임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조직 및 정원

□ 조직 : 2관 3국 20과 4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원 : 1,741명(본청 268, 소속기관 1,473)

3 기 능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혁신정책·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ODA, 임업분야 통상, AFoCO 지원, 국제기구·협약 협상, UNCCD 후속조치
산림자원국	산림정책, 기후변화, 연구조정, 조림·숲가꾸기·종묘, 남북협력, 일자리창출, 산림바이오메스이용, 목재생산, 임도설치, 임업기계화,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사업법인 관리,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문화·휴양증진, 산림복지, 산림치유, 산림교육, 숲길조성 및 등산지원, 임산물 수급 및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단속, 생태숲,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불방지, 사방, 산사태 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생태계 복원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산림보전, 산림유전자원, 임산공학 등 시험·연구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및 관리, 산불예방·진화 지원,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

4 예산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	
				%
계	17,951	18,488	537	3.0
○ 일반회계	8,836	8,970	134	1.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670	5,838	168	3.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94	87	△107	△55.2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31	3,166	335	11.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20	427	7	1.7

※ 2013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4%, 농림예산 대비 10.0% 수준

□ 기 능 별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	
	예산	%	예산	%		%
계	17,951	100	18,488	100	537	3.0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6,285	35.0	6,760	36.6	475	7.6
○ 산림자원 이용	4,267	23.8	4,590	24.8	323	7.6
○ 산림자원 보호	5,617	31.3	5,299	28.7	△318	△5.7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782	9.9	1,839	9.9	57	3.2

5

소관 법률 현황

법 른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 산 립 기 본 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 지 관 리 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 조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 방 사 업 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 립 조 합 법	1980. 1. 4	○ 산림 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 조합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 립 보 호 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증진 등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II. 정책여건 및 전망

-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숲의 겉모습은 푸르러졌으나 아직은 경제성 높은 자원이 부족한 실정**
 - 기능을 다한 녹화수종을 지역별 특성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가치 높은 수종으로 교체할 시점
 - 한편, 기후변화협약에서 목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11) 하면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점차 조성 중
-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의 휴양·치유 기능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비용대비 만족도가 높은 산림복지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 ('07) 626만명 → ('12) 1,161만명
 - 특히, 산채와 약용·약초류의 소비가 급증(최근 2년간 30%)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전 세계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증대**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 고조
 - UN 3대 환경협약에서 산림을 문제해결의 핵심 대안으로 논의 중
 - *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은 '산림의 해(2011)'와 '산림의 날(3.21)'을 지정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산림재해는 대형화 추세**
 - 러시아('10), 미국('11), 호주('13) 등에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 발생
 - * 우리나라도 금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산불로 큰 피해 발생(포항·울주, 3.10)
 -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증가로 돌발 산림 병해충의 확산 및 생활권 지역 산림의 산사태 피해 발생 우려 증가

Ⅲ. '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비 전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소득과 녹색복지”

목 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세 부 국 정 과 제

- ①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②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92.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82.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 ③ **임업인 경쟁력 향상 및 목재산업 육성**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⑤ **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세계녹화 선도**
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60~'70년대 식재하여 국토녹화 목적을 달성한 수종을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교체

○ 지역별 전략 육성수종*을 선정하여 수종갱신 조림을 확대

- 조림면적 : ('12) 17천ha → ('13) 20천ha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삼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등

○ 고부가가치 수종인 헛개, 옷나무 등 특용수 조림 확대(2천ha)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 개최

○ 국토녹화 착수('73) 40주년을 맞아 산림을 온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는 메시지 전달(4.5)

-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 인공림 등 우량한 숲은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

○ 내실 있는 숲가꾸기(30만ha)로 고급목재 생산기반 마련

-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감리 강화 및 사업품질 모니터링 확대

○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하고, 개별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 매뉴얼을 마련·보급(5월)

* 목재생산, 수원함양, 생활환경보전, 휴양, 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5월)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모델 제시

○ 숲가꾸기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 등으로 공급 확대

- 부산물 수집량 : ('12) 120만m³ → ('13) 150만m³

□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에 대비하여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를 정비·확충

○ 산림사업과 임목수확 확대를 위해 임도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임도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구조로 개량

- 임도신설/구조개량 : ('12) 572km/815km → ('13) 721km/400km

○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 개발·보급

* '13년, 임업기계장비 258대를 보급할 예정(지방청 45, 지자체 213)

○ 임업훈련원 기능 강화로 임업기능인 기술지도 및 양성 확대

*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3개 임업훈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시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마련 및 거래기반 구축

○ 탄소흡수원법 시행('13.2.23)으로 도입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을 촉진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구성(3월)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6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안을 마련(5월)하고 참여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 (임업인) 기술지도,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기업) 사업 참여모델 제시

□ 산림에서 청년층과 은퇴세대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 '17년까지 산림분야 장·단기 및 전문 일자리 35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3월)

- 산림비즈니스 청년창업 지원, 은퇴자 산림일자리 컨설팅 등 도입

○ 산림고용박람회 개최하여 다양한 구인·구직정보 교류(5월)

○ 산림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추가 지정(4개) 및 지원 확대

2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운용을 고도화하고 자원 확충
 - (시스템) 산불신고 시스템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통합·운용
 - (예방체계) 산불 취약지에는 감시카메라(100대)를 설치하고 문화재 주변 산림에 물 뿌리는 시설(23개소) 확대
 - (대응체계) 전국 30분 이내 헬기 진화망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불전문가 양성기반 마련
 - 울진 격납고('12~'14) 확충 및 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운영
 - 산불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월)

-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 중심의 대응 강화
 - (시스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6월)
 - (예방체계)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시설과 재해방지림 조성을 병행한 '산림유역 통합관리' 사업 추진
 - 사방댐/계류보전 : ('12) 695개소/416km → ('13) 785개소/584km
 - * 일본은 산림 1천ha당 3.83개의 사방댐 조성(우리나라 0.78개의 5배 수준)
 - (대응체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산사태 우려시 취약지역 주민대피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 강화
 -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 ('12) 4천 개소 → ('13) 10천 개소
 - 산사태 현장예방단 : ('12) - → ('13) 25개단, 100명
 -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5.15~10.15)
 -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13~'17) 수립·발표(3월)

□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및 생활권 수목 전문 진료체계 구축

- (시스템) 산림병해충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예찰·방제 추진
- (예방체계) 항공·지상 정밀예찰 및 수목피해 예방·진단 강화
 - 예찰방제단/수목진단센터 : ('12) 250개단/13개소 → ('13) 250개단/15개소
- (대응체계) 주요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집중방제 실시
 - 4대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및 꽃매미 등 돌발해충 적기 방제
 -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해 '나무의사' 제도 도입

□ (통합관리시스템) 재해방지 인력과 장비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산림항공기,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산불(건기), 산사태(우기), 산림병해충(연중) 등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 산악기상망을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측 역량을 강화
 - 산악기상망 : ('12) 30개소 → ('13) 30개소 추가

□ (산림생태계 보전) 한반도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 복원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기후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
 - 생태관리센터 : ('12까지) 4개소 → ('13) 2개소 추가
 - 현재 국립수목원을 백두대간, 세종수목원으로 확대 조성 중
- 백두대간, DMZ 일원의 폐광·폐군사시설 등 훼손된 산림을 복원(64ha)하고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을 연결(3개소)
- 등산객의 과다이용으로 훼손된 전국 주요 등산로를 생태적으로 정비(1,027km)하고 등산로 연결사업(3개소)을 추진

3 임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안전망을 강화
 - 한-중 FTA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6월)하고 밤·표고 등 품목별 세부 지원방안 마련
 - 산림작물의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선 및 보험가입 확대 추진
 - 복구비 지원 : ('12까지) 25품목 → ('13) 5품목 추가
 - 보험가입 대상 : ('12까지) 4품목 → ('13) 표고 1품목 추가
- 산채·약초류 등 소득 작물의 생산기반을 규모화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액을 '17년까지 연간 5조원으로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채·산약초 산업화단지 조성
 - 기본구상 및 모델 개발('13~'14), 시범사업('15), 확대('16이후)
 - 품목별 전문생산단지(32개소) 및 복합경영단지(15개소) 조성
 - * 산림 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설립('13~'15)
-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특산임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
 - 수도권 등 다량 소비처별로 전문유통센터 확충
 - 유통센터 : ('12까지) 72개소 → ('13) 7개소 추가
 - 기후, 토양 등 지리적 특성이 강한 품목을 지역명품으로 개발
 - 지리적 표시 : ('12까지) 44품목 → ('13) 5품목 추가
- 미래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생명공학기술(BT)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산림내 자생식물 중 미래 유망품목 발굴('13~'14)
 - 오갈피 등의 식품 산업화 및 밤부산물 화장품 등 개발('13~'14)

□ 노후화된 목재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유통시스템 합리화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남 장흥에 목재전문산업화단지를 조성('13~'15, 80억원)하고 소규모 영세 산업체 시설 개선과 인증제품 생산을 지원
 - 목재산업체 용자 지원액 : ('12) 164억원 → ('13) 184억원
-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5월) 및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확대
 - 목재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 ('12) 4품목 → ('13) 8품목

□ 공공분야에서 목재 소비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

- (공공분야) 공공분야 목제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별 목재문화지수 개발(12월)
- (민간분야) 목재제품 안정성 평가제도 도입(12월)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I LOVE WOOD」 캠페인 추진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7개소) 및 목재체험교실 운영(21개소)

□ 산림바이오매스 산업화 촉진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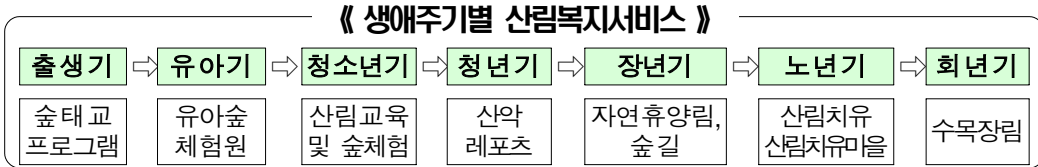
- RPS* 제도 시행 등 급증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12월)

* 500MW이상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사용하는 제도

- 도시지역 에너지 빈곤층 및 산업시설에 보일러 보급 확대
 - 목재펠릿 보일러 : ('12까지) 15천대 → ('13) 2,446대 추가
- 목재펠릿을 활용한 전력생산으로 탄소 배출 저감
 - 화력발전용 목재펠릿 : ('12) 5만톤 → ('13) 15만톤
- 새만금간척지에 목재에너지림(1천ha)을 조성 중('12~'16)

4 아이부터 어른까지 숲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기에서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출생기~청소년기) 누구나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범국민적 '숲으로 가자!' 캠페인 전개
 - 유아숲체험원 확대(5개소) 및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3개소)
 - 방과후 숲교실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청년기~장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 확충
 - 지역여건과 휴양패턴을 감안한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21개소)
 - 휴양림 방문자안내센터 확대 및 체류기간 다변화 시범운영(7개소)
 - 트레일, 둘레길 등 국가 및 지역 숲길 조성 확대(485km)
- (노년기~회년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숲속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 치유의 숲 확대(19개소) 및 권역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6개소)
 - 산림치유 전문인력 활동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10월)
 -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10~'15, 1,312억원 / 영주·예천)
 - 국·공유 수목장림 조성 확대 및 범국민적인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개별단위로 추진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연계하여 산림복지단지를 시범 조성('14~'16)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시설 도입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6월 국회제출)
 - 토지소유형태,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한 경영방식 및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을 통해 녹색서비스 확대

- 도시민의 쾌적한 녹색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
 - 도시숲 : ('12까지) 2,310개소 → ('13) 173개소 추가
-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숲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충
 - 가로숲/학교숲 : ('12까지) 36,618/1,112 → ('13) 511km/149개교 추가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숲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 전통 마을숲 : ('12까지) 59개소 → ('13) 6개소 추가

□ 3대 국가 산림경관축을 지정·관리하고 지역별로 우수한 산림경관자원을 경관숲으로 조성

- 산악림·해안림·수변림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관리
 - 경관축별로 우수 산림경관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주요 도로변(강원, 91ha)과 해안 주변(경북, 20ha)에 경관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창출

5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녹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양자·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및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강화

-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4개국과 신규 양자협력 약정 체결 추진
 - 양자협력 체결 국가 확대 : ('12까지) 21개국 → ('13) 4개국 추가
 - * '13년에는 기체결한 중국, 브라질 등 12개국과 산림협력회의 개최 예정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국제 산림협력을 주도
 - 회원국을 한·아세안(11개국)에서 범아시아로 확대하는 협상 추진
 - * 협력사업 추진 : 개별협력(7개국), 지역협력(메콩지역, 도서국가지역, 아세안 전역)
- 한·중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에 대비하여 임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

□ 해외 산림자원 확보 강화 및 ODA 사업 활성화

- 목재자원,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해외조림을 확대(26천ha) 하고 산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
 - 해외조림 기업 융자금 지원 : ('12) 200억원 → ('13) 230억원
 - 인니 REDD+ 시범사업(2년차) 및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사업 이행
- 창원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동북아 산림협력사업을 강화
 -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 ('12) 3개국 → ('13) 6개국
 - 몽골 그린벨트조림(300ha), 중국 사막화방지조림(81ha) 추진

□ 지속적인 북한 황폐 산림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기본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에 대비
 -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 조사·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
- FAO 등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북한 산림복구 네트워크 구축

IV. 부처간 협업과제

1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야생동물 중 관리와 주 서식지인 산림관리 기관의 이원화
 - 유해 야생동물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산림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야생동물 정책 수립은 환경부에서 담당
-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몰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훼손 피해도 증가 추세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업 피해액은 최근 3년('08~'10)간 400억원이며 개체수 미 조절 시 피해는 계속 증가 예상
 - * 일본,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07)
 - 우리나라는 상위 포식자 부재로 동물의 먹이사슬이 끊겨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인위적 간섭이 필요

<협업 추진계획>

- 산림에 서식하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보호동물의 서식지 관리에 대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농산촌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산림 내 유해 야생동물의 구제 근거 마련(환경부 협조)
 -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식환경 개선사업 및 입산통제 등 지원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숲 교육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숲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 중

- 산림청은 지자체·지방교육청 등과 ‘숲으로 가자!’ 운동을 추진하여 산림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 중

* 유아 숲체험 교육에 유아 43만명이 참여하고, ‘숲으로 가자!’ 캠페인에 356개 기관 청소년 50만명 참여('12)

□ 유아·청소년의 숲 교육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필요

- 교육부, 여가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가 필요한 시점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교육부, '11.7.2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업무협약(여가부 등 5개 부처, '12.5.17)

<협업 추진계획>

□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 강화

- (산림청) 산림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대상별·연령별·장소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교육부) 유아 누리과정(만3~5세)에 숲 체험·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숲 체험 활동 비율 확대 협조
 - (교육청) 산림교육센터·휴양림 등을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일선학교에 프로그램 홍보
- (여가부)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청소년 상담·학교폭력 예방 등 전문인력 참여 협조

3 생활권 녹지 조성·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화·도시화로 도시인구가 증가(전체인구의 91.1%)하고 있으나 녹색공간은 부족

- 산림청에서 도시숲·학교숲·가로수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
-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7.95㎡('11)로 WHO 권고기준인 9㎡의 88% 수준

* 세계 주요도시 : 서울 4㎡, 런던 27㎡, 뉴욕 23㎡, 파리 13㎡

□ 생활권 주변 산림과 공원 및 녹지를 연결 조성하여 도시민의 보건휴양·자연체험 등 녹색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 도시공원은 구역결정 면적대비 조성률이 38.2%('11)에 불과
- 녹지공간 조성이 시설물 위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태적 건강성과 녹색서비스의 질 저하

<협업 추진계획>

□ 생활권 주변 산림과 도시공원의 녹색공간 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산림청) 도시지역 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실행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구역 결정
-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협력

V. 과제별 주요일정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2.1~5.15
	▪ 산사태예방 및 대응	5~10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	7월~
	▪ 숲가꾸기 추진	1~12월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12월
	▪ 산림병해충 방제	1~12월
1분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구성	3월
	▪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	3월
	▪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13~'17) 수립	3월
2분기	▪ 제68회 식목일 행사 개최	4.5
	▪ 산림교육종합계획('13~'17) 수립	4월
	▪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전략 수립	5월
	▪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5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안 마련	5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5월
	▪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	5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산주·기업 설명회 개최	6월
	▪ 스마트폰을 활용한 산사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6월
	▪ 임업분야 한-중 FTA 대응 기본계획 수립	6월
▪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6월	
3분기	▪ 밤·표고 등 품목별 세부 지원방안 마련	9월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 기준 마련	9월
	▪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추가 지정	4월, 9월
4분기	▪ 산림재해보험 대상 1 품목 추가	10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추진방안 마련	10월
	▪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12월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기본계획 수립	12월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12월
	▪ 지자체별 목재문화지수 개발	12월
	▪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산림기본법' 개정안 마련	12월

참고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법령명	주요내용	재·개정시기 (국회제출)
산림기술진흥법(제정)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 시행업을 통합관리하고, 산림 기술자 관리를 일원화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 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 및 지원, 사유림의 기능구분 및 관리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절차 및 타당성 조사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상반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산림보호법(개정)	○산불방지 고용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근거 마련 및 산불방지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수목진료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나무의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산림기본법(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 노력,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이행, 남북한 간 산림분야 교류 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등	○국회제출 예정일 : '13년 하반기

참고2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산림사업 추진계획

지 표	2012까지	2013~2016	2017까지
숲가꾸기 면적(천ha)	2,650	1,200	4,150
임도시설(km)	17,717	4,212	23,338
도시숲 / 학교숲(개소)	2,310/1,112	568/899	3,025/2,361
가로숲(km)	36,618	2,175	39,428
자연휴양림(개소)	152	22	180
치유의 숲(개소)	10	22	34
숲길 네트워크(km)	6,791	7,277	16,252
산지 유통센터(개소)	72	48	150
사유림 매수(천ha)	202	85	312
산불 진화헬기(대)	47	3	50
산악기상망(개소)	30	170	200
사방댐(개소) / 계류보전(km)	6,745/5,293	4,005/2,534	11,900/8,577
수목진단센터(개소)	13	7	25
산림훼손지 복원(ha)	204	458	804
국립수목원(개소)	1	2	4
해위조림 면적(천ha)	280	123	440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 Presentation (ppt)



지금부터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의 /
새 시대를 열기 위한 /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 보고 드리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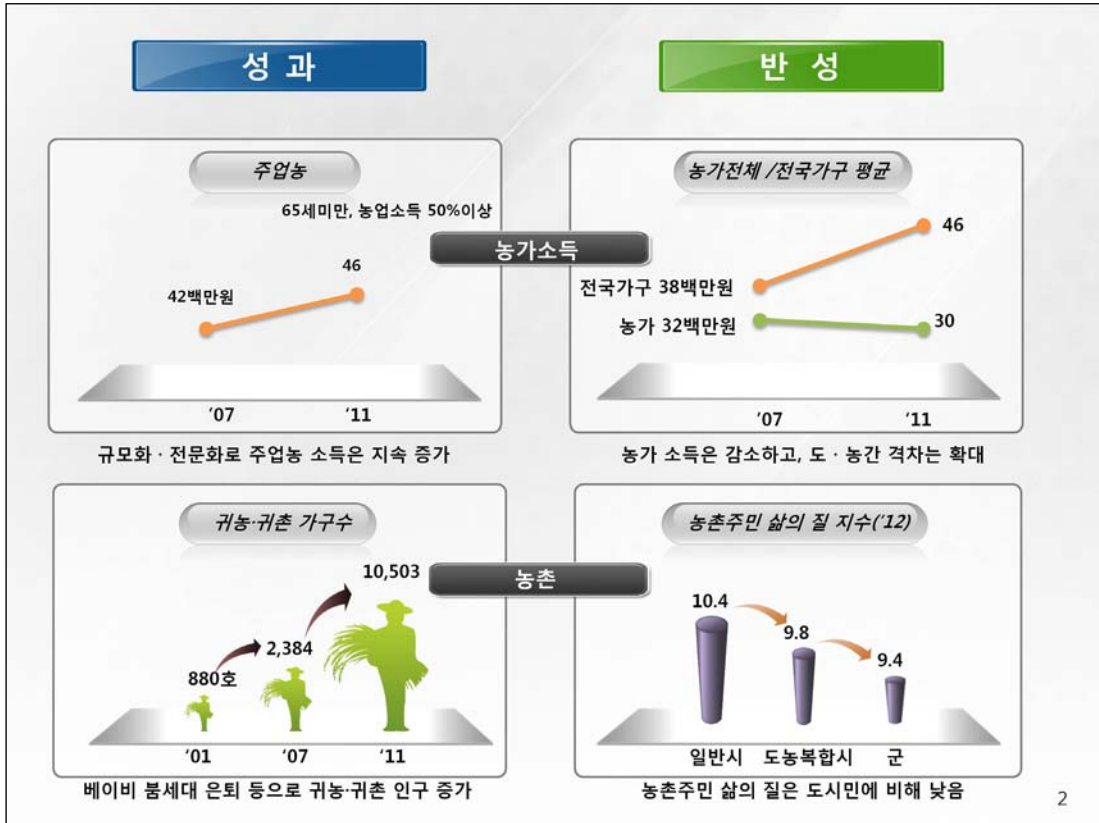
보고순서

- I. 성과와 반성
- II. 농정 비전과 전략
- III. 국정과제 실천계획
- IV. 부처 협력 과제
- V.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

보고드릴 순서는 / 농정 성과와 반성 /
국정과제 실천계획 / 부처 협력 과제 순입니다. /



먼저, 그동안의 농정 성과와 반성입니다. /



주업농의 소득은 /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
전체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서 / 도농간 소득격차는 /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가구가 / 늘어나고 있지만 /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1인당 부가가치는 / 기계화, 품질 고급화를 통해 /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 농업분야의 과학기술은 /
 선진국의 약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

식품산업 매출 규모가 / 2011년에는 144조원으로 / 크게 늘어났지만, /
 곡물자급률은 / 오히려 22.6%로 떨어졌습니다.

농업·농촌이 / 어느 때 보다 어려운 /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 농정비전과 전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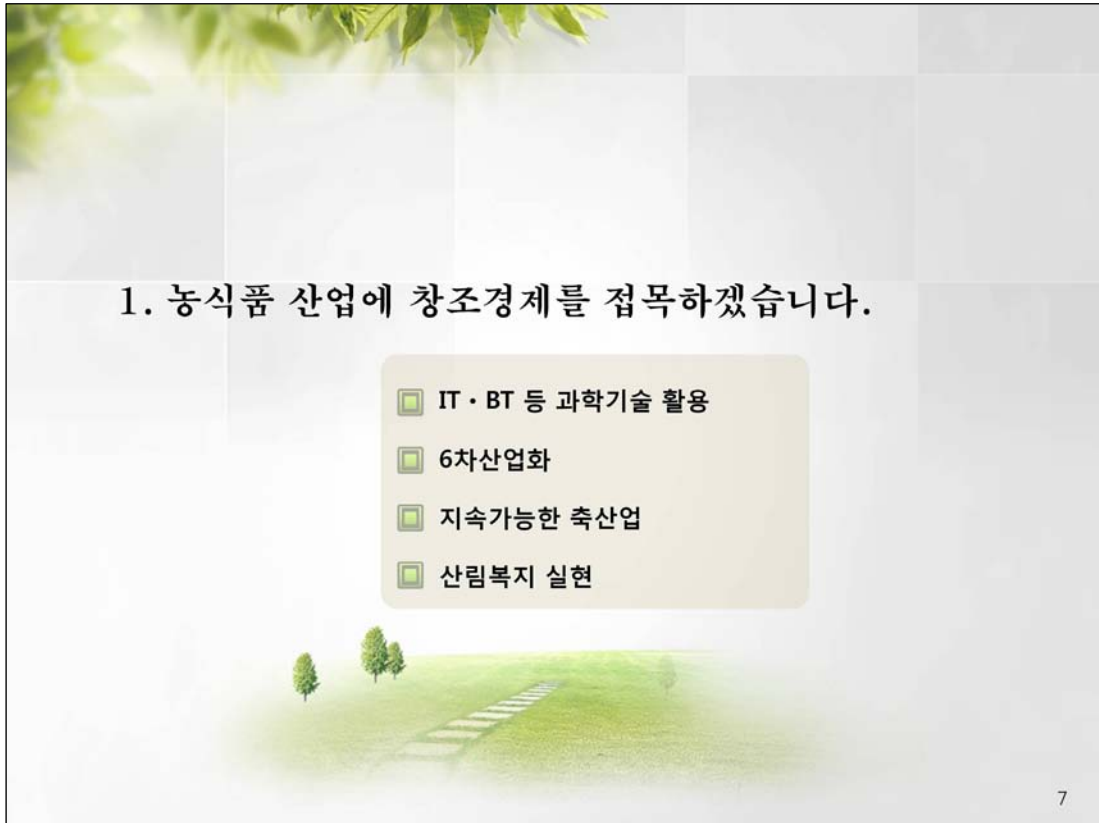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의 /
 새 시대를 연다는 비전 하에 /
 창조 경제를 통한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 유통 효율화, /
 농가소득 증진, / 농촌복지 확대를 /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부처간 벽을 허물고, / 엄정한 평가에 기초한 / 스마트
 농정, /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 신뢰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 농식품부 5대 국정과제, / 19개 실천계획에 대해 /
보고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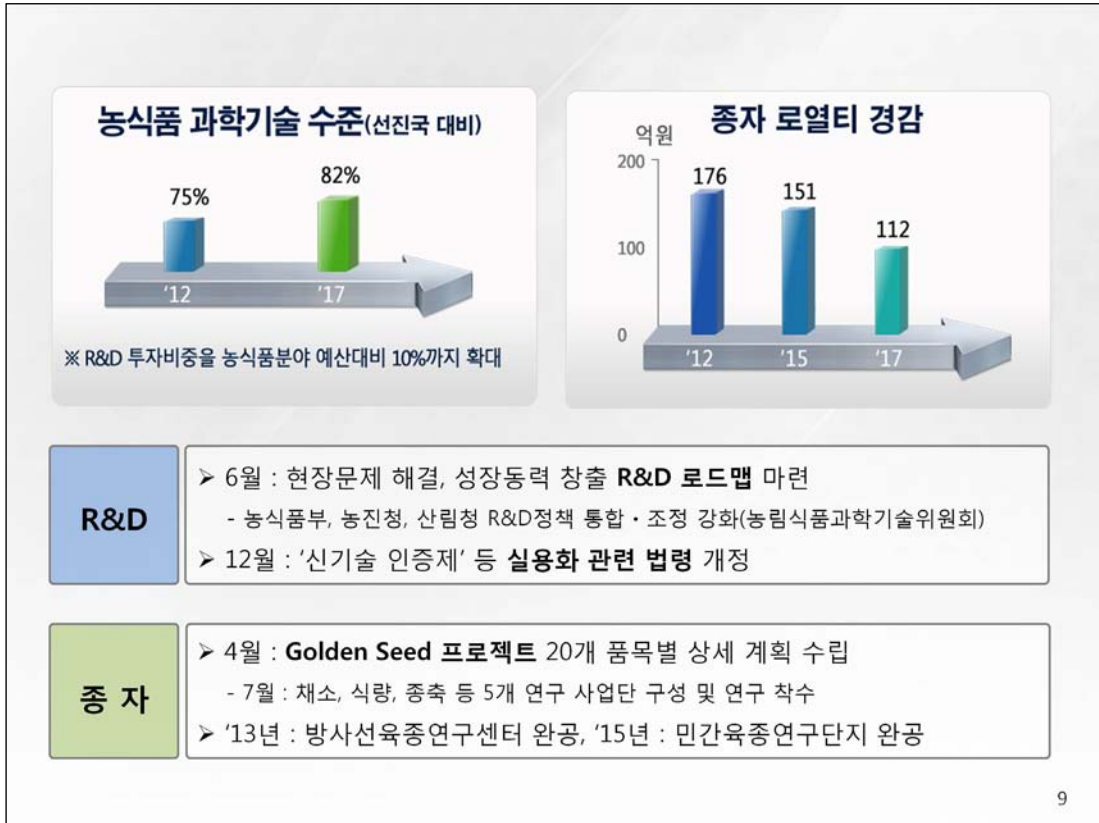
첫 번째 과제로 / 과학기술 활용, /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
농식품 산업에 /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

1-①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IT, BT 등 / 첨단 과학기술을 융복합 해서 /
농업을 한 단계 /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 / 다양한 분야에 /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R&D 투자를 / 확대하겠습니다.

6월까지 /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 R&D 투자 /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종자 로열티도 / 줄여나가겠습니다. /

금보다 가치있는 종자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 4월까지 /

골든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에 대한 / 구체적인 / 추진계획을 마련 하겠습니다.

1-② 농업을 가공·관광과 연계, 6차산업화 하겠습니다.

농가의 식품가공 참여 확대

- 농업인 공동가공센터 설치(12개소 → 16)
- 농공상 융합형기업(300개소) 지원
 - * R&D, 교육, 자금 등 지원 : 382억원 → 500
-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육성(67개소 → 75)

농촌관광 활성화

- 체험·휴양마을 지정(700개소 → 800)
-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 도농교류 활성화
 - * 도농교류의 날(7.7), 인성학교 지정(50개소)
 - * 농촌기업 사회공헌인증제 도입(3월)
 - * 1사1촌 활성화(0.9만쌍 → 1)
 - * 도시농업 활성화

- 5월 : 농촌 6차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전담조직 설치
- 6월 :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식품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 12월 : 6차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 12월 : 농가 식품가공·유통·관광 등 6차산업 규제 발굴·개선

10




농업을 가공 / 관광과 연계해서 / 6차산업화 하겠습니다.

공동가공센터의 설치, /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 농업인이
식품 가공분야에 / 더 많이 /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지정, / 농촌 관광사업장의 등급제, / 도농교류 등을
통해 / 농촌 관광을 /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5월에는 / 6차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 6월까지 /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③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환경부담 완화	사육관리 선진화	친환경 축산
<p>자원화율</p> <p>88.7% → 89% → 91%</p> <p>공동 자원화율</p> <p>9.1% → 11.9% → 17.2%</p> <p>'12 '13 '17</p>	<p>MSY(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출하마리수)</p> <p>선진국 : 25</p> <p>'12 : 156 '13 : 17</p> 	
<p>➢ 4월 : 가축분뇨 자원화 증장기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처리 → 공동자원화 (고품질 퇴액비·에너지 생산) - 경종농가 퇴액비 공급 - 시비처방서 발급 등 퇴액비 품질 제고 	<p>➢ 9월: 무허가축사개선 관련법령 개정 * 2월 개선방안 기 마련</p> <p>➢ '13년 : 축사시설 현대화 ('12 : 3,880억원 → '13 : 4,325)</p> <p>➢ '13년: IT와 결합한 선진모델 도입</p>  <p><자동급여기> <자동착유기></p>	<p>➢ 3월 ~ : 산지축산 모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관계기관(농진청·산림청) 참여 TF 운영 - 국유림 활용모델 설정, 일반농가 적용 가능성 검토 <p>➢ '13년: 친환경축산단지시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소, 개소당 10ha이상

축산업을 /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축산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 4월까지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육관리가 선진화 되도록 / 축사시설 현대화, / IT와 결합한 / 선진 축산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70년대, /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 산지 초지를 개발하고, / 축산업의 기반을 닦은 / 성공한 경험을 /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 친환경 축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 당장 /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 T/F를 운영하겠습니다.

1-④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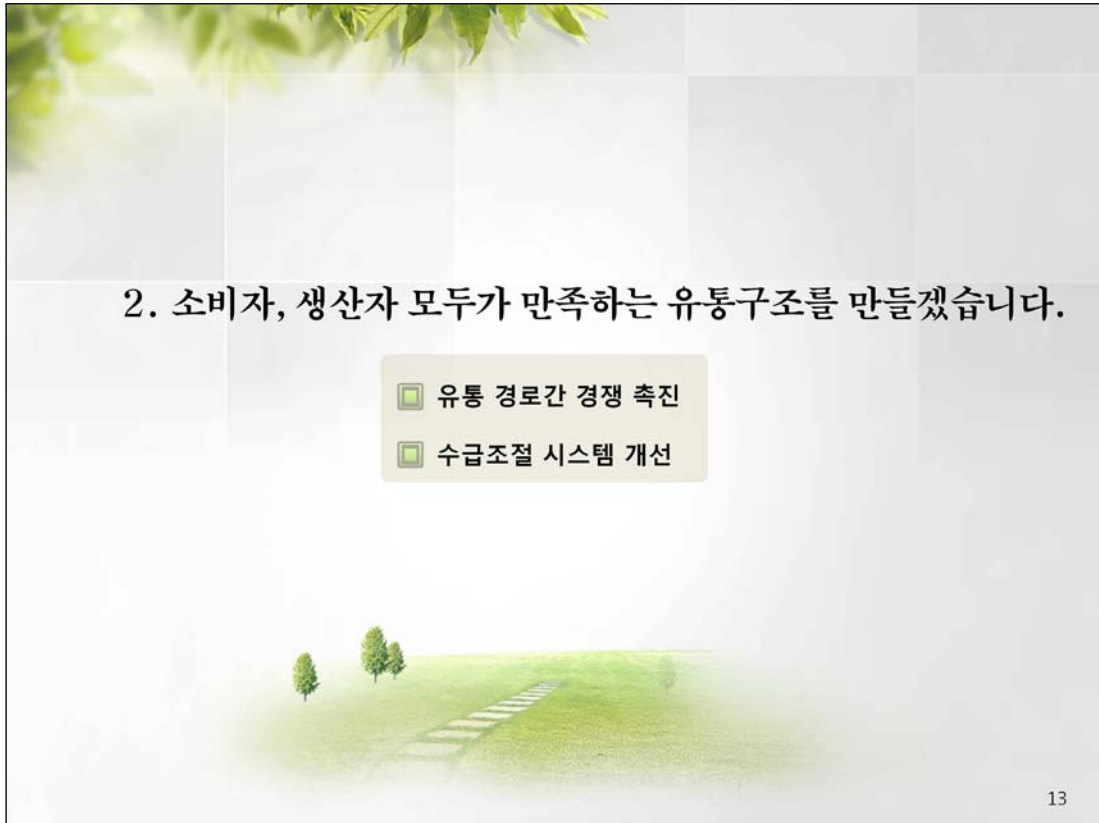
숲과 더불어 / 행복한 산림복지를 / 실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

경제림을 조성하고 / 숲가꾸기를 확대하겠습니다.

3월까지 / 임업분야에서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에게 / 보다 나은 서비스를 / 제공하기 위해 / 6월까지 산림복지 단지의 조성 과 지원을 위한 / 법률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 만족하는 /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
만들겠습니다.

2-①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 마련

주체	추진내용	유통단계	비중
농협중심 계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조직화·규모화 • 도매물류센터 건립 • 판매기능 강화 	3~5	현재 12% → '16년 20%
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형 직매장 확충 • 산지-도시농협 연계 강화 •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1~2	4% → 10%
도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시설 현대화 • 물류비 절감 	5~6	53% → 40%

14

유통경로간 / 경쟁을 촉진하고 /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
 농업인은 더 받고, / 소비자는 덜 내도 되는 / 유통구조를 / 만들겠습니다.

농협의 판매기능을 강화해서 / 소비지에서 / 농협유통의 비중을 /
 12%에서 / 2016년까지는 20%로 확대하겠습니다.

로컬푸드형 직매장 확충 등 / 직거래 유통비중도 / 4%에서 10%로 /
 확대하겠습니다. /

농협중심계열화

- 4월 : 공정거래사무국 설치(농식품법인연합회)
- 6월 : 농협 안성 도매물류센터 완공('14 : 밀양 → '15 : 강원·장성·제주)
- '13~ :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 시스템 확립
* 안심축산 시장 점유율 : ('12)11%(한우)/4.7%(돼지)→('13)18.6/8.6→('16이후)37.1/25

직거래

- 4월 : 체험 등 다각적 홍보 전개 및 직거래 지원센터(aT) 설치
- '13~'17년 : 생산자/소비자 주도형 직매장 확충(20개소 → 100) 및 대규모 직거래장터(1개소 → 10) 개설
- '14년 :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도매시장

- 5월 : 정가 수의거래 확대 방안 마련 및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11월 : 가락시장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 설정 등 물류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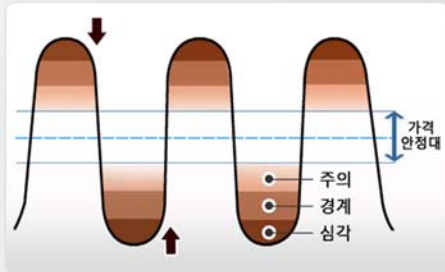
15

유통 계열화를 위해 / 6월까지 / 안성에 도매물류센터를 완공하고, / 축산물도 / 협동조합 중심의 / 선진국형 패커를 육성해서 / 도축·가공·유통의 / 일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직거래 확대를 위해 / 4월부터 /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 직매장과 대규모 직거래 장터도 /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도매시장은 / 5월까지 /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과 / 전국 /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 마련하겠습니다.

2-②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수급안정을 기하겠습니다.



가격 급등시	심각	해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등
	경계	물량공급, 저율관세 증량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가격 급락시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경계	저율관세 수입 연기, 가공용 확대
	심각	생산 감축, 소비 확대 등

※ 품목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 가격변동시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 지양

- 4월 :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및 소비자단체 협조 등 국민과의 이해·소통 강화
- 5월 : 관측강화, 농협·유통공사 등 수급조절 기능 연계방안 마련
- 6월~ :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화하여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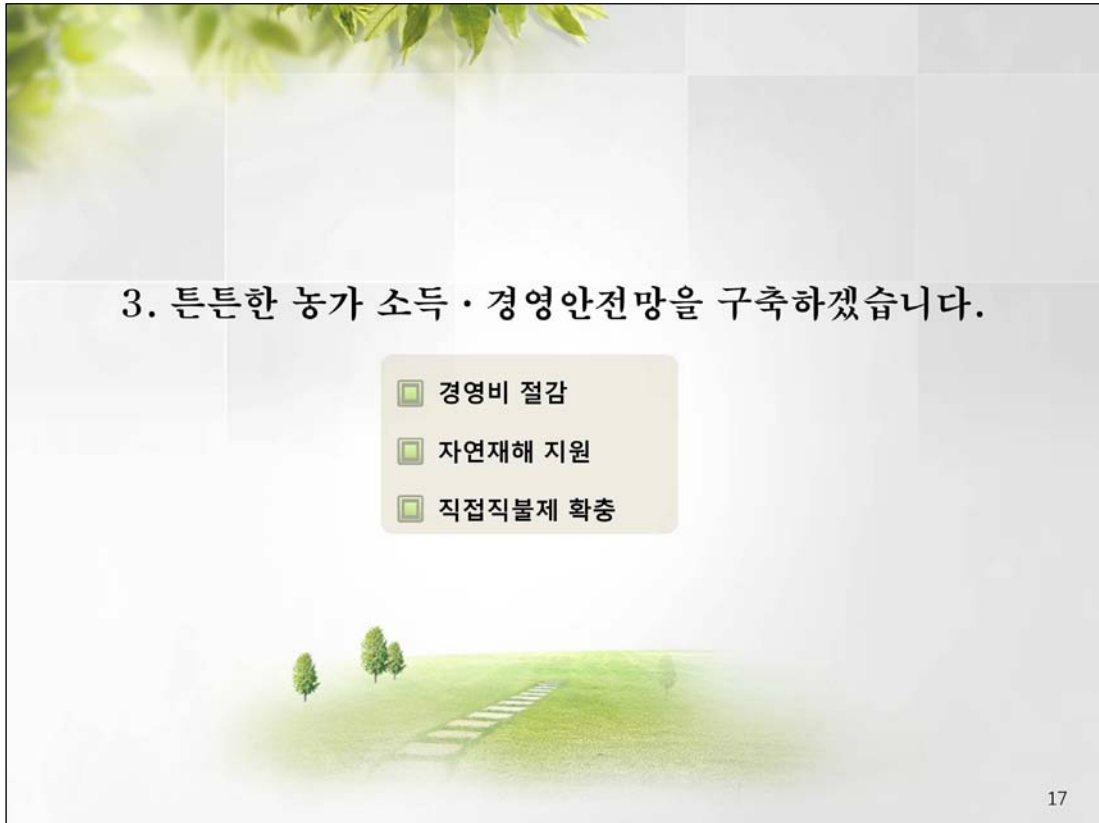
유통간담회(3.13) 참석 전문가와 함께 대책 수립, 추진상황 지속 점검

그동안 / 물가안정을 위해 / 정부가 / 지나치게 농축산물 수입에 / 의존한다는 /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 사전적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 가격변동 수준에 따라 /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들을 / 매뉴얼화해서 /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정한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시장에 맡기되, / 이를 벗어나면 / 정부의 역할을 통해 /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 성공하기 위해서는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4월 중에 /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 각 계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 튼튼한 농가소득 및 /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형

- 전업농
- 중소농
- 영세·고령농

지원방향

-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 IT·BT를 통한 경영혁신 및 비용 절감
- 재해보험, 희생프로그램 등 경영안정
- 전문경영체로 육성
- 마을 영농회사 등 공동경영체 육성
- 가공·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
-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지원
- 경영이양 직불, 농지연금 등 은퇴여건 조성

18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은 / 조직화규모화계열화와 함께, / 경영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농은 / 공동경영체로 육성하고, /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고령농은 / 사회 복지지원과 함께, / 은퇴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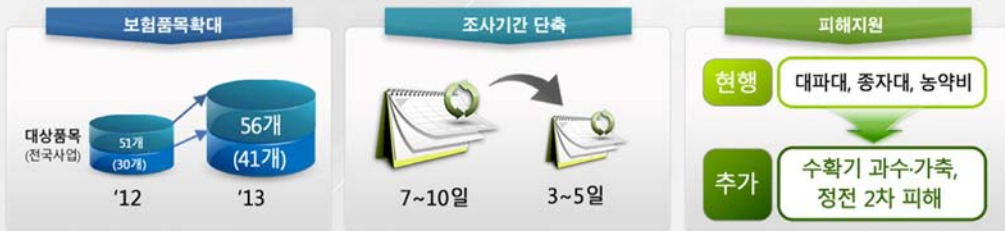
- ▶ 4월 :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
 - ▶ 5월 : 담합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공정위)
 - ▶ 10월 : 농협 농자재 유통센터 1개소 착공('15년까지 3개소 완공)
 - ▶ '13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농기계 임대/은행, 들녘별 경영체 육성
- * [들녘별 경영체 사례] 한그루영농조합(경영규모 320ha) : 10a당 생산비 7.5% 절감, 경영비 6.5% 절감

농업경영비에서 /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 최대한 /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 4월까지 / 농자재산업 발전대책과 / 조사료 증산대책을 / 마련하겠습니다.

5월에는 /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 농자재 공급업체의 / 담합방지 대책을 / 마련하겠습니다.

3-②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4월 :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 * 보험대상품목 확대('17년까지 66개), 보험료 차등지원, '16년까지 모든 품목 종합보장방식 전환
- 6월 :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 * 국가차원의 손해평가 인력 양성, 보험관리 전담체계 정비 추진(상반기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 6월 : 전문 손해평가 인력 400명 선발·투입
- 6월 :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방재청 소관) 개정 추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 빠른 시일 내에 /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 56개로 확대하고, / 피해 조사기간을 /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4월까지 /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을 / 확정하고, / 6월에는 /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 추진하겠습니다.

3- ③ 직접 지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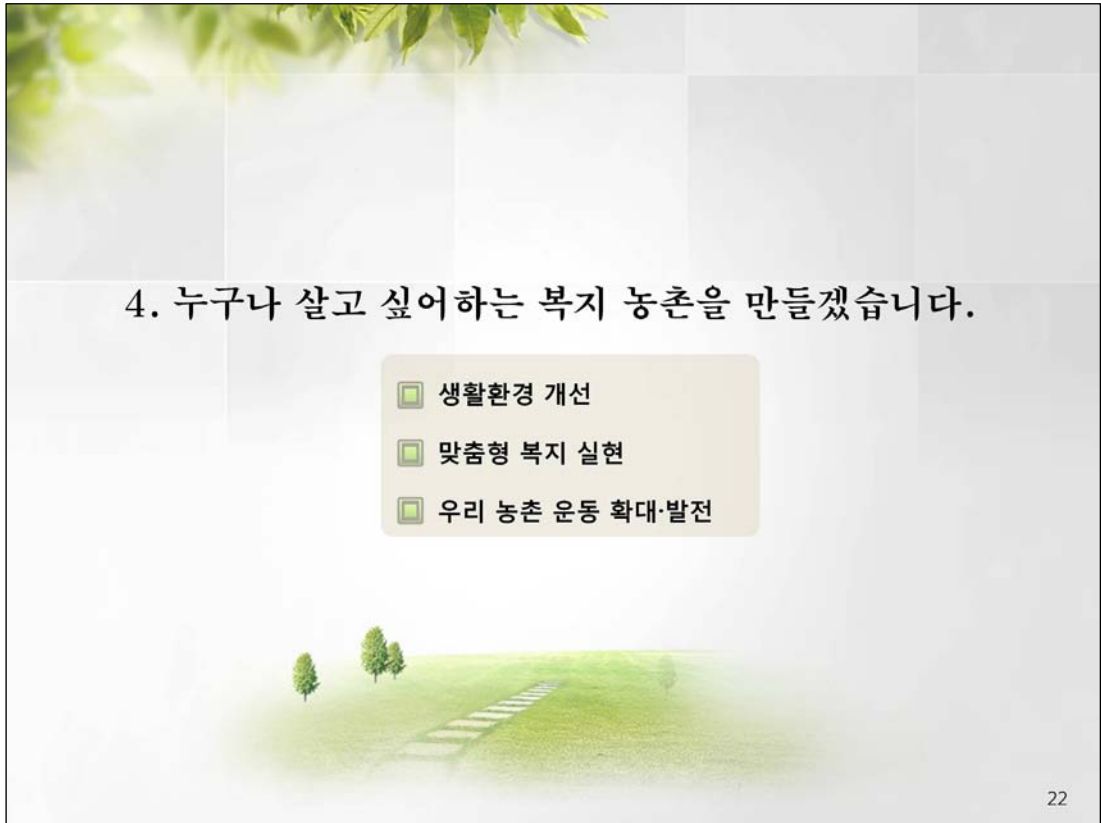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공익형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만원/ha) - ('12) 70 → ('13) 80 → 100 ● 밭(품목) - ('12) 19 → ('13) 26 → ('14이후) 주요품목 위주로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목표가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검토 - 경관, 조건불리, 친환경 직불제 등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 밭직불 대상 품목 확대 시행규칙 개정 ➢ 5월 :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인상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 쌀 목표가격 변경안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 농업·농촌환경 프로그램 도입 T/F 구성 및 연구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

쌀 고정직불은 / 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 밭직불은 / 대상품목을 / 2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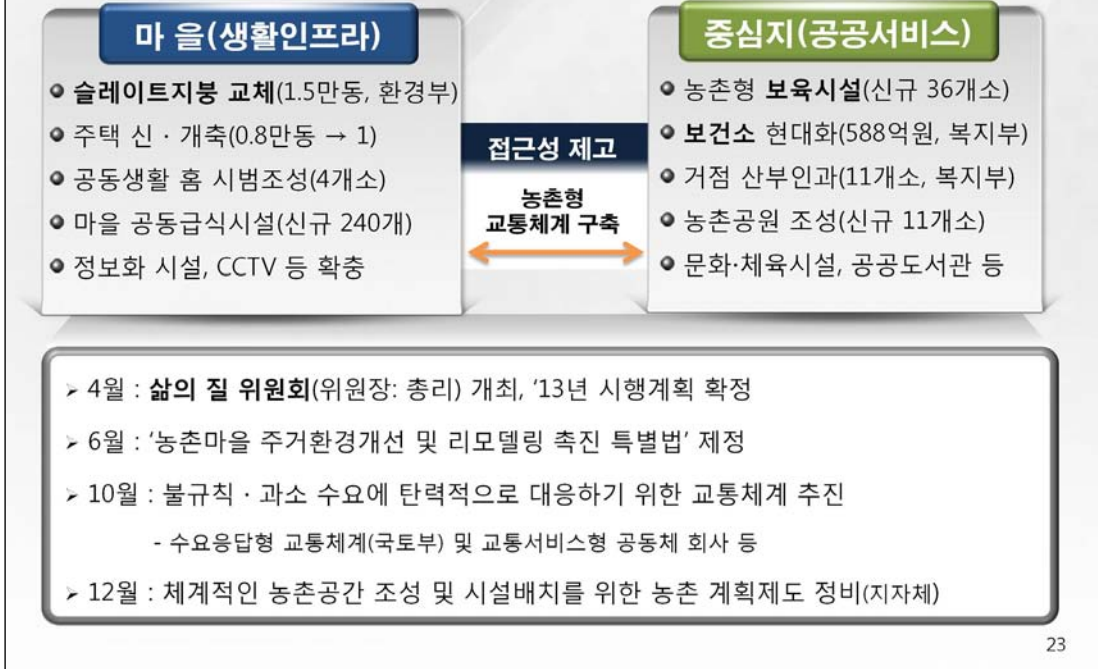
지난해까지 적용해온 / 쌀 변동직불 / 목표가격 변경을 위해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라 산정된 목표가격안은 / 쌀 80kg당 17만4천원이지만, / 국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 높기 때문에 /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 누구나 / 살고 싶어하는 /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4-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농촌에는 / 노후된 슬레이트 가옥이 / 42만동이나 되며, /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 매우 열악합니다.

앞으로 마을은 /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 읍·면 등 중심지는 /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 마을과 중심지간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4월에는 / 총리주재 위원회를 통해 / 농촌주민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세부계획을 / 확정하겠습니다.

4-②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296만명)	고령자(65세 이상 18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39만명), 국민연금(26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신규 지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보상금 : (12) 8천만원 → (13) 9 ◆ 영농·가사 도우미(1.5만명)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연금(2.2천명 →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농지 평가기준 변경 ◆ 기초생활수급제 보완(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액 산정시 농촌특성 반영 ◆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조성(4개소) ◆ 경로당 가사도우미(930개소 → 1,400)

- 1월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 4월 : 농업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복지 실태조사
- 10월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 12월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공시지가 → 감정평가) 개선

24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에 대응한 /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는 / 건강연금보험료, / 안전재해보험 등의 지원을 / 확대하고, / 농업인 질환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 새로 /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게는 / 농지연금,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4월에는 / 농업인,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 10월에는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을 / 마련하겠습니다.

4-③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주민 주도로 도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 지역 발전

- 색깔 마을 만들기(3천개)
 - 체험관광, 문화마을 등
- 공동경영체 육성(3천개)
 - 돌널별 경영체, 공동체회사

도시민 참여

- 도시자본·기술·경험활용 일자리(일터)
- 농촌 생활환경 개선(삶터)
- 지역축제, 치유의 숲 등(쉼터)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 참여
- 주민·도시민 등 범국민 운동
-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

- 3월 : 기업의 농촌 사회공헌인증제 도입
- 6월 : 농촌재능기부 국민운동본부 구성
- 9월 : 도시인재, 자본, 기술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
- 12월 : '일자리 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법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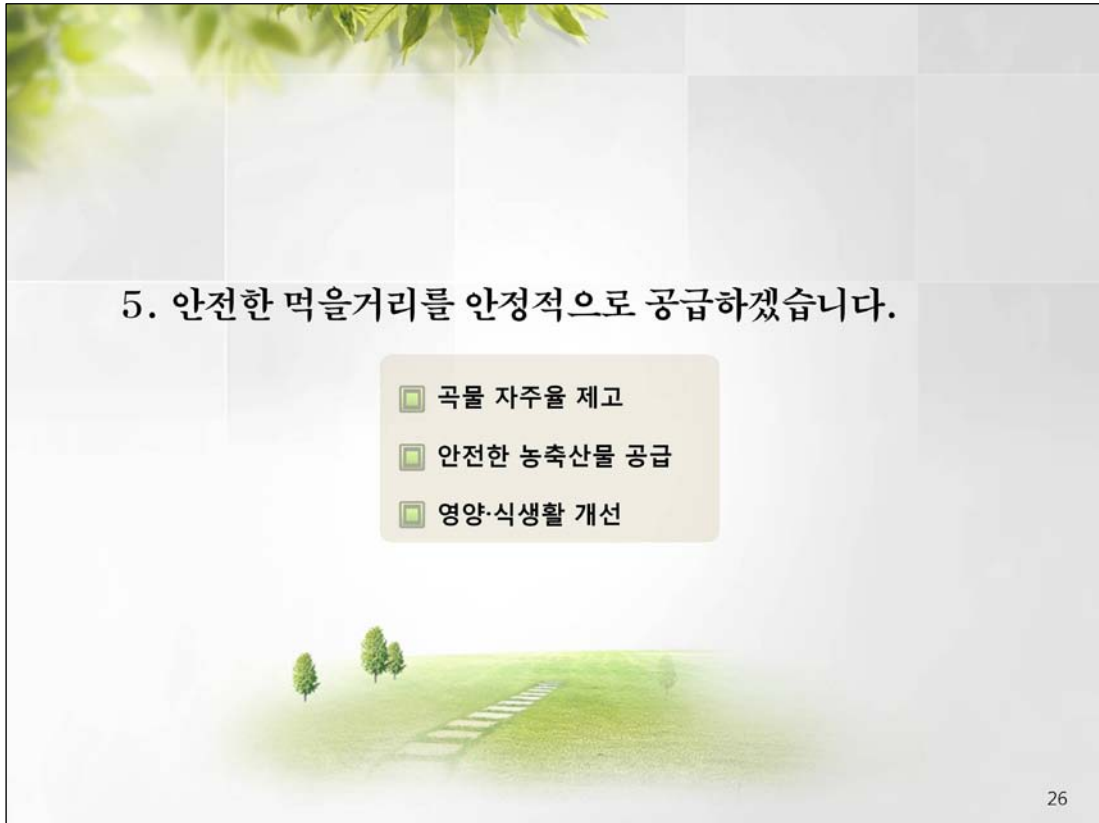
25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 기존의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에서 탈피해서 / 주민 스스로가 /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해서 / 색깔있는 마을을 만들고, /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통해 / 농촌을 새로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 관계부처와 주민 / 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 범국민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 9월까지 /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 국민에게 / 안전한 먹을거리를 /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5-① 식량안보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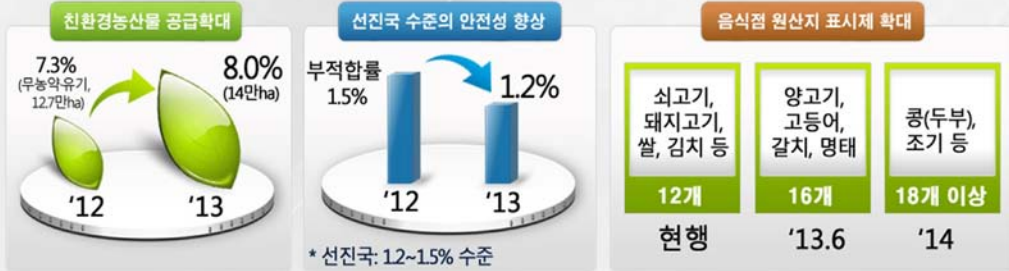
- 5월 : ODA 연계지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등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7월 : 곡물 자급률/자주율 목표치 재설정 및 실천대책 마련
- 9월 : 공공비축 대상 확대(쌀 → 밀·콩),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 12월 :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축소('농지법 시행령' 개정)
- 12월 : 유휴농지 이용 실태조사(4~10월), 활용계획 수립
- 12월 : 발기반 정비 등 농지이용 범용화 계획 및 산지활용 계획 수립

어떠한 상황에서도 / 흔들리지 않는 / 확고한 / 식량안보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7월에는 / 곡물자급률과 자주율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 실효성 있는 대책을 /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연말까지는 / 유휴농지와 산지에 대한 / 종합적인 /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 해외농업개발 / 활성화 방안도 / 마련하겠습니다.

5-②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6월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12개 → 16)
- '13년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42개소 → 44) 및 친환경농업지구(1,076개소 → 1,112) 확대
- '13년 : **GAP(농산물우수관리) 생산자조직**(40천농가 → 45) 및 **시설확충**(718개소 → 800)
- '13년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12 경기 광주 기조성, '12~'15 전남 나주)

28

품질 좋고 / 안전한 농축산물을 / 공급하겠습니다. /

올해는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 8%까지 확대하고, / 안전성 부적합 비율은 / 1.2%로 낮추며,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 생산자 조직을 /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 위생 수준을 갖춘 / 유통시설을 / 확충하겠습니다.

5-③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 6월 : 농촌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 식생활 및 영양 실태조사 실시
- ▶ 9월 :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식생활 안내서 및 조리법 개발·보급
- ▶ '13년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및 로컬푸드 급식 확대
- ▶ '13년 : 초중고 학생·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실습, 체험농장)

국민의 / 건강한 식생활을 /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민의 영양관리는 / 국가적인 책무이며, / 잘못된 식습관은 /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6월까지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 식생활과 영양실태를 조사하고, / 9월부터는 /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 식생활 안내서 및 조리법을 /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한 / 식생활 교육 및 / 로컬푸드 급식도 /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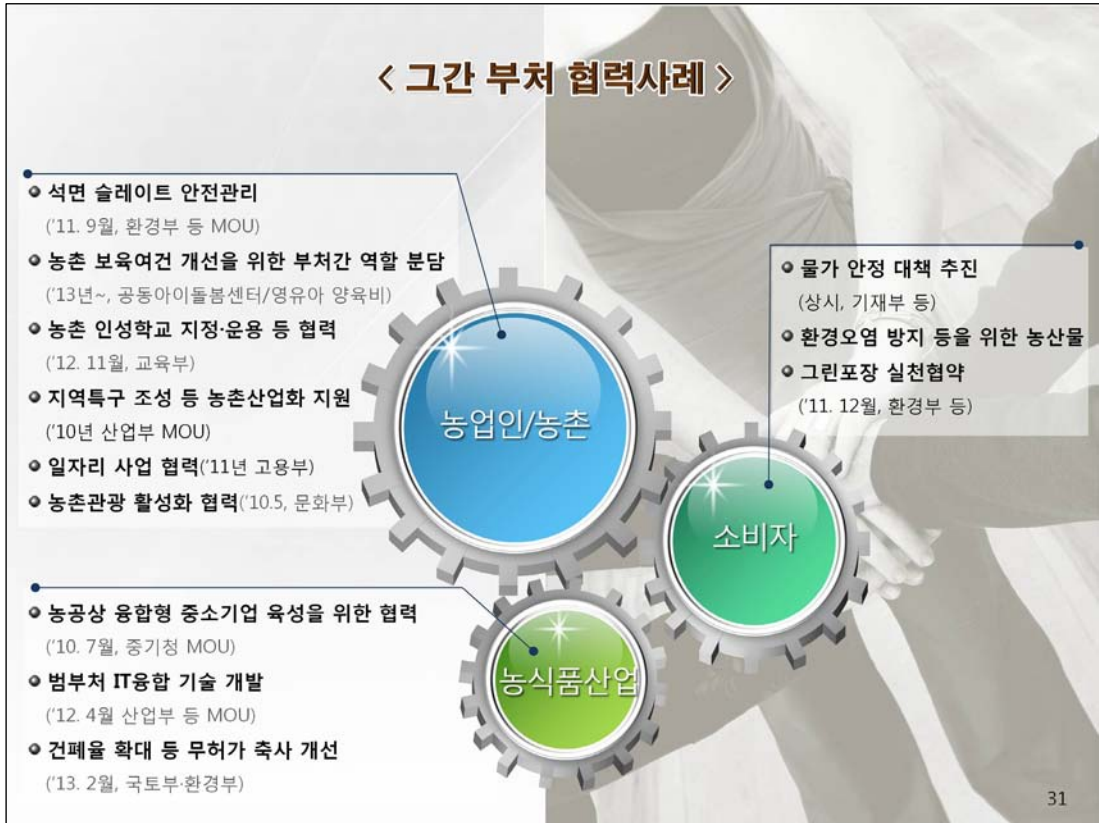
IV. 부처 협력 과제

1. 일자리 창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안전 농축산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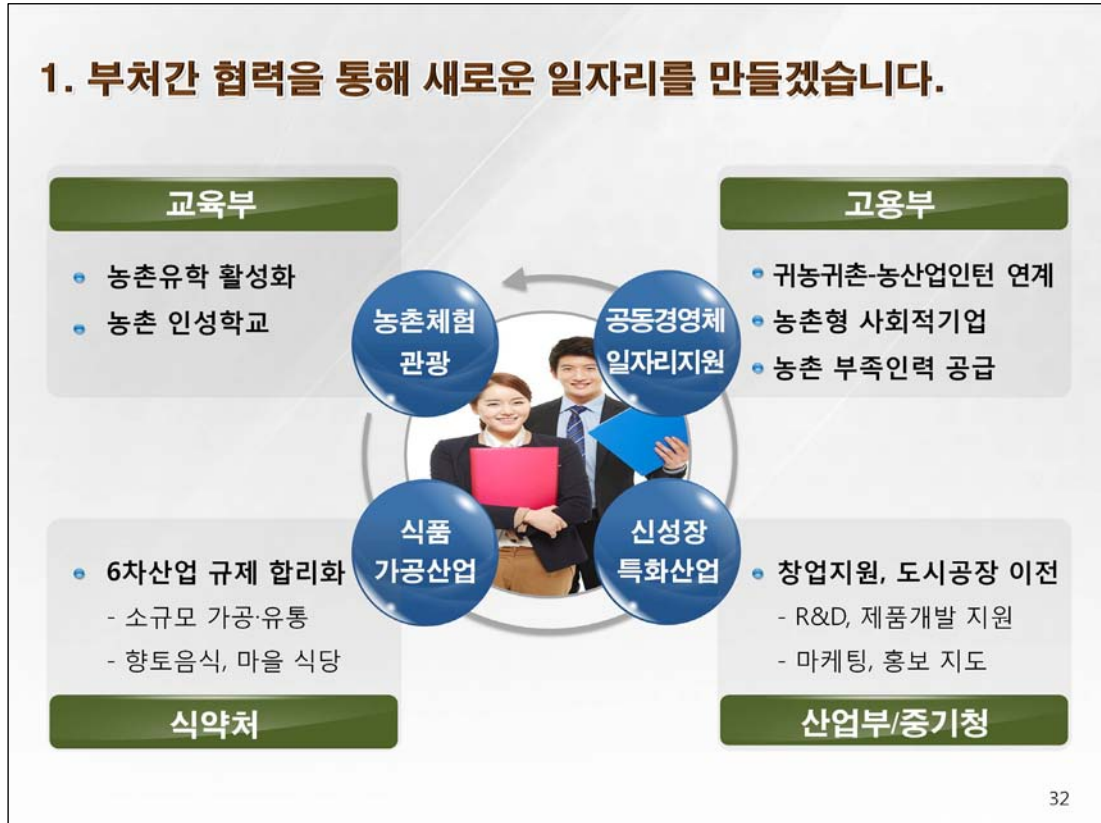
30

다음은 부처 협력 과제입니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 여러 가지 이슈와 /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 농식품부 / 혼자만의 힘으로 / 다 /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 석면 슬레이트 안전관리 등 / 관련부처와 /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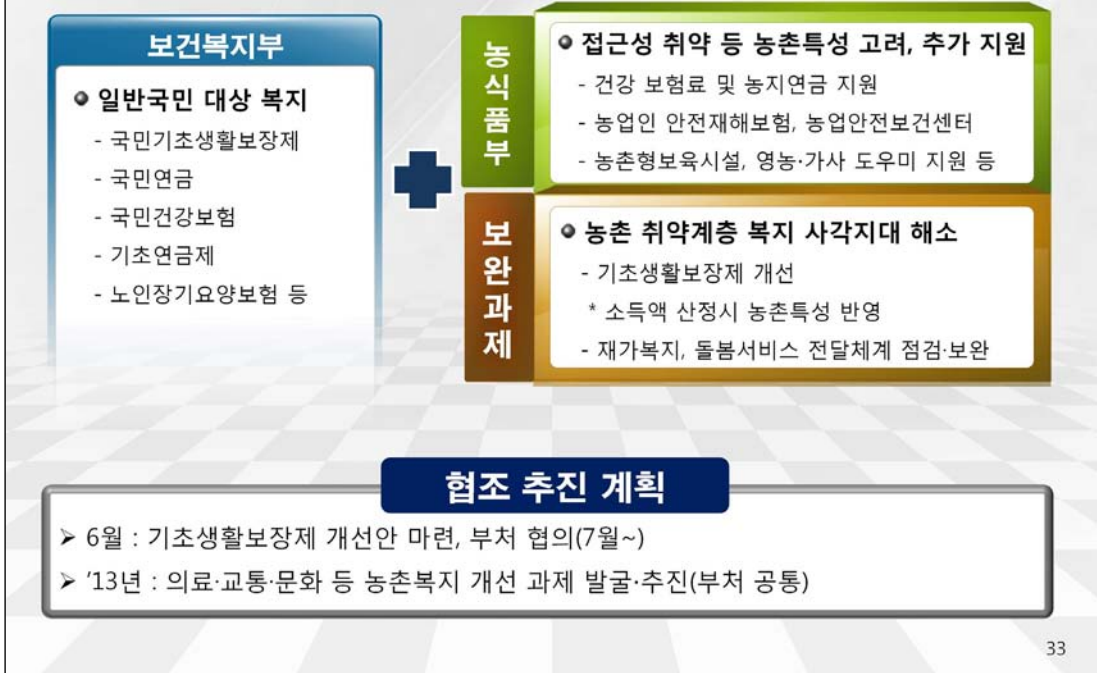


앞으로는 / 더욱 긴밀한 부처협력을 통해 / 새로운 일자리를 / 만들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을 / 활성화하기 위해 / 교육부와 / 농촌 인성학교 운영을 협력하고, / 고용부와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 농촌의 부족한 인력 공급문제를 /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는 / 식약처와 6차산업에 대한 /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협력하고, / 특화산업 분야에서 / 산업부, 중기청과 / 창업지원 등을 위해 / 협력하겠습니다.

2.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3

복지부와 협력해서 /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 해소하겠습니다.

복지부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는 별도로 / 농식품부는 / 건강보험료, 농지연금 지원 등 / 농촌복지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 지대가 여전해서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 복지 전달체계의 / 점검과 보완이 /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 연말까지 / 복지부와 공동으로 / 농촌주민 복지 개선과제를 발굴, /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식약처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식약처)

-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 식품안전기준 설정
- 부적합식품 경보시스템 및 통합 DB 관리



안전생산(농식품부)

- 안전생산 (친환경농산물, GAP)
- 질병관리 (검역, 방역)
- 품질관리 (인증농식품)

“안전식품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서 시작합니다.”

- 4월 : 총리실 및 관련기관과 **상설협의체 구성**
* 식품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 농촌 현실에 맞는 식품관련 규제 등 협의
- 9월 : 관련부처 간 **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 식약청(Foodnara)와 농식품부(Foodsafety) 사이트 연계, 식생활·영양 정보 제공 병행
- 12월 : 부적합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생산지 추적조사·차단**
* 도매시장 부적합(식약처) ↔ 생산지 출하중단(농식품부)

34

식약처와 함께 / 국민들에게 / 안전한 농축산물을 / 공급하겠습니다.

식약처는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 우리는 / 안전한 농산물 생산, / 가축 질병관리 등을 /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4월까지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 관련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 9월까지 / 식품 종합정보망을 통해 /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V.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

1.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2. 평가·성과관리 강화
3. 사전 위험관리 강화
4.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

35

마지막으로 / 창의·혁신과 현장에 기초한 / 스마트 농정으로 /
농업인의 신뢰를 / 회복하겠습니다.

1.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초통계 확충

-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
 - 식품, 농촌, 생명산업 등
- DB를 활용한 통계 개발
 - *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D/B로 전환(18년)

맞춤형 지원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전업농(경쟁력 향상), 중소농(전문화), 고령·영세농(복지)
- 성과 측정을 위한 유형별 통계 생산

▶ 4월 :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유형별 통계 생산 방안** 마련
▶ 5월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
▶ 6월 : 신규통계 개발, DB연계 활용 등 통계 발전방안 마련
▶ 8월 : 개별 사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36

먼저, / 경영체 등록정보를 재정비하고, /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 유형별로 /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4월에는 /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통계와 /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고, / 5월까지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 수립하겠습니다.

2. 예산과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선정** 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적격자 선정 및 사후관리
- 경영체 DB, 공간정보 DB, R&D 정보 DB
- 점검** 시설관리 등 산하·유관기관과 현지 합동 확인·점검 실시
부당지원 신고 접수처 운영 및 포상금제 도입 검토
- 평가**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미흡사업 개선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외부전문가 중심 심층평가 실시

- ✓ 4월 : 농식품재정·투융자 평가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 ✓ 4월 :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부당지원 신고접수처 설치
- ✓ 7월 : 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및 직불제 시범 적용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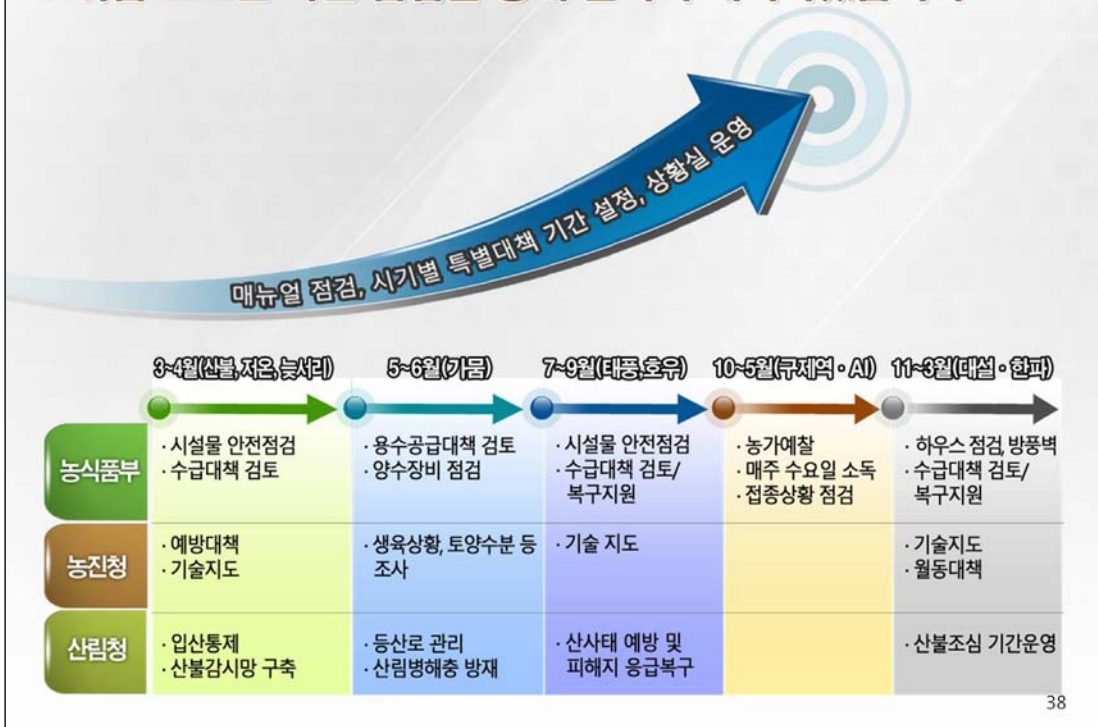
농업부문에 대한 / 투자성과가 / 미흡하다는 지적이 /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 예산과 정책의 성과가 / 제대로 / 나타나도록 /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 상시 모니터링과 /
현지 확인·점검을 /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 엄정한 평가를 통해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4월까지 / 투융자 평가시스템 개편방안을 / 마련하겠습니다.

3.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 농업분야의 위험을 / 사전 점검을 통해 /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산불과 가뭄, 태풍 등 반복되는 재해는, / 사전에 / 철저히 대비하면 /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요 재해에 대해서는 /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고, / 시기별로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공감농정

- 3월 : 새정부 농정과제 실천을 위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운영**
- 소비자, 생산자, 정부, 학계, 언론 등이 함께 새정부 농정 구체화
- 5월까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마련**

지방농정

- '13년 : 지역 특수성을 반영, **시·군단위 농업·농촌 종합계획 통합·정비**
- '13년 : 지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확립

현장농정

- 4월 :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책공모 실시**
- 6월 :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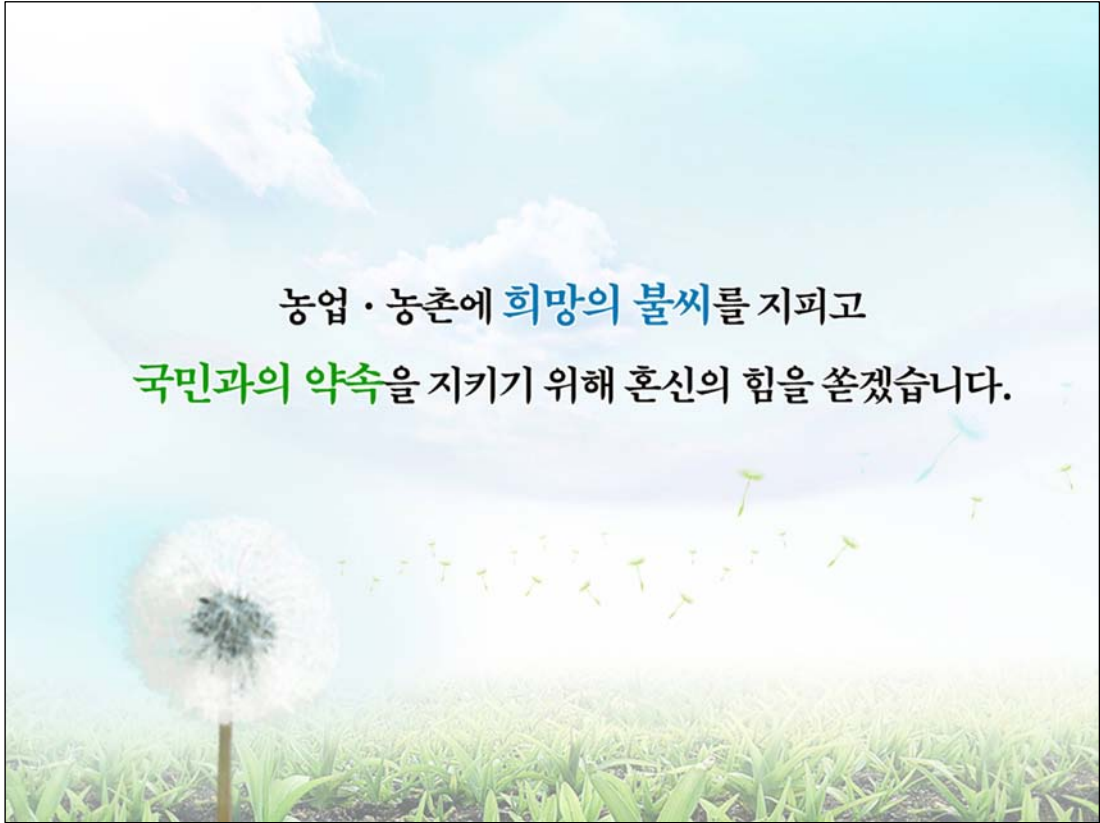
39

국민이 공감하고 / 신뢰받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문제가 /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 농촌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 국민의 지지와 이해 없이는 / 불가능합니다.

3월부터 / 새정부의 농정과제를 /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 「국민 공감 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5월까지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정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 연말까지 시·군단위 농업·농촌계획 제도를 정비하고, / 지자체에 대한 /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공직자 / 모두는 / 농업·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강건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12년 51개 품목 → '13년 56개 → '17년 66개)

쌀 고정직불금 인상
(70만원/ha → 80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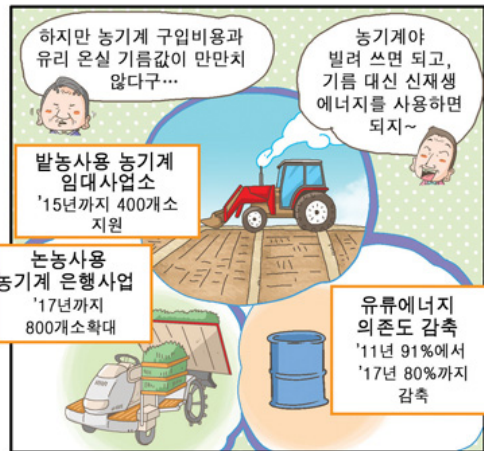
직불금

발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15년까지 400개소 지원
논농사용 농기계 은행
'17년까지 800개소 확대)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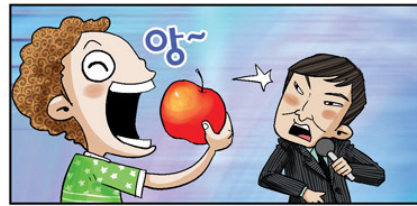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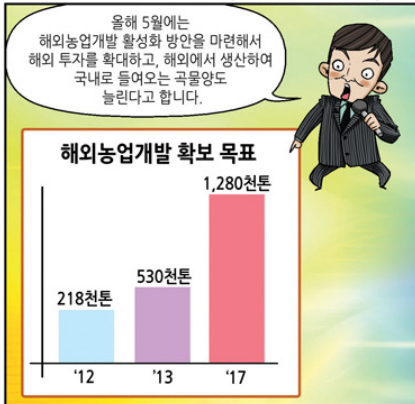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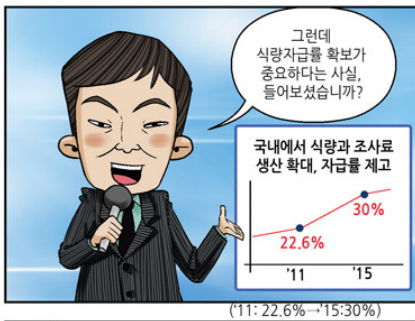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2.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



박근혜 정부 농식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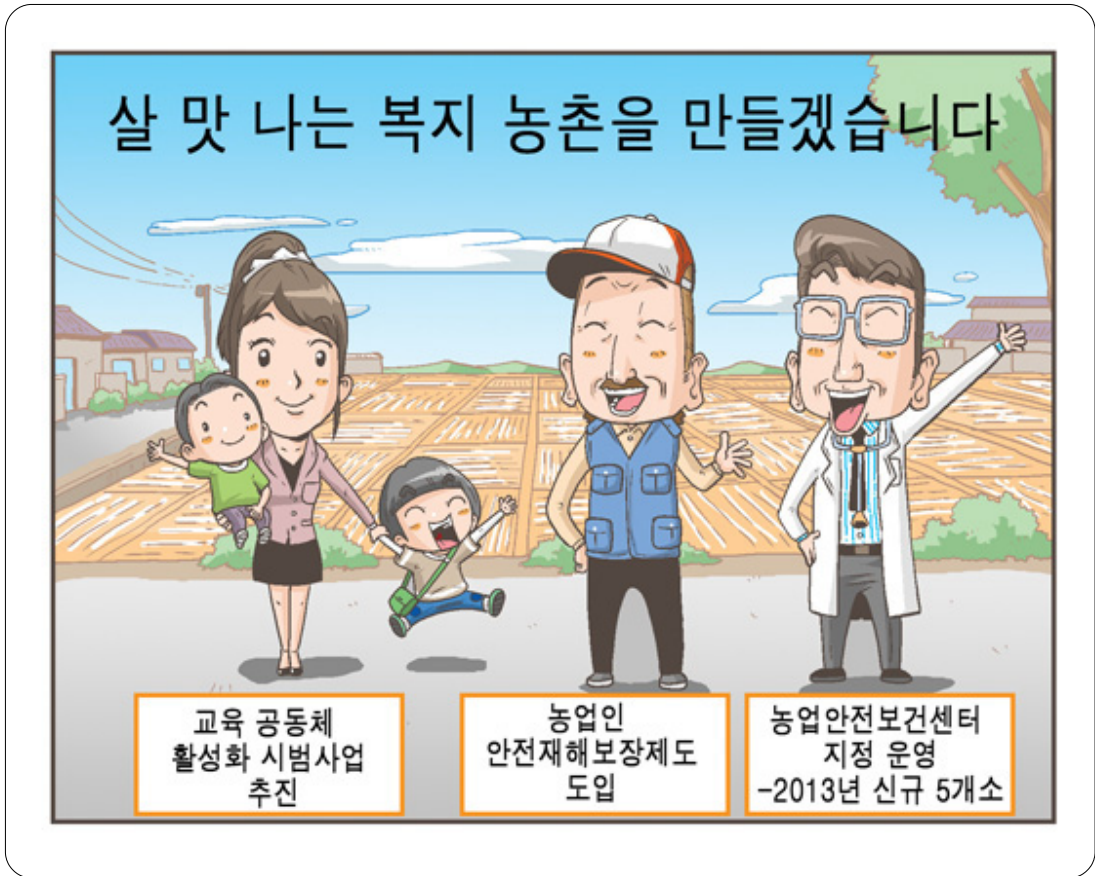
5. 먹거리 안정적 공급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위생관리기준(HACCP) 제도 등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유기농 (ORGANIC)**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12~'15, 나주)
농림축산식품부
- GAP (우수관리기준)** -GAP 참여 농가/시설지원 확대: ('12)40천호/718개소 → ('15)120천호/1,000개소
농림축산식품부
- HACCP (위생관리기준)**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HACCP 표준모델'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4. 복지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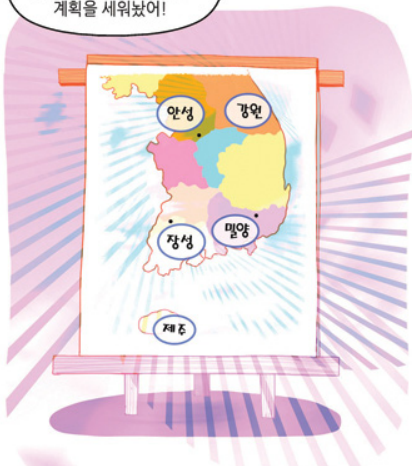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 마련



농산물 5대 권역 도매 물류센터 건립(유통단계 축소 5~6→3~4단계)
축산물 선진국형 도축기공유통 일괄시스템 확립(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1. 유통구조 개선①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1. 유통구조 개선 ②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1. 유통구조 개선 ③



**안정대-통상적으로 허용
위기단계- 주의(수급 약간 불균형),
경계(상당한 불균형),
심각(현저한 불균형)**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농업을
6차산업으로~

농업-식품-관광 연계

- 농식품 산업에 IT·BT를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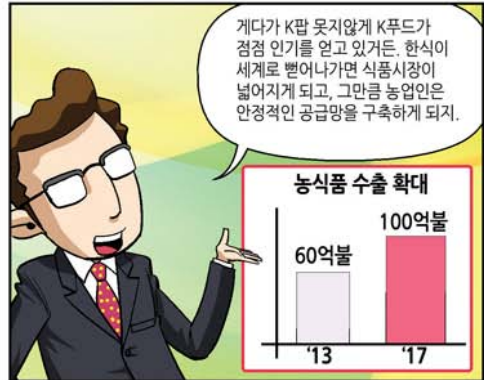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 농식품산업

3. 창조경제 접목



*6차 산업의 예 (경북 문경)

문경시는 오미자를 생산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생산-가공-관광을 연계시킨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농가 소득 역시 40억에서 1,000억으로 대폭 늘었다.



박근혜정부 농식품산업

6. 연장·신리 농정



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체 DB: 직불제 사업위주로 연내 시범사업 추진
- 공간 DB: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적용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 6차 산업화 사례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 안정

직접 지불제 확충

쌀 목표가격 인상(안) (단위: 10kg)

12년	17.0
13년	17.2

쌀 고정직불제 인상 (단위: 10kg)

12년	1.0
13년	1.0

밭직불제 품목 확대

기존 19개 품목 + 신규 7개 품목 (감자, 사과, 딸기, 복숭아, 배, 자두, 사과)

재해 지원 강화

피해 지원 확대

대피대, 중피대, 농약함 + 과수, 가축, 정전 피해

보험 품목 확대

2012년 51개 + 2013년 5개

피해 조사기간 단축

7~10일 ⇒ 3~5일

경영비 절감

발농업 기계화율 증대 (%)

12	50.1
13	53
17	65

농가 사료 구입비 절감 (%)

12	1.35
13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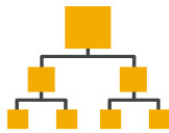
유류 에너지 의존도 절감 (%)

11	91
13	88
17	80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전업농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IT·BT를 통한
경영혁신 지원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중소농



전문경영체,
공동경영체 육성



가공·관광 등
농외소득원 창출

영세·고령농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원



경영이양 직불 등
은퇴여건 조성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복지 농촌




마을 정비

 마을개발 신규 270개소 계속 960개소	 공동급식시설 신규 240개소	 CCTV 등 정보화시설 확충
---	---	---





주거환경개선

 공동생활 홈 시범조성 4개소	 슬레이트지붕처리 1.5만동	 주택개량지원 1만동
---	---	--




보육·교육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30개소	 농촌형 보육시설 신규 36개소	 교육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 10개소
---	--	--



보건·의료

 거점산부인과 7 ▶ 11개소	 농업안전보건센터 신규 5개소	 보건시설현대화 398개소
---	--	---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구현



IT · BT 융합

IT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능성 농산물 신소재 개발
 IT · BT 융합 인프라 구축



R&D 투자효율화

농업인 ·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농정현안 연구 확대
 농림수산물 신기술 인증제 도입

〈선진국 대비 농식품 과학기술 수준〉



글로벌 수출종자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육종센터 설립
 국산 품종개발보급으로 로열티 절감

〈종자 로열티 경감〉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III

보 도 자 료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1.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 공 일 : 2013. 3. 21
 제 공 자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과 장 : 주 원 철
 사 무 관 : 김 상 진
 전 화 : 044-201-1117, 1118
 쪽 수 : 23P
 별첨자료 : 있음(업무보고)

이 자료는 2013년 3월 22일 10:3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 주 요 내 용 》

①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 ① 온실 원격제어, 품질이력관리 등 IT융합비즈니스 모델 개발(13년까지 21개), 농업인·국민체감형 R&D 로드맵(6월) 등을 추진
 - ② 농업을 가공·관광 등과 결합, 6차 산업화*를 추진(6월, 종합대책 마련)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등으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 * 6차산업화 : 농업인이 생산(1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나아가 체험·관광 등 서비스까지 제공(3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②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① (전업농) 농업재해보험 확충, 회생 프로그램 등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
- ② (중소농) 마을 영농회사 등 공동경영체 육성과 가공·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을 통해 전문경영체로 육성
- ③ (영세·고령농)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 복지 지원과 함께 경양이양 직불, 농지연금을 활용하여 은퇴 여건 조성

③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① 마을단위 생활 인프라(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와 읍·면 중심의 공공 서비스(농촌형 보육시설)를 확충하고 이들을 잇는 농촌형 교통체계 구축
- ②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고령자 농지연금 확대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 정착 지원 강화를 통해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
- ③ '함께 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도시민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④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①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 농업인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 마련
- ② 주요 품목 가격 안정대(band)를 설정,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 하되 이를 벗어나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 시행

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① 총리실 및 관련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4월)하여 식품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②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식품종합정보망을 구축(9월)하고, 부적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위해식품 생산지 추적조사 차단 네트워크 구축(9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22(금)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점 토의되었다.

□ 이동필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정부의 농정 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농정 비전과 전략]

-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 농가 소득·경영 안정, ▲ 농촌 복지 증진 ▲ 유통구조 개선, ▲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 관계 부처 협력, ▲ 스마트 농정 추진, ▲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 새 정부 농정은 주요 이슈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심 키워드는 **현장·내실·소통**이다.

①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물가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를 준다.

- 그 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되어 품목별 수급상황 공유 및 정책방향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 조정

② **'내실'**도 강조되었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품산업 육성**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조로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면서 해외 곡물도입의 안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우량농지 매입 비축 확대, 유휴농지 복원, 산지 활용 및 동계 이모작 지원

- **식품산업 육성의 경우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력**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소통의 채널로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일반국민이 직접 박근혜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에 반영 예정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괄·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추진 및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실시

-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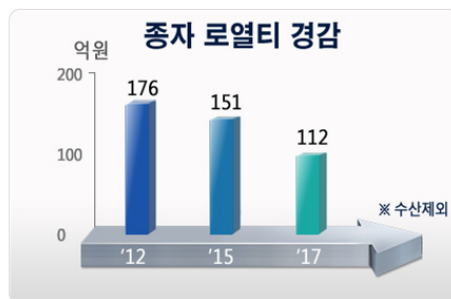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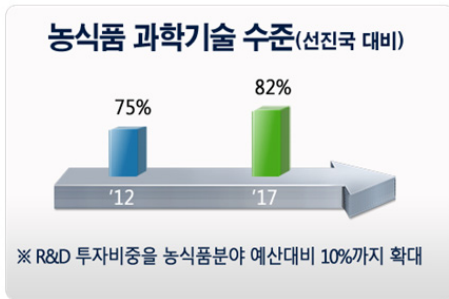
[정부조직 개편 이후 식품안전 협조 체계]

□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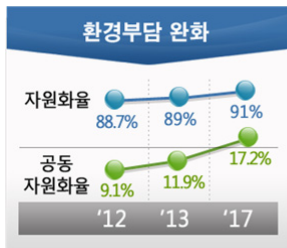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 ◆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12: 5% → '17: 10)
- ◆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

-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13년 완공)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골든 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벼, 감자, 토마토, 돼지 등) 상세 계획 수립, 채소·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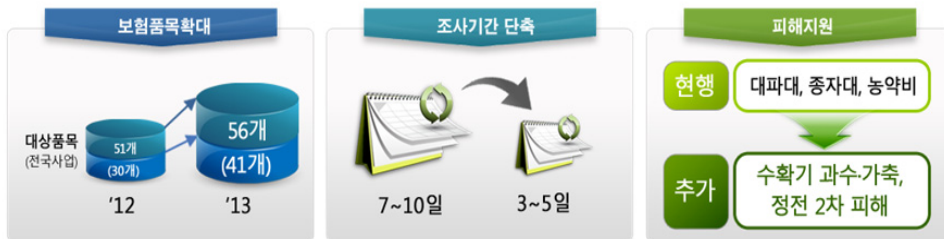
-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 추진
 -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 분야 참여 확대
 - 체험 휴양마을 지정(700개소→800),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 이를 위해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12년 9.1%에서 '13년 11.9%, '17년 17.2%까지 제고
 -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3,880억원→4,325) 및 자동급이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 모델 도입
 - 산지 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TF(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구성하고, 공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5개소, 개소당 10ha이상) 추진



② 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
 -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
 -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협의
-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
 -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
 -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

3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확산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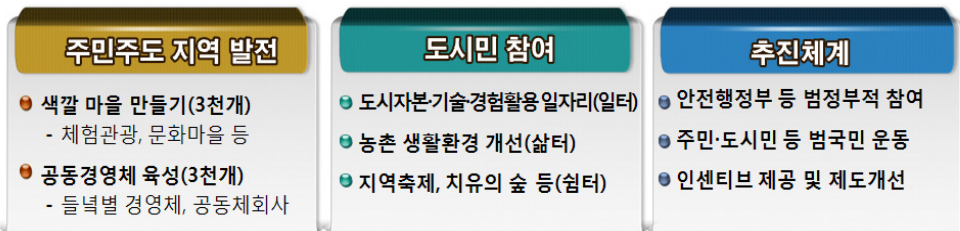
- 농촌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42만동이나 되며,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마을 단위에는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읍·면 등 중심지는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투자 효과 제고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주재 삶의 질 위원회(4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 고령화·과소화되어 가는 농촌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 추진

- 농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신규 운영
-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4개소),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 병행
-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농촌 복지 실태 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추진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주민 주도로 도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색깔있는 마을(3천개)을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시민의 자본·기술·경험이 농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도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조성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및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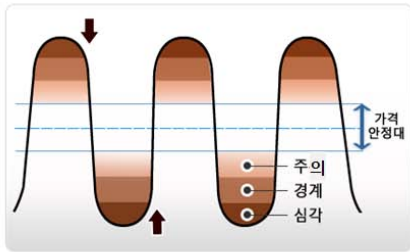
4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 마련
 -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추진
 -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 개설도 지속 추진
 -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마련
 -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
 -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 안정

-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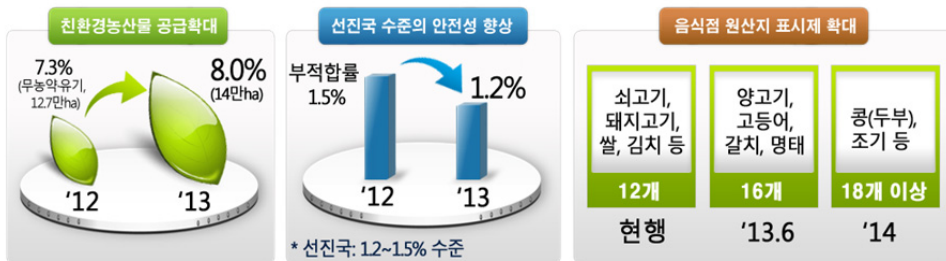
가격 급등시	심각	해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경계	물량공급, 저율관세 증량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가격 급락시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경계	저율관세 수입 연기, 가공용 확대
	심각	생산감축, 시장격리, 소비 확대

※ 품목에 따라 일정한 band 내 가격변동시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 지양

5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육성(40천농가→45)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 확충(718개소→800) 추진
-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 구성(4월) 및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 추진

* 불임 1 : 농식품 분야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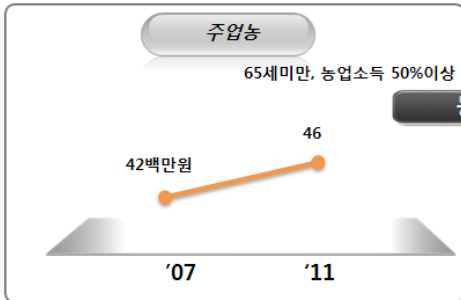
* 불임 2 : 네덜란드, 스위스의 농업

* 불임 3 :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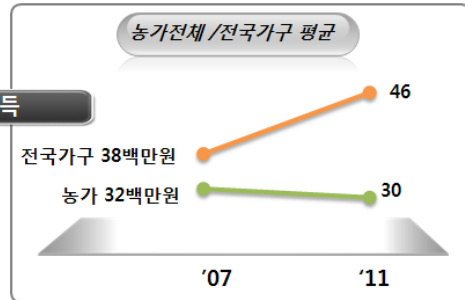
* 불임 4 : 주요과제 인포그래픽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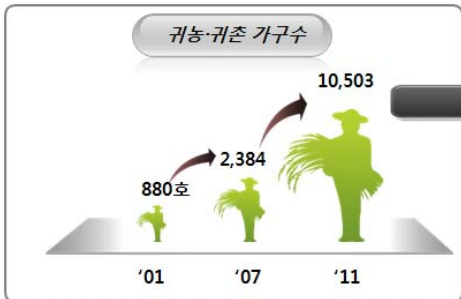
농식품 분야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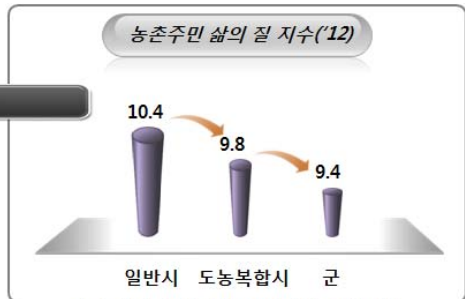
규모화·전문화로 주업농 소득은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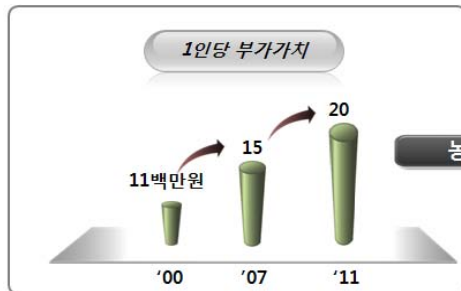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도농간 격차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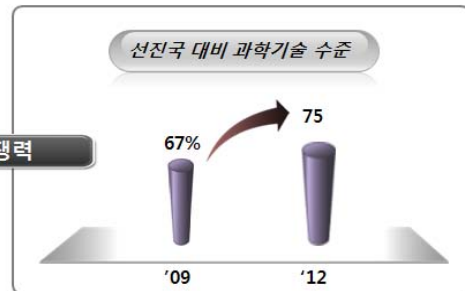
베이비 붐세대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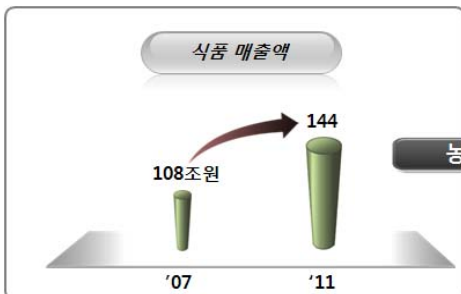
농촌주민 삶의 질은 도시민에 비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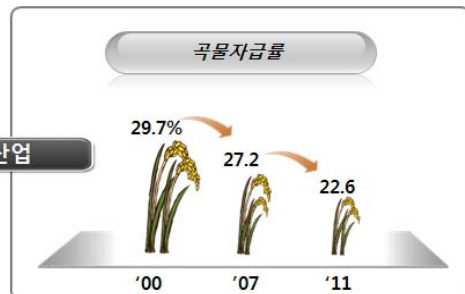
기계화·고품질화 등으로 1인당 부가가치는 지속 상승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식품산업 규모는 지속 증가



곡물수입 확대로 자급률 하락세

붙임 2 | 네덜란드, 스위스의 농업

◆ 우리나라 농업과의 비교('11)

	네덜란드	스위스	한 국
경지면적 (천ha)	1,858	1,052	1,698
농 가 수 (천호)	70	58	1,163
호당 경지면적 (ha)	26.4	18.3	1.46
농가소득 (만원)	7,711	14,433	3,015
농산물수출액 (억불, '10)	481	113	59
농산물수입액 (억불, '10)	298	28	258

◆ 네덜란드 농업의 강점

①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2011년 농업예산의 37%가 지식 및 혁신관련 예산

② 시장경쟁을 통한 전문화·규모화

- 낙농, 양돈, 화훼 등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생산체제

③ 푸드밸리(Food Valley)를 통한 산학연 연계 발전

- 식품관련 종사자 2만명(75%가 연구개발에 종사)

*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등 세계적 식품기업 연구소 위치

◆ 스위스 농업의 시사점

① '지속가능한 농업'은 국가목표이며 농정 기본방향

- 농업직불금 규모는 농림식품 예산의 74.3%('09)

* 스위스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

- 식량안보 추진(곡물자급률 50% 이상), 소규모 가족농(95%) 지원

② 세계적 식품 기업 성장

- 신젠타(세계 종자 3위, 농화학 2위, 매출액('10) 12조원)

- 네슬레(세계 식품 1위, 매출액('12) 150조원), 앙드레(세계 5대 곡물메이저)

붙임 3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직불제 확대

- ① 쌀 고정직불금은 '0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단가 변동없이 ha당 7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밭직불제는 '12년부터 19개 작물(식량작물, 양념채소) 재배농지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였음
- ② 이번 정부에서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7년까지 30만원 인상하여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밭 직불제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목제한 해제를 추진
- ③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30만원/ha 인상으로 농가당 평균수령액 327천원 증가가 예상되며, 밭직불제 지원 대상품목 확대와 지목제한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면적 및 수혜를 받는 농업인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자연재해 대응 강화

- ① 농업재해보험 품목이 '12년 51개 품목으로 배 등 과수 5개 품목은 특정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조사기간이 7~10일로 장시간이 소요되었음.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산정 시 농작물피해 및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은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음
- ② 새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7년 66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5개 과수품목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 과학화 등을 통해 피해 조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함.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산정 시 농작물(수확기 과수 등)·가축 피해와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포함됨
- ③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자재업체 담합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 ① 이전에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업체의 담합 적발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담합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부족
- ② 새 정부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공정위 주관)을 통해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
 -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 ③ 향후 업체의 가격 담합 불법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담합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됨

□ **농촌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①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신규 지원하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 추진
- ② 농촌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마을공동급식시설을 설치(금년 240개소 시범 설치)하고, 마을회관 등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홈 조성 추진(4개소 시범 조성)
- ③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형 보육시설) 신규 설치(36개소) 및 농작업 관련 질병 연구 및 예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신규 운영

□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농식품신기술로 인증하고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② 제도 도입으로 우수기술 개발 촉진과 사업화·제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 ① 그동안 수급정책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옴에 따라 소비자만 배려한다는 생산자의 불만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미흡하고 상황별 대응수단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집행의 적시성이 부족
- ② 새 정부에서는 수급문제 발생시에는 ① 사전에 생산자·소비자 등 각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4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② 품목별로 「가격안정대(band)」를 설정하여 가격이 band내에 있을 때에는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band밖으로 나갈 때에는 사전에 공개한 위기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개입토록 개선(5월 중)
- ③ 향후 농산물 수급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물가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수급상황에 따라 대응할 정책수단을 정형화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수급정책의 투명성과 적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산지 축산·친환경축산단지 조성

- ① 지난 20년간 축산업은 농업의 핵심산업으로('90년 4조원 → '11년 15조원, 농림업 생산액중 34.7%) 성장하였으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악취문제, 대규모 질병발생 등으로 양적확대로는 더 이상 축산업 발전이 곤란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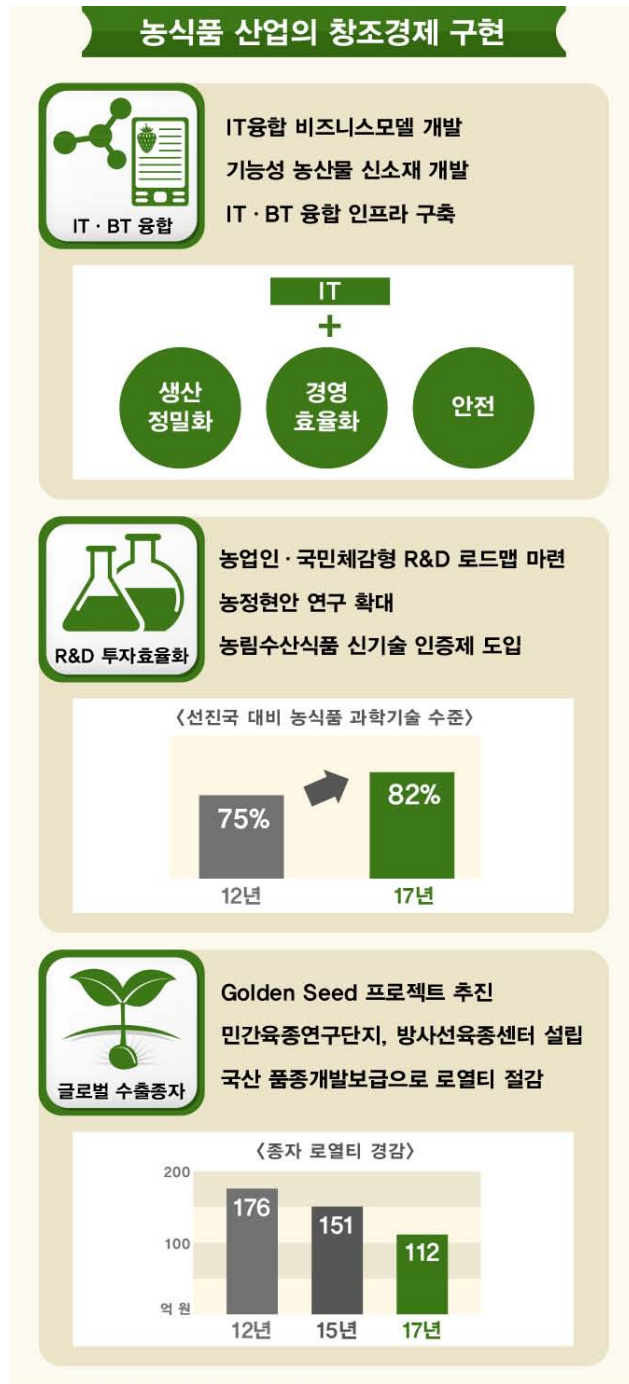
*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축사의 환경 관리 미흡,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하여 사육입지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

- ②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단지화하여 분뇨 공동처리, 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이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희 농·산지를 활용하여 축사를 단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③ 향후 축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됨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13.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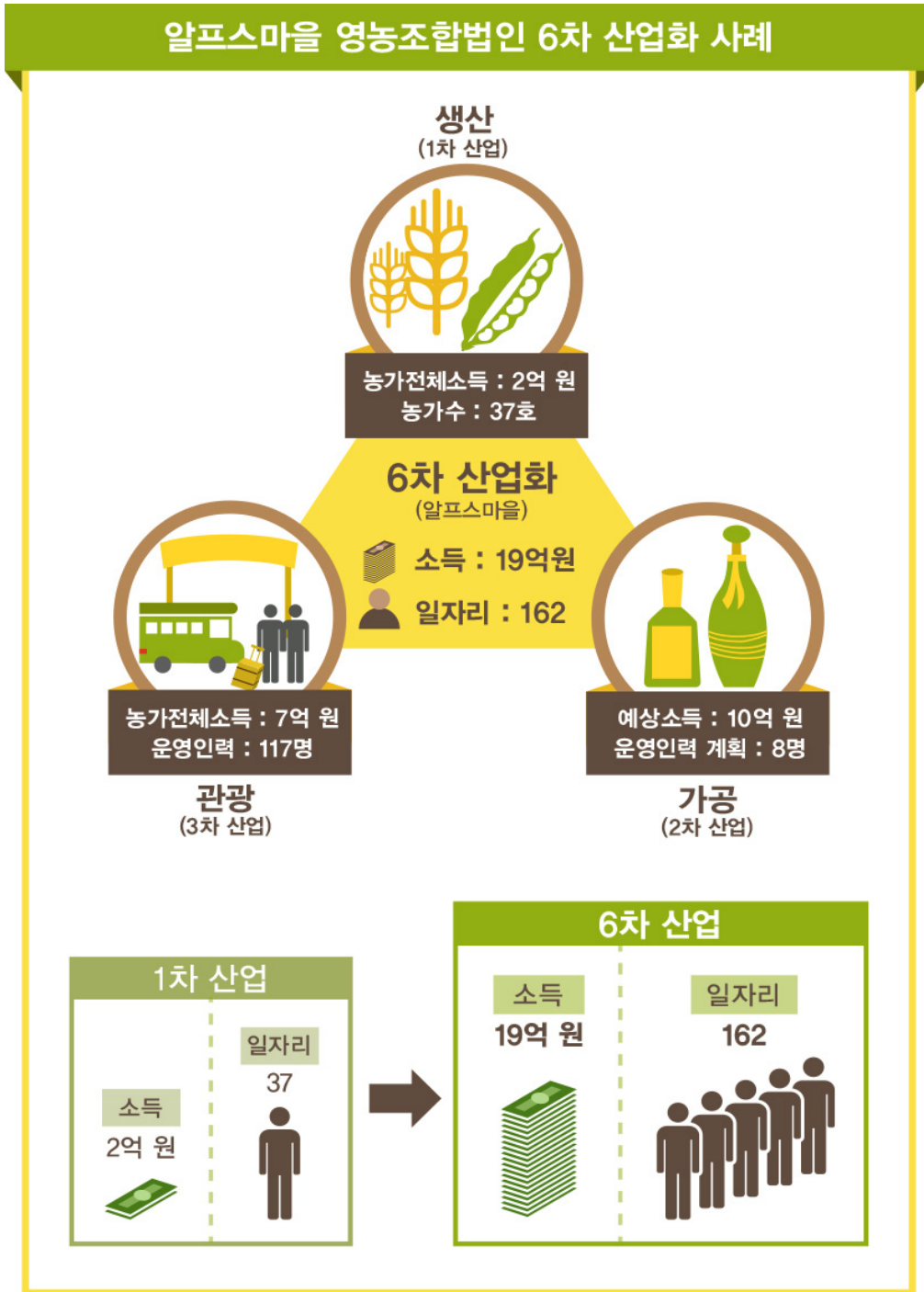
- ① 예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인증기관 지정취소가 불가능했음
- ② 새 정부에서는 위반행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년간 위반 사항 3회 발생 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함
- ③ 향후 부적격 인증기관들을 퇴출시킴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4 | **주요과제 인포그래픽스**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 6차 산업화 사례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
 <p>조직화, 규모화, 계열화</p>	 <p>전문경영체, 공동경영체 육성</p>	 <p>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원</p>
 <p>IT·BT를 통한 경영혁신 지원</p>	 <p>가공·관광 등 농외소득원 창출</p>	 <p>경영이양 직불 등 은퇴여건 조성</p>
 <p>재해보험 등 경영안정</p>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 보도자료 Q&A

2013 업무보고 관련 Q&A

2013. 3.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Q1. 농식품 과학기술수준 제고방안은?	279
Q2. IT를 활용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은?	280
Q3. 생명공학기술(BT)을 활용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은?	281
Q4.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은?	282
Q5. 종자의 로열티 지불을 줄이는 방안은?	283
Q6. 공동가공센터 지원 목적은?	284
Q7. 농공상 융합형 기업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285
Q8. 지역전략식품 사업단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286
Q9. 농촌의 6차산업화란 무엇인가요?	287
Q10. 일본의 농촌의 6차산업화와 농공상 융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288
Q11. 가축분뇨자원화 중장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289
Q12. 축사시설현대화는 왜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90
Q13. 무허가 축사 실태는 어떠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91
Q14. 산지를 축산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슨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292
Q15.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유와 향후 계획은?	293
Q16.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이란?	294
Q17. 금년 5월 새롭게 도입이 되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무엇인지?	295
Q18. 임도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296
Q19. 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이에 따른 요구가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지?	297
Q20.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치유 효과 및 대책은 무엇인지?	298
Q21.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숲을 활용한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299
Q22.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300
Q23.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301

Q24. 유망소득작물의 연간 생산액과 신품종 개발 후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302

Q25.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303

Q26. 이번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핵심은? 304

Q27.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추진이유와 기대효과는? 305

Q28.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외쳐 왔는데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306

Q29.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인위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가능한가? · 307

Q30. 이번 대책으로 40-45%에 달하는(배추의 경우 80%) 농산물 유통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 308

Q31.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대책과 시간을 두고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대책은? .. 309

Q32. 정가·수의거래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3100

Q33. 의무 경매제를 축소하고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311

Q34. 과거에 추진한 농산물 직거래 대책과의 차이점은? 312

Q35. 정부의 사이버 직거래 방안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한 의견은? 313

Q36. 농업관측 강화를 위해 농진청이 관측센터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 314

Q37. 수입양과 도입과정에서 고품광이 발생 및 반송조치 되었는데 그 경위는? 315

Q38. '농자재산업 발전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317

Q39.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318

Q40. 사료가격 전망과 농가 사료 구입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은? 319

Q41. 올해 4월중 확정한다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320

Q42. 신속한 손해평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321

Q43.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안은? ... 322

Q44. 자연재해 피해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한다는데,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323

Q45. 유희농지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324

Q46. 농업수입 보장보험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은? 325

Q47. 쌀직불제 개요 및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시 기대효과는? 326

Q48. 밭직불제 개요 및 올해 추가되는 품목과 기대효과는? 327

Q49. 쌀 목표가격 변경안 산출 방법 및 절차는? 328

Q50. 농업환경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329

Q51.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이 무질서하게 입주 농촌경관을 훼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30

Q5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 및 농어촌 현실을 반영할 방안은? 331

Q53.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332

Q5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은? 333

Q55.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335

Q56. 농식품 분야 일자리 현황 및 대책은? 336

Q57. 농촌 활력찾기 운동이 새마을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337

Q58. 공공비축 확대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은? 338

Q59.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339

Q60. '민관 합작 곡물회사 설립방안' 주요 내용은? 340

Q61. '13년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향후 계획은? 341

Q62.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은? 342

Q63. '13년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343

Q64.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344

Q65. 상설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345

Q66. 관련부처 간 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방안은? 346

Q67. 도매시장 부적합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은? 347

Q68. 유형별 통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생산할 계획인지? 348

Q69.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49

Q70. 그동안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및 성과는 무엇인가? 350

Q71. 농식품 재정·투융자 시스템 개편방안 구상내용은? 351

Q72. 정부지원 자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잘 체크하기 위한 방안은? ... 352

Q73.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부당수령 신고접수처 설치 계획은? .. 353

Q74.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354

Q75. 스마트농정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355

문1) 농식품 과학기술수준 제고 방안은?

(선진국 대비 : '12년 : 75% → '17년 82% 수준)

□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

○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

* 투자비중 : ('12) 5.0% → ('13) 5.2% → ('17) 10%(수산 포함)

○ 정부 투자확대와 함께 민간분야의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도 개선을 추진

- 농협 등 생산자조직 대상 시범사업(20% 자부담, 80% 정부보조)
- 기술기반형 농식품 벤처 육성, 민간연구소 활성화,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농식품 모태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적기준 요건을 벤처기업 수준으로 완화 추진(5명→3명)

□ 농정현안,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

* IT·BT 융합(선진국대비 70.8%), 기후변화(71.5%), 바이오에너지(68.3%)

○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R&D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농림식품 R&D 로드맵을 마련(6월)

□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육성 강화

○ R&D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6개)

* 농업 R&D 기술경영교육, 리더십·신규연구자 교육 등

○ 농림식품연구지원센터 지원(3개소), 이공계 인턴십 운영(300명)

문2) IT를 활용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은?

- 스마트 팜 등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현장 확산을 유도하여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할 계획
-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은 농축산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 * 농어업의 생산·재배 단계에 RFID, USN 등 IT기술 접목을 통한 과학영농 구현
 - * 유통·가공단계에 경영정보시스템(ERP), 수발주시스템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소비자에게 생산, 유통이력 정보 제공을 통한 농수축산물의 신뢰 제고
- '10년부터, 검증된 IT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5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일부 성공모델을 도출하였음
 - * 예) 파프리카 시설원에 환경제어(관리시간, 비용절감), 양돈 사양관리(출하두수, 이유두수 증가)
-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영농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 IT기반의 생산 환경제어, 병해충예찰, 품질관리, 이력관리 및 농어촌 활력증진 등 ('17년까지 80개 모델 개발)

문3) 생명공학기술(BT)을 활용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은?

□ 생명공학기술(BT)이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첨단기술을 말함

○ 바이오경제 시대에 농식품 분야도 BT기술을 활용하여 먹을거리 생산의 농업에서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주요연구개발 사례 : 누에고치에서 인공고막, 감귤에서 인공피부 제품 개발

□ BT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

○ 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BRIS) 구축 추진 및 DB율제고('13 : 95%)

○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생명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16까지 9개소)

* 곤충('12~'14, 3개소), 미생물('13~'16, 1), 천연색소('11~'14, 2), 양잠('12~'16, 3)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추진 등 농생명공학 기술 개발 추진

* GM작물 개발, 바이오 신약·장기 개발 등 7개 분야('11 ~'20, 농진청)

○ 곤충, 오디 등 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연구 추진

* 곤충의 식약용·가축사료화('11~'15, 27억원), 오디·누에 활용 제품('11~'15, 25억원)

문4)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은?

-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육종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글로벌 종자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R&D 투자 등이 필요

- 민간 육종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 육종포장 및 첨단시설을 갖춘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 조성
 - * (‘12) 타당성조사 → (‘13) 설계, 토목공사 → (‘14) 건축공사 → (‘15) 입주
 - * 총사업비 : 656억원, ’13년 예산 61억원

 - 다양한 변이품종개발을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정읍)’ 건립
 - * (‘12) 연구동, 부대시설(유리온실, 인공기상실) 공사 → (‘13) 완공
 - * 총사업비 : 132억원, ’13년 예산 48억원

- 글로벌 종자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R&D 투자로
 -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종자 20개 개발을 목표로 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년간(‘12~’21), 총 4,911억원 규모의 R&D자금을 투자할 계획임(‘13예산 : 200억원)
 - * (수출전략 품목 10개)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넉치, 전복
 - * (수입대체 품목 10개)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감귤, 백합, 김, 버섯

문5) 종자의 로열티 지불을 줄이는 방안은?

- '12년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수입 종자에 대한 로열티 증가가 예상되며 주로 화훼 등 원예 작물에서 발생

*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정('12. 6월)

- 로열티 최대 지급액(추정, 농진청) : ('08) 124억원 → ('10) 153 → ('12) 176

* 대상작물 : ('98) 27개 → ('08) 223 → ('10) 6개 제외 전품목 → ('12) 전품목

- 로열티 지불을 줄이기 위해

- 딸기, 장미, 국화, 버섯 등 로열티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해 '06년부터 농진청에 국산품종을 개발·보급하는 「로열티 대응 연구단」을 운영 중이며

- 이를 통해 로열티 지급 규모를 '12년 176억원에서 '17년 112억원 수준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

* 국산품종 보급성과('05→'12) : 딸기 9%→70%, 장미 1→26, 국화 1→20 등

* 로열티 감축 : ('12) 176억원 → ('15) 151 → ('17) 112

문6) 공동가공센터 지원 목적은?

□ '10년부터 농진청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가공센터*(파일럿 플랜트)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가공기술 이전, 공공기기 등 가공시설 보급 및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용 등 지속적인 창업 지원체계 구축

○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가공시설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농업인이 단순한 시제품 가공에서 벗어나 소규모 창업 까지 가능하도록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운용

* 연도별 공동가공센터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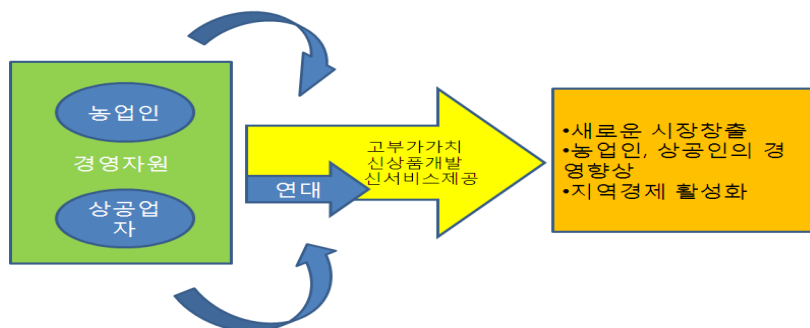
연도	지원 시·군
2010년	강원 횡성, 전북 장수, 경북 의성, 경남 함양
2011년	강원 정선, 충북 제천, 전북 군산, 경남 의령
2012년	전북 김제, 전남 무안, 경북 상주, 인천 강화

문7) 농공상 융합형 기업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 (개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특징)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서로의 장점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
 - 공동출자형 :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 * 사례 : (주)싱그린푸드시스템(당사 60%, 익산한닭 40% 투자)
 - 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에 관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방식
 - * 사례 : 제이엔푸드와 (주)사용원이 MOU를 체결하여 협력(매출액 11%증가)
 - 농업인 경영형 : 농업인 또는 생산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진출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방식
 - * 사례 : 경포대영어조합법인(어류 부산물 및 비식용 해조류를 이용 액체비료개발)
- (장점) 농업과 제조업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 창출

<우수사례- (주)사용원 :충남 공주 소재>

- 생산자(농업인 2개 작목반) :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 1차가공(제이엔푸드) : 안정적 원료조달과 판로확보로 가동률 유지
- 식품제조업체(사용원:전류가공품) : 규격화된 원료 확보로 맛과 제품의 균질성 유지로 매출 확대
 - 매출액 : ('11) 155억원 → ('12) 172억원 11% ↑
 - 원료구매액 : ('11) 월 6백만원 → ('12) 8백만원 33% ↑



문8) 지역전략식품 사업단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 (특징) 지역의 산학관연이 특산물을 연구개발·가공·유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학관연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

□ (운영) 창의적인 사업단 운영체제로 사업단 자립화 구축

○ 사업단 구성 : 지역 농수산물 중 경쟁력을 갖춘 품목생산 농어가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단(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설립

○ 의사결정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단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 산·학·연·관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등 중요사항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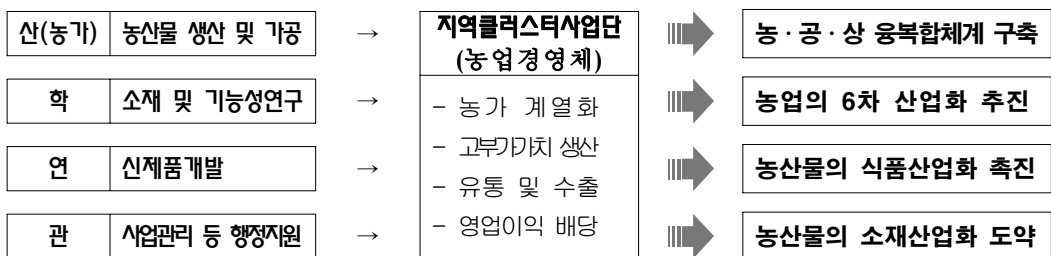
○ 사업단 역할 : 농어가 계열화를 통한 농수산물 수매 및 가공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립화를 통하여 사업영역 확대 및 영업이익 배당

○ 자회사 운영 :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단 지속·발전 유지를 위해 사업단이 현물출자 등을 통해 영리법인(농업회사 등) 설립(합병) 운영

□ 지역농산업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사업단 롤 모델 - 빛그린매실식품육성사업단(전남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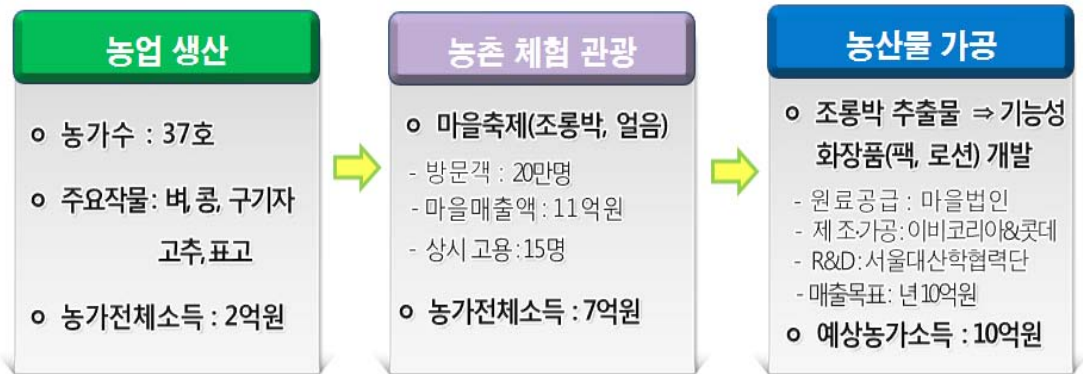
- 사단법인 구성 : 농어가(968명이 출자금 4억원 확보), 흥쌍리 명인 및 지역식품 가공업체 참여, 순천·전남대학, 전남 광양·구례시 등 지자체가 사단법인 구성
- R&D목적 : 숙성매실(현재 청매실 가공) 탈염기술 개발을 통한 일본 등 수출확대
- 6차 산업연계 : 광양시 매화축제 '12년 방문객 604천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가능



문9) 농촌의 6차산업화란 무엇인가요?

-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등의 자원(1차)**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유통·판매**까지 주도하고 더 나아가 **체험·관광 등 서비스까지 제공(3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1, 2, 3차 산업 간의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결합**을 통한 **실질적 융복합화**를 의미

※ 사례 :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문10) 일본의 농촌 6차 산업화와 농공상 융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본적으로 1·2·3차 산업을 융합,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 농촌 6차 산업화는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주도가 되어 제조·가공(2차) 및 유통·판매·체험관광(3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 농공상 융합은 농업(1차)은 공업에 원료를 공급하고, 공업(2차)은 공급받은 원료를 바탕으로 가공품을 만들고, 상업(3차)은 가공품을 판매하는, 즉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연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6차 산업화와 농상공 연대의 특징 및 차이

구분	6차 산업화	농상공 연대
목적	지역자원 활용으로 고용 확보, 소득향상 및 농산어촌 활성화	농상공 연대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농업경영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상	농업인	중소기업과 농업인
개념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상류(농림수산업) → 하류(상공업)
특징	농업 주도의 2·3차 산업화	농업과 상업, 공업간의 상호연대
부처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주도, 농림수산성 참여
근거	6차 산업화법('10)	농상공 연대 촉진법('08)

문11) 가축분뇨자원화 중장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 **(공동자원화)** '17년까지 공동자원화(퇴·액비)·에너지화시설을 171개소 설치하여 **공동처리비율을 현행 9.1%에서 17.2%로 확대**

 - *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 ('12) 88개소/7개소 → ('13) 101/9 → ('17) 150/21
 - 자원화율(개별처리+공동처리) : ('12) 88.7% → ('13) 89 → ('17) 91
 - 공동자원화율 : ('12) 9.1% → ('13) 11.9 → ('17) 17.2

- **(품질개선)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시행,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율검사 체계로 전환 등을 통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공동자원화시설은 '16년, 액비유통센터는 '17년부터 의무화하되, 자율적인 품질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장비 지원 확대
 - * 비료생산업 등록시 시비처방서 유효기간 확대, 대표필지 검사 등 조건 완화

- **(사후관리 강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민간중심의 관리 조직 설립(가칭 한국축산환경지원센터), 컨설팅·사후관리 업무 등 수행**

 - * '14년까지 법령 개정 및 민간기구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15년 시행
 - '17년까지 지역별 가축분뇨처리 컨설팅 전문인력 300명 확충

- **(제도개선 등) 퇴·액비 사용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수요자에 맞는 R&D 과제 확대**

 -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 가축분뇨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시·도(시·군)별 축산분뇨 정책 평가 및 포상 등

문12) 축사시설현대화 왜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 (추진배경)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제고하여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고자 '09년부터 사업지원 중

○ 지원실적(농가/금액) : ('09) 692호/1,025억원 → ('10) 830/1,147 → ('11) 713/1,633 → ('12) 1,206/3,880 → ('13) -/4,325

○ 돼지 MSY : ('07) 13.51 → ('09) 15.24 → ('12) 15.6 → ('13) 17 → **(17T) 24**

* MSY : 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출하 돼지 수

* 외국의 MSY : 덴마크·네덜란드 25두, 미국 17두

◆ MSY 증가(15마리 → 24) 시 연간 모든 사료비 2,179억원 절감

○ (지원 전) 사료비 5,806억원 → (지원 후) 3,627억원

구분	시설 지원 전	시설 지원 후	비고
연간 적정 도축마리수	14,025천마리	14,016천마리	
모든 마리수	935천마리	584천마리	
MSY	15마리	24마리	
모든 사료비	5,806억원	3,627억원	

* 모든 마리당 연간 사료비 : 621천원(1,086kg × 572원/kg)

□ (주요내용) 급이·급수·착유시설, 방역시설, 사료배합기 등 축사·방역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개축 또는 개보수

○ 사업대상 : (한우)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양돈·양계 등) 전업농가, (종축장)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등

○ 지원조건

- 보조포함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문13) 무허가 축사 실태는 어떠한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현황)** 전체 축산농가의 약 45% 수준이 무허가 축사(11.9월, Krei)이며, 분뇨관리 미흡 등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 조사농가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7,925호(44.8%)

○ 전체 축사 무허가 4,176호(23.6%), 부분 무허가 3,749호(21.2%)

○ 축종별 무허가 축사 현황 : 오리(56.1%) > 젓소(42.6%) > 육계(41.6%) > 산란계(30.3%) > 한육우(25.6%) > 돼지(15.9%)

□ **(개선방안)** 가축 분뇨관리 선진화도 실현하면서, 축산업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13.2월)

① 재량범위(60%)보다 낮게 운영(20~50%)하는 지자체의 건폐율 개선

②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분뇨처리시설, 자돈 컨테이너, 합성수지 지붕 추가(현행은 비닐하우스·천막구조만 인정)

③ 가금류 축사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④ 농식품부·환경부 공동 연구용역을 거쳐 축사 거리제한 기준 재 설정

⑤ 건폐율 부족문제 해소위해 젓소에서 한육우까지 운동장시설(가설건축물에 해당) 적용 확대

⑥ 축사거리 제한 2년 유예 및 무허가축사 폐쇄처분 등 3~5년 유예

⇒ 건폐율 상향(60% → 80), 이행강제금 적용유예는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축사 원인 대부분 해소 전망

□ **(향후계획)** '13.9월까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농가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시·군에 인허가 신청(13.10~)

문14) 산지를 축산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 산지를 초지, 축산단지로 활용한다면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친환경·동물복지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우리나라 산지특성과 축산여건, 관련 법령(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상 제약요인이 없는지 등 실행가능성에 대해 정밀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이에 전문가·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증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축산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
 - 관계기관(진흥청·산림청) 등 참여한 T/F 구성·운영 및 전문가 연구용역 통한 적용모델 검토('13)
 - 축종별 사육특성, 분뇨처리 여건 및 환경영향, 경제성, 과거 사례* 등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 93년, 경기도 여주에서 산지를 초지로 조성했으나, 활용과정에서 축산농가간 마찰과 비축산농가의 가축방목 반대 등으로 조성한 초지를 산림으로 환원
 -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후 일반농가 적용가능성 검증('14년이후)

문15)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유와 향후 계획은?

- (조성 사유)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축산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 부지확보, 민원발생 등으로 적정 축산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장(시장·군수)이 사업을 주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코자 함

- (향후 계획)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운영평가·보완 등을 거쳐 친환경축산단지 모델로 전국에 보급할 계획
 - '13년에 5개소(경기 화성, 전남 장흥·보성, 경북 상주·경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시범사업 5개소를 추가 추진계획

문16)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이란?

-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산림편익 확대
- 전체 산림 637만ha를 6대 기능별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산림 기능별	면적 (만ha)	세부내역	관리 방향
계	637		
목재생산림	300	경제림육성단지	경제림의 집약적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수원함양림	40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다층혼효림 조성
생활환경보전림	119	도시림, 산림경관관리지역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태적 건전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증진
산림휴양림	27	자연휴양림고시지역, 사찰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산림의 휴양·체험적 가치 및 치유기능을 최적 발휘
자연환경보전림	9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산지재해방지림	54	산사태위험지구(1등급),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병해충피해면적 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

- 목재생산 위주의 경제림가꾸기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는 경제림 및 공익림가꾸기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숲가꾸기 추진
- 개별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 사업 추진('13년, 30만ha)
 - * 큰나무 25만ha(경제림 12.5만ha, 공익림 12.5만ha), 어린나무 등 5만ha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능별 숲가꾸기 매뉴얼』 수립·보급(3월)

문17) 금년 5월 새롭게 도입이 되는 목재산업 등록제도는 무엇인지?

-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13.5.24 시행)
- ◇ 목적 : 목재의 투명한 유통 흐름 파악, 유통 구조 간소화 및 벌채로 인한 산림의 피해,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입
- ※ 현재 목재산업 등록기준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 규제심사 중(총리실)

- 목재산업을 원목산업, 제재업 및 유통업으로 구분하여 등록
 - 원목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

-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
 - 원목산업의 기술능력 기준
 - * 산림자원법에 따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기능2급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나 '13. 5. 24. 이전 벌채업을 영위한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존의 벌채실적과 교육을 통하여 등록가능. 단, 종별로 벌채량에 제한을 둠
 - 제재업의 기술능력 기준
 - *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임산가공기술자를 갖추어야 함
 - 유통업의 경우 별도의 기술자격을 요구하지 않음

- 제도 도입으로 목재산업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기능인 일자리 확대
 -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목재산업 동향 파악 및 관리·지원 기반 구축
 - 전문기술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목재산업 종사자의 지위향상

문18) 임도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 (개념)**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Infra-Structure)
- (필요성)** 숲가꾸기·벌채 등 산림작업 이외에도 산불 진화와 피해지 복구, 산악바이크 등 산림휴양·산악스포츠에 필수적



목재생산 기능



재해 예방·복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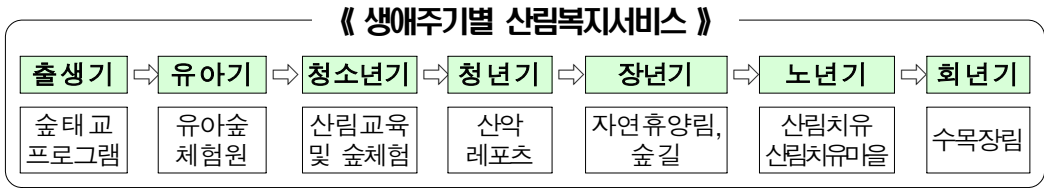
휴양 기능

- (효과)** 임도에 따른 직접 효과와 파생 효과로 구분(국립산림과학원)
 - 직접효과 : 산림작업 비용 약 30% 감소, 목재생산 면적 40ha/km 증가
 - 파생효과 : 생산 유발(3,881천원/km), 취업 유발(10.4인/km), 부가가치 증대(2,989천원/km) 등
- (외국사례)** 일본의 경우 산림·임업 재생계획('11~'20)에 따라 임도를 연간 24천km를 시설할 계획 (한국의 약 30배 이상)

구 분		한 국	일 본	오스트리아	독 일
임 도 밀 도	m/ha	2.8	13	45	46
ha당 임목축적	m ³ /ha	126	177	310	315
ha당 목재생산량	m ³ /ha	0.6	0.7	6.5	6.9
목재 생산량	백만m ³	4.2	18	26	77
목재 자급률	%	16	26	100	87
산 립 비 율	%	64	69	48	32

문19) 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출생기에서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출생기~청소년기)** 누구나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범국민적 ‘숲으로 가자!’ 캠페인 전개
 - 유아숲체험원 확대(5개소) 및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3개소)
 - 방과후 숲교실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청년기~장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 확충
 - 지역여건과 휴양패턴을 감안한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21개소)
 - 트레일, 둘레길 등 국가 및 지역 숲길 조성 확대(485km)
- **(노년기~회년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숲 속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 치유의 숲 확대(19개소) 및 권역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6개소)
 -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10~'15, 1,312억원 / 영주·예천)
 - 수목장림 조성 확대 및 범국민적인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문20) 최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치유 효과 및 대책은 무엇인지?

- **산림환경**은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산림치유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도시환경보다 산림 등 자연환경에서 혈압, 심박동률, 근육의 긴장 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숲을 방문하면 인간의 면역체계가 강화됨
 - * 산림치유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산림치유(숲 치유) 사업**은 최근 들어 건강을 생각해서 숲을 찾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 생활권 주변 국·공유 산림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19개소)
 - * 치유의 숲 조성 현황 : 국유 3(양평, 횡성, 장성), 공유 1(장흥)
 - 경북 영주·예천지역에 장기체류형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도 조성
 -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 2,889ha, 1,312억원, 2010~2015

- 또한,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할 계획(6개소)
 - **산림 및 보건·의학 교육기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2.8월)

문21)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숲을 활용한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산림을 통한 유아·청소년 등의 창의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1.7.25)하고, 부처별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공간 확충 및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배치
 - 행안부, 교과부, 문화부, 여가부 등과 함께 인터넷 중독 통합 치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계운영
 - * 취약계층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2.5.17, 정부세종로청사)

-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2.2.6)에 따라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서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 교육청, 경찰청, 일선학교(356개 기관)와 MOU를 체결하고 산림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초·중·고등학생 50만명 참여)
 - * 주말산림학교, 방과후 숲교실, 소외계층 녹색체험(전국 125개소)

-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 분야별 역량있는 산림교육전문가(1만명)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 숲해설가 7,000명, 유아숲지도사 1,500명, 숲길체험지도사 1,500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역 주민 및 은퇴자에게 일자리 제공

문22)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 추진하는 이유

- 산업화·도시화로 도시인구가 증가(전체인구의 91.1%)하고 있으나 생활권 녹색공간은 부족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7.95㎡('11년)로 WHO 권고기준인 9㎡의 88% 수준에 불과
 - * 세계 주요도시 : 서울 4.01, 대구 5.65, 런던 27, 뉴욕 23, 파리 13
- 도시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을 통해 녹색서비스 확대
 - 도시민의 쾌적한 녹색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
 - * 도시숲 : ('12까지) 2,310개소 → ('13) 173개소 추가
 -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숲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충
 - * 가로숲/학교숲 : ('12까지) 36,613/1,112 → ('13) 511km/149개교 추가
 - 생활권 마을숲을 조성하여 문화공간 및 쉼터로 제공
 - * 전통 마을숲 복원 : ('12까지) 59개소 → ('13) 6개소 추가

□ 앞으로 추진계획

-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포함하여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조성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림 기본계획('08~'17)을 전면 변경(4월)
- 시민·단체·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녹화 운동 전개를 위해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캠페인 실시(6월~8월)
-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의 제도를 도입
 - 가칭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하반기)

문23)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은 '17년까지 산림분야 장·단기 일자리 35천개 창출 내용을 담고 있음
 - 산림관련 산업 분야 1만9천개,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 분야 9천개, 단기일자리 7천개 추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13~'17년 중기사업계획 반영 수치)
 - 또한, 고용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산림분야 고용박람회** 개최,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체계 구축**, **관련 법령 및 전담지원 조직의 구성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산림이용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전문가 인력양성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성화고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휴양·문화·치유 등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신설로 전문가 적기 공급**
 - **산림전공자들의 재교육 추진**, 양질의 전문임업 노동력 확보 등

-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림분야의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귀산촌 유입가구 및 전문임업인 확대로 산촌의 **활력제고 및 고용창출**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정착유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기여** 등

문24) 유망소득작물의 연간 생산액과 신품종 개발 후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유망소득작물의 연간 생산액은 '11년 기준 5조 7,267억원으로 증가 추세임
 - 임목생장 28,032억원, 조경소재 7,749억원, 수실류 6,934억원, 약초류 5,410억원, 산나물 3,874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약초류, 산나물류에서 '10년 대비 116~142%의 급속한 증가추세

- 신품종 개발 후 보급 절차
 - 선도재배자와 시범재배 협약을 통한 신품종 조기 보급
 - 조기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직무육성 우수품종에 한하여 품종보호권 설정 전까지 시범재배 협약을 통해 조기보급 체계 확립
 - ※ 신품종보호협약 발효 이전인 '07년까지 밤나무 18개소, 복분자 딸기 8개소에 시범재배 협약 체결
 - 통상실시권 협약체결을 통한 신품종 보급
 - 국제식물신품종보호(UPOV) 규정에 의해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직무육성 우수품종은 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등과 통상실시권 협약을 통해 묘목 증식 후 재배농가에 보급
 - 산림 관련기관을 통하지 않고 통상실시권 협약에 의해 직접 재배농가(작목반)에 보급하기도 함

문25)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5~7단계 → 3단계) 및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가공·유통을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한우/돼지) : ('12) 11%/4.7% → ('13) 18.6/8.6 → ('17)37.1/25

○ 거점 도축장 선정·지원('12 : 8개소 → '15 : 20)을 통해 위생수준 제고 및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 육성

○ 합리적인 소비지가격 유도를 위해 농협계통의 정육점(가맹점)과 정육점식당(축산물프라자 등) 개설 확대

* 정육점/정육점식당(개소) : ('12) 297/269 → ('13) 370/300 → ('17) 1,000/600

□ 아울러 저지방 부위도 균형있게 소비될 수 있도록 육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 판매 가능토록 영업규제 완화 등 추진('13년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문26) 이번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핵심은?

□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확산 등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
- 도매시장 등 기존경로는 경로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

* 농산물 유통효율화 목표 비중(청과물의 소비자 구매 비중) : '16년까지 도매시장(40%), 대형유통(30%), 농협(20%), 직거래(10%) 경쟁체계 구축

- 도매시장 : ('12) 53% → ('16) 40, · 대형유통 : ('12) 31% → ('16) 30
- 농 협 : ('12) 12% → ('16) 20, · 직 거 래 : ('12) 4% → ('16) 10

□ 아울러 생산자·소비자간 상호 소통을 통해 「참여와 합의」에 바탕한 수급안정시스템을 구축

⇒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기존경로의 효율성 제고, 수급안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 마련

문27)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추진이유와 기대효과는?

- 농협이 생산자 대표 단체로서 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본연의 임무에 다소 소홀
 - 지난해 농협법 개정('12. 3)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을 토대로 금년부터는 경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
 - 계통판매 확대와 도매물류기능 강화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효율화에 농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 농협의 역할 >

- ① (산지) 전속출하조직육성, 지역조합 농산물을 농협 판매조직으로 계통출하
- ② (도매)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 및 물류 효율화, 공판장이 정가·수의매매 선도 역할
- ③ (소매) 지역조합 하나로 마트 체인화로 계통판매 및 판매 채널 확대
- ④ (직거래) 생산농가가 산지농협 판매장을 통해 직판 도시농협·산지농협 연계 직거래(장터 등)

-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으로 집중된 현 소비지 유통구조가 견제와 상호 균형을 이루게 되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농협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참고 : 농협의 농축산물 시장 점유비율 >

- * 도매 취급 비중 : ('12) 12.6% → ('16) 22.3
- * 소매 취급 비중 : ('12) 11.6% → ('16) 14.2

문28)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외쳐 왔는데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농산물 유통의 경우 출하자 및 유통관련 종사자의 영세성 등으로 단기간 내에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게다가 최근 기상이변 등 수급불안 요인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정책성과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
- 과거 정부의 공과 과를 엄밀하게 분석, 정책적으로 진전이 있었던 부분은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단기적 성과에 그친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
 - 산지유통의 규모화, 도매시장 상장경매체제 정착, 비축제도 확대 등은 상당한 성과와 진전이 있었다고 봄

문29)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인위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가능한가?

- 모든 유통경로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유통단계 절감 효과를 얻겠다는 것임
 -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유통계열화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전체 유통경로의 약 1/3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

< 참고 : 농산물 유통효율화 목표 비중(청과물의 소비자 구매 비중) >

- * '16년까지 도매시장(40%), 대형유통(30%), 농협(20%), 직거래(10%) 경쟁체계 구축
- 도매시장 : ('12) 53% → ('16) 40
- 대형유통 : ('12) 31% → ('16) 30
- 농 협 : ('12) 12% → ('16) 20
- 직 거 래 : ('12) 4% → ('16) 10

문30) 이번 대책으로 40-45%에 달하는(배추의 경우 80%)
농산물 유통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 농산물 유통이 선진화됨에 따라 상품화를 위한 선별, 세척·절단, 소포장 및 저온유통 등의 유통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 이는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제고로 보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비용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편임
 - * (예시) 사과의 유통비용 : 한국 45%, 일본 59%, 미국 78%
 - 다만,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있는 부분은 절감 필요
- 이번 대책에서는 무·배추의 경우 가격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을 포함
 - 높은 가격진폭으로 인한 고(高)위험 고(高)수익 구조에서 발생하는 산지유통인의 비용과 이윤이 배추 등의 유통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화하여 산지에서 발생하는 원물의 다단계 거래관행을 없애고 도매시장의 가격 폭등을 방지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비용 절감 효과 예상
 - * ('13상) 품목조합 결성 → ('13하) 무·배추 시장점유율 10% 달성 → ('15) 30%

문31)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대책과 시간을 두고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대책은?

	대 책 내 용	이 유
즉각적 성과 발생	직거래 확대	효과의 파급 규모는 작지만 단기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 사례 : 용진농협의 농산물 가격인하 (대형마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인하)
점진적 성과 기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산지·도매·소매 단계에 이르는 연계체계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나 효과는 점진적으로 확대 예상
장기적 시계 요구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물류혁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선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속적 추진 필요

문32) 정가·수의거래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매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식	최고가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낙찰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 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 하는 방법
장점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거래물량·가격 안정성
	기준가격 제시	대규모 산지 거래교섭력 발휘 가능
단점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 확대	불투명한 거래로 영세 출하자 피해 우려
	유통단계 및 물류비용 증가	기준 가격 제시 불가

* 도매시장 거래비중('12, 청과) : 경매·입찰 79.3%, 정가·수의매매 8.9%, 기타 11.8%

문33) 유통단계 축소와 직거래 확대 방안보다는 의무경매제를 축소하고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91년 이후 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제도 정착으로 농산물의 기준가격인 도매가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형성되는 등 긍정적 역할 수행
 - * 과거 위탁상의 감가정산(칼질), 대금정산 지연 등의 횡포 근절
- 다만, 물량 부족 시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이 경매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실임

- 이러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할 계획임
 - 경매제는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일종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거래 방식인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거래 주체(상인)를 의미
 - 경매제의 단점 보완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호 및 유통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물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바람직

- 시장도매인제도는 출하자와 시장도매인이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되므로 거래교섭력 있는 대형 출하자에게 실익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출하자들은 거래교섭력에서 열위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음
 - 그러므로 시장도매인제도는 대금정산조직 설립, 산지의 규모화 및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확대의 전제조건임
 - 앞으로 시장도매인제 확대는 시장중사자, 출하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34) 과거에 추진한 농산물 직거래 대책과의 차이점은?

- 과거 생산자·장터 중심의 일회성·산발적 성격의 직거래가 아닌, 소비자 참여 및 IT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추진
 - 직거래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
- 또한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뿐만 아니라 IT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자조직과 슈퍼마켓 등의 소매업체와의 직거래도 병행

<직거래 유형별 활성화 추진내용>

유형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비고
직매장	용진농협 (완주)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계약을 맺은 약 180여 농가가 가격·수량 등을 결정하여 판매대에 진열	매출액('12) : 43억원 매장면적 : 약 85평
	활성화 방안	·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교육·컨설팅 확대 ·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직매장 설치 지원 · 직매장 운영경비 절감 지원(신용카드 수수료, 홍보비 등)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과천)	매주 수·목요일에 개장하는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에 약 90여 농가가 참여하여 직접 판매	매출액('12) : 83억원 정부지원('12) : 25억원
	활성화 방안	·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연계 및 지자체(공공시설)와 연계한 운영 · 바로마켓 운영노하우(운영규정 및 자치회) 교육	
꾸러미	흙살림 (청원)	매주(또는 격주) 단위로 10여개 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	소비자회원 : 1천여가구
	활성화 방안	· 꾸러미 업체간 통합 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 꾸러미 제작, 통합 배송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문35) 정부의 사이버 직거래 방안과 관련하여, 이미 주요 대형 마트들은 대부분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농민들이 고령에 영세한 상황이므로 온라인 직거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B2B 사이버 직거래의 경우, 농가와 전속 출하계약을 맺은 규모화된 산지조직과 슈퍼마켓 등 소매업체간 사이버 직거래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 영세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을 통한 공동출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산지조직이 사이버 직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문36) 농업관측 강화를 위해 농진청이 관측센터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 배추 등 15개 작물에 대한 주산지 관찰포의 생육상황 조사 결과를 관측센터에 제공하여 작황 및 생산전망 분석에 활용
 - * (관찰포 조사품목) 벼, 보리, 콩, 참깨, 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속 품목별 전담지도사를 농업관측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 품목별 재배동향, 주산지 작황, 산지거래동향 등을 파악하여 관측센터에 제공

문37) aT의 양파 도입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되어 반송조치 되었다는데 ?

-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13년도 양파 TRQ 물량 20,645톤을 국영무역 방식(3,500톤)과 민간 수입권공매 방식(17,145톤)으로 도입추진
 - aT가 국영무역 방식으로 3,080톤을 도입하였으며, 이중 340톤에서 양파 외피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전량 반송 통보한 바 있음
 -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수입양파 품위검사 합격품(국영무역)과 불합격품(민간도입)을 분리하여 통관시키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 (통상 7~10일 → 13일)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aT의 국영무역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품위검사와 관련된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음

※ 양파 TRQ 물량 도입상황

구분		계획 물량	도입 물량	반송 물량	판매 물량	향후 도입계획	비고
기본 물량	국영무역	3,500	3,080	340	2,740	360	3.25일한 도착완료
	수입권 공매	17,145	12,464	-	판매중	4,681	1,400톤은 3.25일한 도입, 잔량은 3월말 도입
증량물량 (국영무역)		20,000	-	-	-	360	3월말한 도착완료

* 증량물량중 잔량(3만톤)은 '13년산 양파 생산량과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참 고>

aT, TRQ 수입양파 관련 보도 관련 확인사항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3.20일자, 아주경제신문 · 이투데이
- 보도요지 : 농관원 품위검사에 합격한 양파 240톤을 aT가 즉시 인수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 곰팡이 발생양파 전량을 반송하면서 그 책임을 수입업체에 전가

□ 사실확인 내용(aT)

- (반송물량) '13년 aT가 국영무역으로 도입한 양파는 3,080톤이며, 이중 통관후 곰팡이 발생으로 반송된 물량은 340톤임
 - * 곰팡이 발생·반송업체 : (보오미)240톤, (규영유통)20톤, (이코인터내셔널)80톤
 - 입찰시 참고 입고전 품위저하 물품은 반송조치 계획임을 사전 통지
 - 신문에 보도된 무역업체 보오미가 수입한 양파 240톤도 입고전 국제공인검정회사의 정밀 검정결과에 따라 반송 통보
 - * 반송물품(240톤) 대금도 보도된 5억원이 아닌 2.2억원(198천불) 수준
- (곰팡이 발생사유) 선하증권 분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aT와 TRQ 구매계약을 체결한 보오미는 500톤을 수입하였으나, 이중 농관원 품위검사에서 240톤만 합격, 나머지 260톤은 불합격
 - 선하증권(B/L) 분리를 통해 aT는 합격품만 인수하고, 보오미는 불합격품(식약청·식검 검사는 통과)을 국영무역 외 다른 방식으로 도입하기를 희망
 - * 일반적으로 운송물량 전체가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 500톤 전량 반송 불가피, 농관원 검사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구분하여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분리 필요, 이 경우 신용장 거래은행(농협)과 선박회사간 합의 필요
 - * 동건에 대해 신용장 거래은행과 선박회사간 의견조율에 13일 소요(통상 7~10일)

문38)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 **(투입비용 절감)** 농자재 적정 사용 및 투입비용 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사용량 절감, 농기계 공동이용 및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보급
 - 토양진단을 통한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 감소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확대를 통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공동이용 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통한 난방비 절감

- **(가격 안정)**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 유통구조개선, 업체의 가격 담합 방지 추진
 - '15년까지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유통단계 축소(4~5단계 → 3~4단계)
 - * 권역별 유통센터 개장 계획 : 영남권('14), 중부/호남권('15)
 - 농자재업체의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공정위)

- **(산업기반 강화)** 농자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을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 산업화 도모
 - 에너지절감형 농자재, 융복합 농기계 R&D 지원('12:636억원→'17:1,000)
 - 친환경 비료·농약 개발 등을 통한 수입대체 방안 마련
 - '농기계 종합유통센터'('13~'14) 설치 등으로 농기계 수출을 촉진

- **(제도정비)** 전략적 정책 지원을 위한 법·조직·사업 정비
 - 농자재 전담부서 신설, '(가칭)농자재산업육성법' 제정 및 관련 사업 정비

◆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장기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4월)

문39)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추진배경) 경영규모, 소득, 연령 등 농가별로 발전단계와 수준이 상이하야 평균적·획일적 접근방법은 정책 효과성이 낮음
 - 농업경영비 증가,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도농간·농가간 소득 격차 확대 등 농가 소득구조는 악화 추세
 -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유형별 정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 (추진방향)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농가유형을 재 검토하고 농림사업을 재분류하여 맞춤형 농정지원 체계로 전환 추진
 - “(가칭)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농가유형별 분류·정의,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5월)하고, 정책대상별 맞춤형 농림사업 지원 방안 마련(8월)
 - ※ (예시) 농가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가 되도록 협업체에 맞는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 사업추진 절차(예) : 협업체 구성(농가) → 사업계획 수립(협업체) → 사업성 평가(정부) → 사업자 선정(정부) → 지원 금리 결정(정부) → 사업실시(협업체) → 사업점검(정부) → 평가(정부) → 환류(정부, 협업체)

문40) 사료가격 전망과 농가 사료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은?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2.10월부터 진정 되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7월) 299→(8월) 316→(10월) 295→('13.2) 278

○ 국제곡물가격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어 '13년 상반기 국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KREI)

□ 축산단체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요구하며,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 중(4건, 상임위)

○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농가참여 저조 및 사료업체 부담금의 사료가격 전가 우려 등으로 실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김영록·홍문표 의원안: 총 기금보전액 21,269억원, 정부부담액 8,508(총액 중 40%)

□ 기금 도입보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료가격안정방안 강구

○ (축산농가 지원) 농가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신규 지원('13년 1,700억원, 3% 융자) 및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11년말 → '14년말)

* 사료가격 급등시 한시적인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 검토('08년 1.5조원, 1% 융자)

○ (사료업체 지원) 할당관세 품목* 및 자금지원** 확대

* 적용품목/무관세품목 : ('10) 10개/2개 → ('11) 11/4 → ('12) 21/16 → '13) 22/17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12 : 600억원 → '13 : 950), 수출입은행 지원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12 : 0.5조원, 우대금리 최대 0.5%p → '13 : 1조원, 1%p)

○ (조사료 공급확대) 조사료 공급량 확대*로 사료곡물 수입을 대체하고 배합사료비 절감(조사료 증산 보완대책 마련, '13.4)

* 재배면적/생산량 : ('12) 27만ha/224만톤 → ('13) 35/285 → ('14이후) 37/314

○ (원료조달·비축)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문41) 올해 4월중 확정한다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의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농업인의 수요와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17년까지 대상품목을 66개로 확대(전 품목의 50% 이상)할 계획
 - 지금까지 특정위험(일부재해)만 보장하던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에 대해서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농어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 책임범위 확대(재보험 시스템 재검토), 가입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피해조사 등을 추진
 - 자기부담비율(현행 20%, 30%)을 보다 다양화하여 농가 선택권을 확대토록 하고, 위험도나 경작규모 등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도입
-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
 - 보험통계 생산·관리 강화, 보험관련 정책·기술 연구 확대,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추진
 -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과학적 평가기법 도입 등 추진
 - 농업재해보험 업무 전담기관(가칭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
- 상기 제도개선 내용을 관계부처·국회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확정·발표할 계획

문42) 신속한 손해평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농업재해보험의 피해조사는 피해발생 신고 즉시 해당 농협에서 손해평가인력을 통해 실시되는데, 거대재해가 발생한 작년 과수의 경우 약 7~10일 정도가 소요
 - 과수의 경우 약 3일이 지나면 손상되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늦어 낙과 과일을 재가공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
- 피해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주된 원인으로서는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
 - 보통 손해평가인력은 그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협직원 등이 위촉 되는데, 한 번에 많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
 -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다른 농장에 피해조사를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
-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피해가 없는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는 지역 간 교차 평가 등을 확대하여 피해조사 소요기간을 3~5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임
 - 전문적인 손해평가인력(자격증화)을 양성하는 한편, 목측에 의존하는 조사방식을 피해도감을 작성하여 활용,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소요 기간 단축

* 전문손해평가 인력양성 : ('13) 400명 → ('14) 600 → ('16) 1,000

문43)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안은?

□ 농업재해보험은 공공성을 지닌 정책보험으로 민영 보험사 등 민간시장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농업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조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며, 동일 재해라도 품종이나 재배방법, 지역과 지형 등에 따라 피해정도 차이가 커 정확한 손해평가가 어려운 특성 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농업재해는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만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 국가가 재보험기금을 운용하여 일정 수준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험금을 부담

□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

○ 농업인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의 개발, 적정한 보험료율의 산정, 농업 보험통계의 생산·관리, 농업 전문성을 지닌 전문손해평가인 양성 및 국가 재보험 운용 등의 기능 담당 필요

* 농업재해보험은 보험상품 개발·피해조사 시 농업분야 전문성 요구, 보험목적물·피해농어가의 전국적 분포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피해발생의 계절성, 농어업 보험관련 기초통계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

◆ (미국) 연방보험공사(FCIC)를 통해 농작물보험사업 운영

◆ (타분야) 건강보험공단·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정책보험 집행·관리

□ 구체적인 전담기관의 설립형태와 규모와 기능 등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12.10~'13.3)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

문44) 자연재해 피해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한다는데,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 현재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을 통해 생계지원비·대과대·입식비 등의 직접지원과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피해규모를 산정할 때, 수확기 과수 등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등의 피해는 제외되고 있으며,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재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 또한 가구당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품목별 지원단가도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 재해지원시 실제 피해가 반영되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피해조사 시 가축·수산생물·수확기 과수 피해를 포함하고,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 가구당 지원한도와 품목별 지원단가를 상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13년 상반기내 개정할 계획임

< 참고 : 재해지원 개선 과제와 개정필요 법령 >

개선과제	개정필요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산정기준에 가축·양식수산물·수확기 과수 등 포함 ○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대상에 포함 ○ 가구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증액 ○ 복구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p>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p> <hr/> <p>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4개부처 합동고시)</p>

문45) 유휴농지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 (원인) 유휴농지는 불리한 영농여건,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발생

○ 유휴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들을 중심으로 농촌의 노동 인구 감소, 부채지주에 의한 소유 확대로 더욱 증가되는 추세

* 유휴지면적 : 약 25만ha(KREI, '07년 추정치)

□ (향후계획) '13년 유휴지 전수조사(4~10월)를 통해 유휴지의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지에 대한 종합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12월)

○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대비하여 전체 유휴지면적을 파악하고, 현장 실사조사 등을 통해 유휴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 유휴농지 자원조사 : 10억, '3년 신규사업 반영

○ 유휴지의 즉시이용, 복구 후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14년부터 농지로서의 복원을 추진

문46) 농업수입 보장보험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은?

- **(필요성)** 농작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변동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경영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요)**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의 수입이 보장수준보다 감소할 경우 일정비율을 보장
 - 수량과 가격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생산량만을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격만을 보전하는 목표가격제 등에 비해 실질적 수입변동 완화 가능
 - 정부가 소득감소분을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직불제 방식에 비해 농업인의 책임성 제고 가능
- **(해외동향)** 선진국에서는 수량과 가격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 보험방식의 제도도입이 확대되는 경향
 - 미국은 생산량보장방식과 수익보장방식의 두가지 보험을 운영
 - * '09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89억)는 '06년(\$46억) 대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 전체 보험료에서 수익보장보험 비중은 약 81%
 - 캐나다는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감소시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적립한 적립금을 인출하는 보험 형식의 농업소득안정계정 운영
- **(추진방안)**제도 도입방안 등 검토를 위해 '13년 5개 품목(콩, 양파, 포도, 시설오이, 배추), 주산지 등 40여개 지역 대상 도상연습 실시
 - 품목별 재배시기 및 재해보험 판매시기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추진일정('13.3월~'14.1월) : 대상조합 및 농가선정 → 계약체결 → 손해평가인 교육 →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출 → 도상연습 결과분석
 - 도상연습 결과를 분석하여 도입방안 등을 검토, 상품 설계에 반영(~'14.3월)

문47) 쌀직불제 개요 및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시 기대효과는?

□ (개요) 쌀직불제도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

○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여부에 상관없이 80만원/ha 지급

※ 단가추이: ('01) 234천원 → ('02) 467 → ('03~'04) 500 → ('05) 600 → ('06~'12) 700 → ('13) 800

○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쌀값 차액의 85%를 쌀 생산 농가에게 지급

- 지급단가 : (목표가격-수확기 쌀값) × 85% - 고정직불금

□ (단가인상 효과) 연차적으로 ha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30만원 인상 함으로써 농가당 평균지급액이 '12년 대비 327천원 증가 예상

○ 농가당 평균 고정직불금 수령액 : ('12) 763천원 → (~'17) 1,090

※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 ('12) 70만원/ha → ('13) 80 → (~'17) 100

※ 쌀 농가당 수급액 : ('12) 763천원 → ('13) 872 → (~'17) 1,090

* '12년 기준 농가당 평균 쌀직불 수급면적 1.09ha 적용 산출

문48) 밭직불제 개요 및 올해 추가되는 품목과 기대효과는?

- (추진배경) 농가 소득보전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9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 도입('12년)
- (개요) '12년 보리, 콩 등 19개 밭작물에서 '13년부터 7개를 추가하여 26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에 따라 40만원/ha 지급
- (대상품목)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작물
 - ('13년 7개 추가품목)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 ('12년 19개 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대상농지)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기대효과) '13년도에 감자 등 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밭직불 대상면적이 18천ha(72억원) 확대가 예상되고, 수혜를 받는 농업인이 증가하여 소득안정에 기여

문49) 쌀 목표가격 변경안 산출 방법 및 절차는?

□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목표가격 변경 방법과 절차 명시

○ (개념)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법 제2조제3호)

*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 (법 제10조제1항)

○ (산출방법 및 절차)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10조제2항)

-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시행령 제6조제1항)

$$\text{변경 목표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

** 절단평균값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

- 농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시행령 제6조제2항)

* 변경 목표가격 최초 적용년도 : 변동직불금 지급시기인 '14년 2월

문50) 농업·농촌환경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 (농업·농촌환경프로그램) 농업행위가 환경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환경 제공 등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영국의 경우, 농업인들은 정부기관과 자신들이 준수할 농업환경보전의 수준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

- 동일한 농지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얻은 점수를 기반으로 지원규모 결정

□ (향후 정책방향) 경관, 친환경, 조건불리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공익·환경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관계기관 T/F 구성 및 정책연구 용역(5월)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51)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이 무질서하게 입주 농촌경관을 훼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난개발 방지 및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제도 도입
 - 마을권역정비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농촌시설 계획 수립 의무화('14)
 - 주민 일정비율(예: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의 층수·종류, 지붕색깔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주민협약제” 도입
 - 농어업유산 지정 및 경관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농촌다움 보전을 위해 농업유산지정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확대(2개소 → 5)하고, 국가농업유산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
 - * 대상 유산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 경관보전직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 경관직불 : ('12) 32종(76억원) → ('13) 모든 경관작물(141억원)
 - 작물재배 중심에서 주민협약방식의 환경·경관 보전활동으로 확대
 - ‘(가칭) 다원적 자원의 보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정안 마련('13)

문5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 및 농어촌 현실을 반영할 방안은?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 주거, 교통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 8개 부문 : ①주거, ②교통, ③교육, ④보건의료, ⑤사회복지, ⑥응급, ⑦문화여가, ⑧정보통신
 - ** '12년 조사결과, 방과후학교 운영(118%), 문화시설 설치(98.6%) 등의 기준은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은 반면 평생교육시설 운영(19.8%), 방범용 CCTV 설치(20%) 등은 낮음
- 서비스기준이 농어촌 현실과 정책 수요를 더 잘 반영하도록 부문과 항목, 목표치를 수정·보완할 계획(시행령 개정 예정, ~6월)
 - 현재 수정안에 '안전' 부문, '경찰순찰' 항목 신설 등(총 9개 부문, 3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농어촌 환경, 교육 등에 관한 최소기준을 검토
 -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연계하여 기준달성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
 -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예산 우선 지원 등 검토

문53)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거 여건 개선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 자력으로 주택의 개보수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집 고쳐주기 사업 및 공동생활홈 조성 등 추진
 - 재능기부와 연계,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 추진('13:410개소)
 - 마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조성 ('14년까지 4개소 조성, '15년 이후 매년 30개소)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광특),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농특) 등 활용

- 아울러, 국토부 및 복지부 등의 주거복지대책 추진시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예)국토부의 전세임대주택사업 및 복지부의 집수리사업 등

문5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부조 제도임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선정됨
 -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급여 등으로 최저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지원(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현금급여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등 지원

$$\text{급여액} = \text{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 + \text{기타급여(교육, 의료 등)}$$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현금급여기준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9

예)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 급여액(기타 급여 없는 경우)

* 급여액 268,453원 = 현금급여기준 468,453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특례

□ 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특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례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

문55)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추진계획)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 방법 변경 등에 따른 연금 모델 재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13.4~6월)하고,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 필요

- (예상 수령액)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로 연금모델을 재설계 하여야 구체적인 연금 수령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12년말 현재 월평균 연금 수령액 수준 (월 81만원)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담보농지 평가방법 변경시 산정모델의 다른 기초변수(사망율, 이자율 등) 조정 및 담보농지 경매율(매각가율) 등 반영 필요

문56) 농식품 분야 일자리 현황 및 대책은?

- '11년 농림업 부문 총부가가치는 전체의 2.4%(26.8조원)에 불과하나 농림업 및 식품 분야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13.9%(340만명) 수준
 -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음
 - 농산물 단순 가공에서 향토자원의 고차 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6차 산업 육성
 -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신규 후계농 육성
 - 협동조합, 농식품형 사회적 기업 등 공동 경영체 지원
 - 식품·신소재·농자재·레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지원
 - 임업·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림분야 영역 확장을 통한 산림복원 전문가 등 신규 일자리 발굴

문57) 농촌 활력찾기 운동이 새마을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기본적으로 농촌 활력찾기 운동은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봄
- 새마을운동이 근면·자조·협동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 근대화 운동이었다면,
- 농촌 활력찾기운동은 고령화와 과소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주도의 자발적 마을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농촌을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미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운동임

문58) 공공비축 품목 확대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은?

쌀 이외에 공공비축 대상으로 확대할 품목은 **밀과 콩**임

- **밀과 콩**은 ①국내 소비량이 많고, ②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③수입산과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하고 ④식량 안보상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임

밀	콩
○ 국제 수급·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밀가루, 빵, 국수 등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비축 필요성이 높은 품목임	○ 국산과 수입산이 차별화되어 소비되고 가격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산수요도 13~14만톤 정도 유지되어 비축대상으로 적합

국내 비축물량은 **국내소비량의 5% 수준(17년까지, 수입산 포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 FAO 권고기준은 17%이나, 이중 12%는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격안정용으로 비축하고, 5%는 국내 흉작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

- 밀·콩의 경우 생산이 많지 않으므로 초기에는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은 물량의 국산을 매입·비축하고, 이후 수입산을 포함하여 소비량의 5%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비축을 확대

* '14년 밀은 10천톤, 콩은 5천톤 매입·비축 추진

- 궁극적으로 FAO 권고기준에 따라 1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수입산 밀·콩은 유통재고 확대, 해외 비축 등의 방식 검토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기 완료(3월)하고 시행령을 개정(9월)하여 '14년부터 밀, 콩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

문59)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수립한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21)'의 후속 조치로 종합계획 상의 과제별 실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마련
- 주요 추진과제는 진출지역 다변화, 국내 반입 활성화, 전문 인력 육성, ODA 연계 등으로 분야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해외농업개발심의회 심의 후 최종 확정·발표

문60) '민관 합작 곡물회사 설립방안' 주요 내용은?

- 해외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산지부터 국내까지 연계되는 곡물유통체계* 구축이 필요
 - 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이 합작, 곡물회사를 설립하여 미국내 곡물유통망(수출엘리베이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 산지 수집(산지엘리베이터) → 내륙운송(철도·강) → 수출항 엘리베이터 → 해상운송 → 국내 수입항 수출엘리베이터 → 수요처
 - 향후 합작 곡물회사와 제분·사료업체 등 실수요자와의 연계를 통해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할 계획

문61) '13년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향후 계획은?

- (**'13년 변경 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기존 쇠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16개*로 확대 시행('13. 6.28일부터)

*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추가품목)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 메뉴판 또는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에 대해서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알아보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향후계획**) 식품소비 중요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 유도
 -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추어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추진
 - * 커피(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 검토
 - * 양고기(염소),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 →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 검토

문62)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은?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단지·지구 조성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규모화·효율화 추진
 - 광역 단위(600ha 이상) 친환경농업단지와 마을 단위(10ha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조성 확대
 - 광역단지(누계) : ('12) 42개소 → ('13) 44 → ('15) 60
 - 지구(누계) : ('12) 1,076개소 → ('13) 1,112 → ('15) 1,300
 - * 지역 내 농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농축순환 자원화시설, 산지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 지원
 - 기조성 단지·지구의 사후관리 강화 및 특화 발전 지원
 - 목표관리시스템 운영 및 단지·지구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 우수 단지·지구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특화 발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실적 저조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써 전문 유통채널 기능을 담당할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 경기 물류센터 개장('12.10, 경기 광주), 전남 물류센터 건립 중('12~'15, 전남 나주)
 - 주로 소규모 직거래 형태로 거래되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규모 전문 유통망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분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식당·학교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원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관련 신뢰성 있는 유통 정보 제공 등 기대

문63)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 **농협 생산·출하조직을 GAP 선도 핵심조직으로 육성**
 - GAP생산조직 육성 조합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자금 및 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농협중앙회, ('13) 350억원)
-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농산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GAP인증을 위한 토양·용수관리 단체조직화, 전문가 컨설팅, 분석비용 등 지원('13 : 27억원)
- **2015년 폐지 예정인 저농약 인증농가의 GAP 인증전환 추진**
 - 품목의 특성상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과실류 농가대상으로 GAP 전환 추진 (중복심사 생략 등 GAP 인증절차 간소화)
- **APC 등 산지유통 시설·장비 보완사업을 통한 GAP시설 확충(718→800)**
 - GAP인증 농가가 GAP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GAP시설 지원 ('13: 21억원)
 - * 전처리작업장, 위생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등 지원
- **GAP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 대형유통업체 전문 홍보매장 운영, 소비자단체 주관 GAP교육, 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등 홍보 확대

문64)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 추진현황·성과

- 환경친화적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09.5월) 등 법적 기반을 토대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10.4월)을 추진하고 있음
- 녹색식생활지침 개발(’10)과 이를 토대로 학교(녹색식생활 길라잡이, 180천권) 및 가정용(가정 식생활 수첩, 연 100만권) 교육교재 제작·보급을 추진 중이며,
- 식생활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확대 중에 있음
* 교육기관(26) : (’10) 16 → (’11) 6 → (’12) 4, 체험공간(77) : (’10) 22 → (’11) 50 → (’12) 5
- 학생 대상으로 식습관교육프로그램, 교사 대상으로 전통절기음식교실 등 대상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10개 시도) 및 조례 제정(13개 시도, 9 시군구) 등 식생활교육 지역 추진체계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식생활교육박람회(’11. 15천명, ’12. 23천명 관람), 관련 홍보를 체계화한 종합홍보 실시, 민간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범국민 식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향후 추진 방향

- 식생활 및 영양 조사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할 계획
 - 농어촌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 실태조사(6월) 및 결과에 따라 영양 취약계층 해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 일반인 대상으로는 우리 농업과 연계한 연령 및 건강 상태 맞춤형 식생활 실천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농업과 소비자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
-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절감 등 생활공감형 식생활 개선을 적극 추진
- 또한 농업·농촌의 가치에 기초하여 학생, 교사, 가족, 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 자치단체 식생활 사업 지원(13 신규)으로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등 지자체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문65) 상설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협력을 위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 **총리실**(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약처) 및 **관련기관**(교육부, 관세청) 과의 「**생산단계 상설 협의체**」 구성(4월)
 - * 식약처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3월)과 연계, 연 5~6회 협의회 개최
 - * 기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과 연계, 관련기관의 협조 방안 모색 등
- **생산단계에서의 식품 사고 및 신종 위해요소 출현**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공동 대응책 마련
 - 유통·판매단계의 **불량농식품 사전 차단**을 위한 원인 분석 등
- **소비자·생산자 교육 및 홍보,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 추진

문66) 관련부처 간 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방안은?

- (현황) 우리부 소관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과 식약처 소관의 푸드나라(Foodnara) 연계 운영 중
 - 해외 위해정보, 검사적합 품목정보 등 푸드나라의 가공·수입 식품 정보(86만건)를 연계 제공 ('12년 기준)

- (향후 추진방향) 식품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관련부처간 식품안전정보 외 식품소비정보 종합 제공 ('13.9)
 - 식약처의 식품이력추적 및 부적합식품정보와 우리부의 검역·방역, 품질정보 등 안전 정보 연계 제공
 - 식생활, 건강·영양, 가격 비교정보 등 구입에서 조리까지 건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소비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농식품 활용 식단 정보 제공 : 제철 농식품의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 예시 및 조리법 등
 - 소매가격정보 제공 : 지역별·시기별·유통채널별 소매가격정보 제공 및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농식품버전 컨슈머리포트 제공 등

문67) 도매시장 부적합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은?

- (현황)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조사
 - 도매시장 간이검정결과 부적합 의심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정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품은 폐기조치
- (문제점) 도매시장에서 부적합 발생시 문서,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있어 부적합 정보의 전파 및 추적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
 - 도매시장 간 부적합 정보 공유 미흡으로 반입 금지조치를 받은 도매시장을 피해 다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향) 도매시장과 농관원의 부적합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적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생산과 유통판매를 연계한 안전관리 실시로 우리 농산물 안전성 향상
 - 부적합품에 대한 실시간 생산지 추적조사하여 부적합 시중 출하 차단 및 다른 도매시장으로 회피 출하를 미연에 방지



문68) 성과 측정을 위한 유형별 통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생산할 계획인지?

- 현행 주부업별 구분은 경지규모, 판매금액, 농업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나, 현행 구분기준은 활용도가 낮고 경영주 연령이 농가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대한 구분이 없음
 - 주업농가 : 농업수입>농외수입, 30a이상 또는 판매금액 200만원이상
 - 전문농가 : 주업농 중 3ha이상 또는 2천만원이상
 - 자급농가 : 30a이상 또는 판매금액 200만원미만

- 2013년 결과부터 농가 경영주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부업별로 구분하여 생산
 - 주업농가 :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업소득 비중 50%이상
 - 주업농가 :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업소득 비중 50%이상
 - 부업농가 :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업소득 비중 50%미만
 - 부업농가 :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업소득 비중 50%미만

문69)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WTO 체제 출범('95년)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 중임
 -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 등 구축('06.5)
 -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 서비스(FRIS)시스템 구축('11.5)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12.1)
 - 보조금 부당 사용 업체의 대표자에게도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개정('11.7.14)
 - * 5억원 이상 : 5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년,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년 등
 -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시 관계기관 합동 현지 확인·조사 및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개정('12.12.18) 하여 금년부터 시행 중
- 정책자금이 적격자에게 지원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선정, 집행 및 평가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점검
 - 농업경영체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자금집행 효율성 제고
 - * 경영체 D/B, 마을 D/B, 농식품 R&D 정보시스템(FRIS) 등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에 부당수령 신고 접수처 설치·운영, 농림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정례적 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중심으로 예산편성 체계를 개편

문70) 그동안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및 성과는 무엇인가?

□ '95년 WTO/UR 출범 이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 '92년부터 '11년까지 총 159조 7,189억원 (국고 기준) 투융자

* 종합대책 : 1차(42조, '92~'98), 2차(45조, '99~'03), 3차(119조, '04~'13)

- 1, 2단계 대책('92~'03)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로 농업 SOC,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에 주력
- 3단계 대책('04~'13)은 FTA 등 개방 심화에 대응하여 소득 안정, 농촌복지 증진 등의 사업에 투자 강화

□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진흥지역 경지정리, 도매시장, RPC 등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친환경 인증제 및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진흥지역 경지정리율 : ('95) 54.4 → ('10) 92.9%, 공영도매시장 : ('95) 11 → ('12) 33개소

* RPC : ('95) 185 → ('11) 233개소, 벼농사 기계화율 : ('95) 82.9 → ('11) 91.5%

* 직불제 비중 : ('01) 4.1 → ('13) 18.0%, 친환경 재배면적 : ('01) 0.2 → ('11) 10.2%

*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 ('95) 34.7 → ('11) 76.9억불

○ 농촌 복지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건강보험료(1인당) : ('04) 210 → ('11) 728천원, 연금보험료(1인당) : ('04) 168 → 404천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액 : ('04) 607 → ('11) 1,103억원

문71) 농식품 재정·투융자 시스템 개편방안 구상내용은?

- 정책자금이 적격자에게 지원되고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공개모집, 선정된 지원대상자 지역별 공개를 추진하고,
 - 농식품 재정사업 전체에 대해 정례적으로 산하·유관기관과 현지 합동조사 실시 및 부당수령 신고 접수처 설치·운영 등도 추진하겠음

- 또한,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으로 예산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음
 -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단 또는 폐지하겠음

문72) 정부지원 자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잘 체크하기 위한 방안은?

- 정책자금이 적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설명회 개최, 보조사업 지원자 홈페이지 일괄 공지 및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겠음
- IT기술 등을 활용,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음
- 또한, 5년간 보조사업 이력확인, 부당수령 신고접수처 설치·운영과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편중지원을 방지해 나가겠음

문73)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부당수령 신고 접수처 설치 계획은?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를 개편 할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학계·연구원 등 각 계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30명 이내로 구성('13.4월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민간) 구성(안) : 생산자단체(8명), 소비자단체(8), 학계 및 연구원(9), 언론인(3), 관련 공무원(2) 등
- 자체평가위원회는 농가소득향상, 복지확대, 경쟁력제고 사업군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제고
- 정책자금의 적격자 지원 및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내에 부당수령 신고 접수처 설치·운영
 -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및 수령에 대한 신고와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언론·감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 등 검토
 -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도 검토(근거 : 보조금법 제39조)

문74)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 공간 중심의 마을(지역) 정보, 농식품분야 R&D정보 등을 유형별로 통합관리 및 사업지원 시스템

①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농식품 사업관리 및 유관기관에서 발생·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조·용자사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별로 통합관리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각종 농기계·직불제 등 정보를 정비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인 자격확인, 사후검증 등 사업관리

* '13년 TF 구성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직불제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

② 농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GIS를 활용하여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및 마을·향토자원 정보 등을 통합관리 추진

* '12년 시범시스템 구축, '13년 지역개발사업 DB 본격 구축 및 시스템 확충

③ 농식품 R&D 정보시스템(FRIS) 활용도 제고

- 연구과제·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가 진행하는 농식품 분야 R&D정보(446개 표준정보) 등을 통합관리

* '10년~'11년까지 시스템 구축, 정보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 활성화 지속 추진

문75) 농식품부 업무보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스마트 농정'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간 재정 투융자를 통해 단기간 내에 농업인프라를 정비하고, 안전영농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소비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 일부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와 경중, 완급을 조절해 나가야 함
 - 우선, 정책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4월까지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통계 생산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런 통계에 기초해서 5월까지 농가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음
 - 아울러, 각 계의 지혜를 모아 농업·농촌에 대한 해법을 찾고, 농정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3월부터 '국민 공감 농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

IV

언론 보도



2013년 03월 22일 (금)
산업/무역 14면

석간 내일신문

농식품부, 박근혜 대통령에 업무보고

농산물유통 '단계 축소' 대신 '다양화'로 승부

생산·소비자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로 물가 관리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 일 오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고'는 박근혜정부 출범 원년에 맞춰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가 정리한 국경과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 + 창조경제 = 6차산업 = 농식품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통해 행복한 국민의 세대를 열겠다"는 농정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부정책은 가치가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있다. 농정정책의 목표표 '국민행복'을 명확히 내세워 농정의 차원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 정책 △농기소독 안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만들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유

복지는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오는 4월에 열리는 '농어민인 삶의질향상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삶의질향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위원으로서 부처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농축산물 안정적 공급 = 농산물유통구조는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유통구조 축소'라는 확고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농업을 통한 유통은 현재 12%에서 2016년 20%로, 작가제 비중은 4%에서 10%로, 도매시장 비중은 5%에서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대형마트 유통비중도 3%에서 30%로 소폭 조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낮은 관세로 외국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단거작 물가관리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가격 대 인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가격안정대 실행' 등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체코로부터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종합정보망을 구축(9월)하는 등 관계 부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개선 정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부처간 이견 해소 안 돼 논란도 예상 = 농식품부의 업무계획 중 관계 부처와의 이견이 있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농기소독정책 정 책에 포함된 쌀고장품도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것 공인체 및 대형급식업체는 제외했다. 8면권 기사 yujung@naeil.com

만원씩 지급하면 고정직불금을 올해 80만원으로 올리고 2015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는 '2017년 10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농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면적도 작고 퇴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예작물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산지를 활용한 축산계획도 마찬가지다. 중앙기적으로 축사를 단지화해 분뇨 공동처리,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시장·군수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기로 해 효과있는 실천이 뒤따를지 미지수다.

농안개해보험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민간보험사와 정부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지급액이 보험납부액의 180%가 넘을 때 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150%로 낮춰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도 쌀, 축산은 제외하고 정곡물에 한정했다. 정곡물도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것 공인체 및 대형급식업체는 제외했다.

2013년 03월 22일 (금)
산업/무역 14면



이동필(오른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포인삼블랙주' 산업현장을 방문. 1·2차 산업을 연계해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남북상생협
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인수
위의 국정과제에 이어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자

경인권 기자 yalung@naeil.com

석간 내일신문 사라진 농업공약 수두룩, 농심 멍들어 대통령직속 농특위·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농가경영안정직불 폐기

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
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
거 기간 동안 내놓았던 농업정책이
대거 빠졌다. 농식품부는 공약이 아
닌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기초로 업무
보고 내용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
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
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식품·농림수
산업·농신어촌 관련 정책을 총괄·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농식품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성한다고 밝힌 '국민
공감 농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도 있지만 '농정
위'는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고 기능도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입장이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교육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 이어 업무보고에
시 빠졌다.
농어촌교육문제는 농업을 담당하
는 부처가 아닌 교육부가 주관하는데
다 사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게 현
실여서 역대 정부도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한 문제다.
특발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부인 박근혜 후
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대를 저버린
모양이 됐다.
농어촌주민소득증대 공약 중 가장
앞에 배치한 '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
액해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30
%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흐지부지됐다.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
경영안정직불제로 개선해 농가소득
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문화일보

2013년 03월 22일 (금)
정치 08면

'1사1촌' 우수기업 금융지원 등 혜택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 정부는 1사1촌운동 등 농촌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 정책금융 우대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해 6월까지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산물시장 개방 시대에 도시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서로 윈윈하며 위기를 극복하기는 취지의 1사1촌농정이 농촌현장에서 창조경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산업지원 특별법' '귀농·귀촌지원법'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다.

창조경제 모델로서 주목 농촌 생산·관광 융복합화

보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융·복합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체험·휴양마을을 지난해보다 100곳 늘린 89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1사1촌운동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를 뽑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험마을·관광농원 등의 시설,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농촌 인성학교 50곳도 지정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 산업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접목해 IT기반 안전농장, 유기농 디지털 마켓, 농축산물 생산·유통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식품 과학기술을 2017년까지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소비자,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도 5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농업부문 대기업 참여와 물가 등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방향이 필요한 농정 과제 등이 논의된다.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신지에서 소비자까지 협동조합 체계를 통해 출하하는 '진속 출하조직' 800곳을 2016년까지 육성키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농림회사법인 등 비농업 농업법인도 올해부터 정부의 물류지원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 유통계열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왕수 기자 yspark@

2013년 03월 22일 (금)
경제 15면

헤럴드 경제 석간
herald.com

농가소득 보전...쌀 목표값 8년만에 인상 추진

농식품부 첫 업무보고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 산업 분야의 일자리도 5단계 창출 계획이다. 이등쌀 농림수산물 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현 17만

38원(80kg 기준)에서 17만4083원으로 2.4%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추곡수 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쌀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변동이 없었다. 현재 정부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락분의 85%를 변동직 불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변경을 담은 관련법 개정

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귀농인·후계농 창업을 지원하고 6차 산업(농업을 관광·유통·가공 등과 결합)을 활성화하며 농촌 공동경영체 지원 및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총 5만개의 신규 고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체험마을 사무장, 숲가꾸기, 산불 감시요원 등 녹색 일자리사업 확대도 병행한다.

서경원 기자/gjl@

이투데이 석간

2013년 03월 22일 (금)
종합 004면

쌀 고정직불 70만원→80만원

밭 직불대상 품목 19개→26개

■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정부가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내실 강화, 국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산업 창조경제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지난해 5%에서 2017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6월 중으로 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율을 2017년까지 17.2%까지 끌어올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와 올해 친환경 축산단지 5개소를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

험 대상 품목을 현재 51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하고, 피해조사 기간을 7-8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 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영세·고령농가에는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과 함께 경양양 지방, 농시연금을 활용해 은퇴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쳤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설치해 운영하고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한다. 또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화해 정책 사업에 참여시켜 제도권 내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농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매뉴얼화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4월초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리실 및 관련기관과 4월 중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1일 열린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cm@

2013년 03월 22일 (금)
정 치 08면

아시아경제 **▷** 석간

News-Eye

‘창조’ 농업, 농산물 유통구조 바꾼다

농식품부, 가공·관광과 결합 ‘6차 산업화’ 추진 … 도매 물류센터 건립·직거래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농식품산업에도 적용된다. 이농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대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고 내용을 보고했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경제 정책 기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세 정부 로드맵에도 첫째 국정목표로 올라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2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 생산(1차)을 유통·가공(2차), 체험·관광(3차)과 결합해 6차 산업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허농공단지 17곳을 올해 22곳으로 확대하고, 향토산업 지원과 및 농공상 융합·가공·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6

월에는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다. 이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이어 12월까지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6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20일 임명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도 김포의 김포인삼생맥주 생산·판매 현장을 찾았다. 인삼과 쌀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고, 체험산업으로 연계시킨 현상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을 위한 다른 과제로 농식품 산업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을 접목,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연구·개발(R&D) 효율화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지난해 기준 75%

에서 2017년까지 82%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농식품 대

아울러 60번째 국정과제인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헥타르(ha)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생활 인프라와 읍·면 중심의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펀드’ 만들어 고령자에 대한 농지연금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불량식품을 양이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중 총리실, 관련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에 공동 대응하는 매뉴얼도 작성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9월까지 ‘식품출발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세종=이윤재 기자 oet-nur@

부산일보

2013년 03월 22일 (금)
종합 02면

“농민 5% 더 받고, 소비자 10% 싸게”

■ 농식품부, 올해 업무 보고

정부가 올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 농민은 5% 이상 값을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돈을 덜 내는 유통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직거래 비중을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다음 달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 가격 급등락이 심한 상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가격안정대를 설정, 가격이 그 안에 있으면 시장

가능에 따라 수급이 이뤄지게 하고, 가격대를 벗어나면 위기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개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등 분야별 대표가 참여(20명 이내)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다음 달 중 구성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는 채소류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연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직거래 장터와 직매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자체 협동평가에선 직거래 실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4월부터는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100개)과 대규모 직거래 장터(1→10개)도 계속 문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도 건립하는데, 영남권은 밀양에 1만 2천222㎡ 규모 물류센터를 내년엔 준공한다. 이렇게 되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비중은 현재 12%, 4%에서 2016년 20%, 10%로 늘어나고 도매시장 유통비중은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까지 늘리고 부적합 판정률은 1.5%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재 ha당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100만 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opea@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동필(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농산물 직매장 5~10배 늘린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정부가 전국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5~10배 늘린다. 농산물 유통 비용을 줄여 농업인은 농산물값의 5%를 더 받고 소비자는 10%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물축산식품 산업은 생명산업이면서 국가 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면서 "(종자산업은) 블루오션인데도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 종자산업의 출구를 찾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2017년까지 농산물

2017년까지 20→100곳
대규모 장터 1→10곳으로
유통비용 줄여 값인하 유도
새달 aT에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은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비중은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도매시장 비중은 53%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다음 달 구성된다. 위원회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관광(3차) 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5만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가

공센터를 설치, 농민의 식품가공 분야 참여를 유도한다. 또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성학교 지정 등이 추진된다.

온실 원격제어, 농산물 품질·이력관리 등 '정보기술(IT) 융합 농업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된다.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되며, R&D 투자 비중은 농식품 분야 예산의 10%까지 확대된다.

농촌 복지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새로 운영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주택도 조성한다.

올해 쌀 직불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는 ha당 100만원까지 올린다. 쌀 직불금 대상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늘린다. 지난 8년간 변동이 없었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종전 17만 38원(80kg 기준)에서 17만 4083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국일보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A06면 종합

朴 “농수축식품산업이 미래산업의 중심”

| 농식품부 업무보고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수축산식품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고도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농수축산식품산업이 첨단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부터 고쳐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농수축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 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의 모토인 국민행복을 이루는데 있

어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으로 ▲농수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복지확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깊고 복잡한 유통구조인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린다든가 유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마다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원을 강조하면

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조정신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동필(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중앙일보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006면 종합

농림부 업무보고 “직매장 100곳으로 확대”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유통구조개혁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산물 직매장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화하는 등 소규모의 생산자 단체를 대규모화·법인화·계열화할

계획이다. 배추처럼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주의-경계-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매뉴얼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처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규모화하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머니투데이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004면 종합

“채소값 안정” 정부가 등락범위 정한다

정부가 배추나 무 등 채소의 가격 안정대를 정한 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조절 등 단계적 개입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때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가동·관광 등을 융합한 농업의 6차 사업화가 활성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농산물 생산자·소비자·유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가 설치된다.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가 설정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가격이 올라 경계단계가 되면 비축물량 공급과 저율관세 증량, 심각 단계가 되면 해외물량 도입,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가격이 떨

어지면 반대조치가 취해진다. 가격 안정대 범위 등은 품목별로 일정 기간의 가격평균을 토대로 정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우선 운용한 뒤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계절적 요인 등도 고려해 가격 안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배추와 무 산지유통인을 품목조합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구조 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지에 농협 존속 출하조직을 만드는 한편 안성·밀양·장성·강원·제주 5대권역별 도매물류센터가 세워진다. 직거래 확대 차원에서 직거래장터·직매장인증제 도입, 직매장 신용카드 우대수수료(1.5%) 적용 등도 추진된다.

세종=박재범 기자 swallow@

東亞日報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A14면 종합

“유통단계 줄여 농산물 값 인하”

유통구조의 개혁으로 소비자가 농산물을 지금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게 하는 유통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안정권을 벗어나면 관세 인하나 소비 장려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기존 농업(1차 산업)을 제조·가공(2차), 관광(3차) 산업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지난해 5%에서 2017년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축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여기에 첨단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재동·장원재 기자 jarrett@donga.com

국민일보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004면 종합

농산물 유통 개혁... 직거래 비중 10%로 높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농민은 가격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덜 내게...”
 차 “농업은 생명·안보산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우리 농촌지 원정책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잘 살 아보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더 집중적 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동기부여 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농 립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세마을 은동 성공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조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 다고 김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수산축산식품 산 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 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 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축산식품 산업 발전 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 으로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 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농축산부는 보고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 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매장을 기존 20곳 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 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 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농협의 농산 물 유통 비중을 현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 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생 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 조절위원회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 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관광 (3차)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 업(이른바 6차산업)으로 만들기 위

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체험 휴양 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 성학교 지정 등도 추진된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안전한 농축 산물 공급을 위해 국무총리실 등과 상 설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 안전사고 공 통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식 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식품 종합 정보망과 위해식품 생산지 추적·차단 네트워킹도 9월 중 구축한다. 3년간 법 위반 건수가 3회를 넘으면 인증기 관 지정을 취소하는 ‘진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성규 유성열 기자 zhibago@kmb.co.kr

매일경제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A05면 정치

朴 “발전의지 있는 농촌부터 집중지원”

농림부 업무보고

“발전 의지와 역량이 있는 농촌 지역에 먼저 집중 지원하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소득 증대,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새 정부 농경 정책의 3대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촌을 관광과 접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발전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먼저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복지 전달 체계도 농촌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농촌은 주거 형태, 환경 등이 완전히 달라서 도시에서 성공한 복지 모델이 쉽게 안착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농촌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발언 후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업인은 기존보다 5% 이상 많은 수익을 얻고 소비자물가를 10% 이상 낮추는 이른바 ‘+5-10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1차 산업인 농업을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과 결합한 6차 산업으로 만드는 계획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철·정석우 기자

한국경제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A02면 종합

“넙뛰는 물가 잡아라” 농산물 상·하한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정부가 넙뛰기를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상·하한가 관리에 나선다.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 개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가격 변화가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안정대(평균 가격 범위)를 정한 뒤 이를 웃돌거나 밑돌 때 시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격의 급등락 수준에 따라 주외-경계-심각 순으로 시장 개입 강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최근 몇 년간 평

“농축산업에 IT기술 접목 고부가 산업으로 키워야”

朴대통령 강조

군 가격을 20% 웃돌면(주의) 산지 상황을 점검하고, 더 오르면(경계)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풀기 시작한다. 그래도 가격이 안 잡히면(심각) 장바구니 물가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도록 해외 물량을 도입하는 식이다.

이르면 오는 5월 최근 가격 등락이 심했던 배추와 양파에 처음 적용된다. 가격 안정대 안에 있을 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수급

안정팀장은 “가격대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메뉴얼’로 정해 놓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가격 안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 참여하는 수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수급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안정대를 정하는 정책은 2011년 추진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다. 기준가격 마련 등 세부사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적지 않은데다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반적인 물가 안정대책 차원에서 오는 5월 세부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밀, 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까지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R&D 투자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5%(2012년)에서 10%(2017년)까지 늘려 농업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유미/도병욱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서울경제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A06면 종합

유통구조 개선해 농산물값 10% 내린다

배추 등 채소 가격안정대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정보 발령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진부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1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가격 변동성이 큰 일부 채소의 경우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 가격이 급등하면 '주의-경계-심각'의 순서로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바근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구호화·계열화를 추진해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비용을 줄이는 유통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4%인 직거래 비중은 2016년까지 10%로 늘리고 농협유통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수입 사정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일부 농

●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 집중	- 품질 관리 등에 IT융합비즈니스모델 개발 - 농업인 역량강화 R&D 포드업 추진 - 농업 5차산업화 추진
농가 소득 경영·안전망 구축	- 농업재해보험 확충·희생 프로그램 기동 -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등 은퇴이전 조성
복지 농촌 만들기	- 마을단위 생활 인프라 및 농촌형 교통체계 구축 - 농림인 안전재해보상법 제정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확대 - 생산자 5% 더 받고, 소비자 10% 덜 내는 구조 구축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대 설정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 식위처 등과 협력해 식품종합정보망 구축

에 돌기로 했다.

사료·농기계·유류 자원을 통해 농가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가재 공급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업을 종합산업으로

박 대통령 지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정책의 3대 축으로 ▲ 농축산인 소득 증대 ▲ 농촌 복지 확대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1차 산업 중심인 농업을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종합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재해보험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법기자 squik@sed.co.kr

산업을 접목해 일명 6차산업화 하는 것도 핵심 추진 과제로 꼽힌다.

농가소득을 늘리고 경영 안전망도 튼튼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은 장 가격으로 1만㎡당 100만원으로 높여 잡고 밭직불금 대상 품목 또한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최대 열흘에 이르던 피해 조사기간을 3~5일로 줄여 피해해 농업인의 재기를 빠른 시일 내

산물의 경우 가격 안정대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적정 가격을 4,000원 선으로 정해놓은 뒤 이보다 가격이 급등하면 매뉴얼에 정해진대로 공급 조절에 나서는 식이다.

새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도 농식품산업에 적용된다. 현재 5%선에 불과한 농식품에 산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농촌사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차 산업인 농업에 유통·가공(2차산업), 관광(3차

세계일보

2013년 03월 23일 토요일 066면 종합

'5% 이상 더 받고 10% 이상 덜 내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생산지> <소비자>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농민은 농축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농식품 산업에 창조 경제가 도입돼 양·구·개(양돈·구급·개미) 예산이 늘고, 생산·가공·유통·판매에 걸친 '농민의 4차 산업화'가 추진된다. 쌀 직불금은

권역별 물류센터 설립 비용절감

직매장 대폭 늘려 차거래 활성화

'수급조정위 설치 가격 엄격관리

쌀 직불금 ha당 100만원까지 인상

하대농령 '농축산 미래산업 육성'을

연차적으로 ha당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농식품수신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수신 산업이 첨단산업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인사부터 고쳐야 한다"며 "청외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

농식품수신식품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유통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지에서 중심의 유통구조 강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가공·판매 등과 결합한 6차 산업화 온실 필라재어, 홍차·이력관리 등 미래농업(4차) 융합비즈니스 모델 개발
농기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재해보험 확충, 최상 프로그램 등으로 경영불안 해소 다양한 농민소득원 창출로 중소농을 전문경영체로 육성
농지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생활 인프라공동체형용, 공동크리시시(의) 확충 고령자 농지연금 확대, 다문화 가족 농촌정착 지원
인산인 농축산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위생식품 생산자 추적조사·자진 네트워크 구축

임으로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농축산업은 못하지 않는 저출산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재해보험의 심층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대상과 지역 등 보상 범위의 확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권역별 물류센터 설립에 농식품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6월 인상에 5만8000원 규모의 물류센터비를 완공한다. 1년에 1만, 2015년에 1만5천 개



이동철 농식품수신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농축산수신 유통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 기자 촬영

간 불균형→경제(상당한 불균형)→식량(안정)이지만(불균형) 2단계로 나눠 정부가 수입·비축물량과 관세를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대신 다양한 생산자·소비자·유통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실무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을 낸다.

농식품부는 김태호 인산 농식품가격 R&D 투자 비중은 2011년 10%까지 늘린다는 '정기매매'와 상대를 정해 거래하는 '수의매매' 확대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신기술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이밖에 쌀 직불금을 작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판매(3차)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만 평가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온실 원격제어, 농산물 품질·이력 관리 등 IT(정보기술) 융합 농업 비즈니스모델도 개발

한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예산의 5%였던 R&D 투자 비중은 2011년 10%까지 늘린다는 '정기매매'와 상대를 정해 거래하는 '수의매매' 확대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식품의 공급거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은 국민행복 시대 필수 과제”

박 대통령 농식품부 업무보고 가격안정대·수급조절위 등 5대 실천계획 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농수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수축산식품 산업 발전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이를 벗어나면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직거래 지원센터와 직매장·대규모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농민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경남 밀양·강원·전남 장성·제주 등 전국 5곳에 도매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대변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직거래 유통 비중을 현재 4%에서 오는 2016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다만, 도매시

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배추 등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 위기 단계별 조치를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체인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가 저축할당관세(TRQ)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첫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가격안정대 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까지 끌어올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도 12개에서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리실 등 관련 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성, 식품안전 사고에 공동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식품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나라에 맞는 미래산업의 육성 과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으로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소득을 높이려면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 특산물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모델을 잘 연구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정인홍 기자

농민신문
2013년 3월 25일

“농축산업,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박 대통령,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강조
농업·농촌 실정에 맞는 연구·지원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농축산 식품산업 발전이 국민행복의 필수이고,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농축산식품산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관련기사 3·11면

박 대통령은 “농수축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고 규정한 뒤, “새정부 국정운영의 모토인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축산업을 첨단산업과 거리가 먼 산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치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울 것”이라며 “창의의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틀)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새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으로 강조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농축산인 소득 증대를 위해 선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증대 모델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농촌 복지 확대 방안으로는 창의적인, 효율적인 농촌형 복지체계 구축과 재해보험의 확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들딸에게 농축산업을 물려 주겠다는 부모를 찾기 힘들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를 찾아 도시로 나가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보육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고, 문화생활은 더욱 어려운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촌의 실정에 맞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문화생활 개선에 힘을 쏟아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재해보험 협심효성 제고 ▲재해보험 보장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범위 확대 ▲정밀한 수급관측 ▲필요한 경우 사전비축 등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첨단기술 융합, 유통구조 개선, 종자산업 육성 등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에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린다든가, 유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의 기본축으로 하고 있는데, 농축산분야에서도 이런 기조를 잘 받아들여 창의적이고 생산

적인 농축산환경을 만들었던 것이다”며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을 활용해 농축산업의 창의력을 높이면 부가가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식품의약품 안전은 한 부처가 해결할 수가 없고, 전 부처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발생 이전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탁에 오를 때까지의 단계를 꼭 돌아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허점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수입식품과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라면서 “수입 농축산물도 생산국까지 가서 재배실태나 유통상황을 살펴야 하고, 학교 앞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지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우권 기자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 계획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 • 조시로 증산대책 마련 • 무허가 축사 관련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 산지축산모델개발 태스크포스(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하위 법령 개정 • 조시로 재배면적 확대(35만ha) • 산지축산모델개발 연구 용역 • 친환경축산단지 부지 선정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합사로 부가세 연세율 재연장 • 조시로 재배면적 확대(37만ha)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산지축산모델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및 검증



친환경축산 시범단지 5곳 조성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로 본 주요 축산 정책

축분 자원화 시설 확충...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사료원료 할당관세 운용 등 가격 인상 최소화
도축~유통 전담 협동조합형 패커 집중 육성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도 적극 육성된다. 새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새정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로 처리해 경종 농가에게 공급하고 에너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지난해 88개소에서 올해 101개소로 확대해 2017년까지 15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화시설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9개소로, 액비유통센터는 지난해 162개에서 올해 177개소, 2017년에는 222개소까지 각각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9.1%에 그치고 있는 공동자원화율을 2013년 11.9%, 2017년 17.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4월에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세운다.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와 시설현대화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월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법령(건축법·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은 9월까지 개정한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동물복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은 지난해 3880억원에서 올해 432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축산농가 경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료 직거래구매자금 및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사료업체에는 구입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 및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던 축산단지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우선 올해 5개소의 균유지와 간척지 등에 개소당 10ha 이상의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유림을 활용한 산지 축산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불합리한

축산물 유통구조는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지역축협은 수집·공급하며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 수준인 안심축산 한우 시장점유율을 올해 18.6%, 2016년에는 37.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점도축장도 지난해 11개소에서 2015년에는 20개소까지 늘려 위생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유도하고,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점 식당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287개소인 농협계통 정육점을 올해 370개소, 2017년 1000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육점식당도 2012년 289개소에서, 올해 300개소, 2017년에는 6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가축질병 대응=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매주 수요일을 축산시설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담당관,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통해 소독·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12월에는 돼지 이력제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형기 기자

농민신문
2013년 3월 25일

쌀 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으로

(2017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쌀고정직불금이 1ha당 평균 80만원에서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직불제는 올해 26개 품목에서 2015년까지 시설재배를 제외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피대와 풍자대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확기 과수와 가축의 피해,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가소득 확대 지원=농식품부는 먼저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확충과 경영희생프로그램 강화로 경영불안을 없애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를 활용한 경영혁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농에는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관공·가공과 연계한 다양한 농의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득증대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세 고령농에는 연금·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경영이양 직불, 농지연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는 직불제 강화와 재해보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7년까지 1ha당 1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발직불제는 대상품목을 2015년까지 시설재배를 제외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며 지원목재한도 해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수준의 품목별 소득을 정부가 정책보험 형식으로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양파·배추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상업종을 실시해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영안정망 확충=빈발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특정위험만 보정받는 5개 과수품목에 대해 종합위험방식으로 전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발직불제 대상품목 확대 농자재유통센터, 2015년까지 3개 권역 건립 추진 맞춤형 복지정책 제시... '농산물 수급조절위' 구성

환하기로 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를 산정할 때 과수·가축 피해는 물론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포함되도록 농업재해보험법을 6월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부담이 큰 농자재와 사료·농기계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4월까지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자재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2015년까지 중부·호남·영남 등 3개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료값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농가 직거래 구매자금 및 특별사로 구매자금 지원과 더불어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신성장동력 창출=농식품부는 새정부 국정 핵심인 '창조경제' 개념을 농

식품산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첨단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 및 유통·가공·관공 등과의 결합을 통해 6차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농식품분야 예산 대비 5%(2012년)에서 2017년 10%까지 높여 농산물 생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과 IT융합 사업모델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농업인의 식품가공산업 분야 참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공동가공센터를 확대 설치하고(12개소→16개소), 소규모 식품제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공상 융합형기업 300개소에 R&D 및 교육자금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와 농촌기업사회공헌인증제, 도농교류의 날(7월7일) 운영 등 농촌관광 활성화대책이 시행되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

진한다.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농촌정책으로는 고령화와 주민 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화 4개소 시범조성, 마을공동급식시설(신규 240개소) 구축, 경로당 기사도우미 지원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한다. 농촌형 보육시설(신규 38개소)과 농촌공원(11개소) 등 새로운 공공복지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예약형버스 운행 같은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작업중의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색깔 있는 마을 3000개 육성'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 육성' 등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안정적 공급=농산물 수급조절방식이 완전히 새로 쓴다. 일시적인 수급불안에 수입 일본도로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각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수급문제가 발생하면 합의에 따라 수급조절대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품목별 가격이 안정대에서 움직일 때는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격이 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요·경제·심각'의 위기 단계별로 사전에 마련한 대응 매뉴얼(5월 중 확정)에 맞춰 수입 등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협도매물류센터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생산자·소비자 주도형 직매장 100개를 설치하며 대규모 직거래장터 10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곡물자급률을 2011년 22.6%에서 2015년 30%로, 곡물자급률은 2011년 24.6%에서 2015년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경희 기자 klee@nongmin.com

“유통 개선...생산자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덜 내게”

이동필 장관 업무보고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계열화 구축, 산지 규모화로 판매 물량 확보 주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산업을 창조경제 접목과 유통구조개선, 농가소득안정, 복지증진, 안전먹거리공급, 청의·혁신·현장·신뢰가능 등 6개항의 세부추진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도 유통단체를 축소하고 소비자 참여형 새로운 유행의 지거래 추진, 도매시장 유통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투자, 농식품 예산 10%로

▲농식품산업을 창조경제 접목=농업을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판매·관광 등 2·3차 산업과 연계 지원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에 주력한다. 또 첨단 과학농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농식품 예산 대비 10%로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종자 수출과 생명산업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과 시설건립 등 창업 초기자금을 1800명을 대상으로 총 1012억원을 지원한다. 등. 동시에 전문농업인에게 농업이나 농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습조직 200개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해 가축연보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하고 축산업 현실을 감안, 무허가축사 개선과 시설현대화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식품기업-지자체-연구소 등의 융복합을 통해 식품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대 권역 도매물류센터 건립

▲소비자·생산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구축해 유통단체를 축소하고 생산자는 5%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든다. 특히 농산물은 산지 규모화·전문화로 안정적 판매물량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와 농협 간 협력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 접목...6차 산업 활성화 고정직불금 연차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계획

전속출하조직을 2012~2016년까지 600개소를 육성하고 물류센터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소비자는 계통과 대의 판매채널 확대로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고 지역조합의 하나마마트 2070여 개소 체인화로 계통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은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괄시스템을 확립하고 2017년까지 농협계통 정육점 1000개소와 정육점형 식당 600개소로 확대해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유도한다. 특히 소비자 참여와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거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매장과 장터는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해 최대한 확대하고 꾸러미는 싱싱·고령층·맞벌이가구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방식에서 거래안정성·유통효율성을 고려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정가·수익매매 확대와 최소소출단위 설정,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정직불금 ha당 80만원으로

▲농가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고정직불금 지불단가를 ha당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발작불제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등 7개를 추가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한편 자목적제를 폐지하고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지급대상품목은 2014년부터 눈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담보하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강화와 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원도 현실화 한다. 이를 위해 보험대상품목 확대와 조사기간 단축, 손해평가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AI·구제역 등 예방을 위한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정국 지위 회복과 AI정정국 지위유지

에 총력한다. 4월까지 선진국 수준의 질병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AI·구제역 재발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건설=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부여건 실현을 위해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를 추진한다. 주거·교통은 경관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치중한다.

지역주민·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직업성 질환관리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령농·다문화가족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활동가 1000명 육성과 광역단위 활성화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한다.

식량·조사로 생산기반 확대

▲안전 먹거리 안정적 공급=국내 식량과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도 자급률 제고에 주력한다. 주어진 자

원을 최대한 활용,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로 생산을 확대해 자급률을 2011년 22.6%에서 2015년 30%까지 끌어올린다.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 66만 ha의 경작과 확대를 최대한 유도하고 위기시 대응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비축대상도 현행 쌀에서 주요양곡인 밀·콩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에서 안정적 곡물 조달을 위해 해외농업생산 확대하는 한편 곡물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곡물도입 역량을 확충해 곡물 자급률을 제고한다.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GAP·HACCP 등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추진하고 인증제와 표시제 관리 강화로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국민공감 농정추진위 구성

▲청의·혁신·현장·신뢰 농정추진=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시·군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을 반영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침 할 수 있는 신규통계개발과 농식품 통계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V

국회 상임위 보고(4.8)



제315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면 현안 및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2013. 4. 8.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I . 당면 현안	399
1.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	401
2.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개선방안	405
3.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409
4. 소·돼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411
5.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414
6.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415
II .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419
1.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421
2. 국정과제 실천계획	422
(1) 농가 소득·경영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422
(2) 농촌 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424
(3)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426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428
(5)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430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 추진	432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현황	433

I. 당면 현안

1.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
2.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개선방안
3.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4. 소·돼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5.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6.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1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

가 제도 현황

□ 쌀소득보전직불제(목표가격)는 쌀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규범을 고려한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으로 도입('05)

* '04년 쌀협상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DDA협상에서 국내보조 감축에 대응하여 제도유지 한계에 봉착('04년 쌀 711천톤 수매에 AMS 1조 3,598억원 사용)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수확기 산지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05~'0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 수매제·논직불제 소득 효과를 반영하여 170,083원/80kg으로 결정

* 170,083원/80kg = '01~'03년 평균 산지쌀값 157,981원 + '01~'03년 수매 소득효과 3,022원 + '03년 논직불제 소득효과 9,080원

○ '08~'12년산 쌀 목표가격은 최초 목표가격(170,083원/80kg)으로 고정하도록 '쌀소득보전법' 개정('08.3)

* 제도설계 당시 규정은 3년마다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07년 산출된 목표가격 변경안('08~'10년산)은 161,265원/80kg이었음

□ 새로운 목표가격('13~'17년산) 산출은 수확기 가격변동을 반영하도록 '쌀소득보전법(제10조)'에 명시되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음

○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격 변경안은 174,083원/80kg임

* 174,083원/80kg = 170,083원 × ('08~'12년 쌀값 156,992원)/('03~'07년 쌀값 153,385원)

나 목표가격 관련 고려요인

< 논의 동향 >

◇ 물가·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대폭 상향하도록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4건** 발의

* ('02~'06년 평균) 쌀 생산비 580만원/ha, 쌀 소득 620만원/ha → ('07~'11년 평균) 621(7.1% ↑), 533(14% ↓)

** 주요 내용 : '05~'12년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217,719원/80kg), '08~'12년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200,218원/80kg), 최근 10년간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 반영(208,149원/80kg) 등

1] 목표가격은 쌀협상과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양정제도 개편(수매제 폐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가격변동 안전장치

○ 목표가격은 급격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생산비·물가 반영은 당초 제도설계 취지와 불일치

○ 이에 따라, 목표가격(변동직불금) 인상 보다는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을 통해 쌀농가 소득 감소분의 일부 보전 추진

- 고정직불금을 '13년 80만원/ha으로 인상, 향후 100만원까지 인상 예정

* 70만원/ha에서 100만원까지 인상시 농가당 소득이 327천원 증가하는 효과

2] 목표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쌀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감안 필요

○ 목표가격 인상시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변동직불금은 오히려 증가 전망

* 목표가격 1만원 인상시 생산증가로 산지쌀값 5천원 하락 전망(KREI)

* 과거 사례를 보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농가소득이 높음(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금액은 쌀값이 가장 높아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은 '12년산은 185,288원/80kg, 쌀값이 가장 낮아 변동직불금을 받았던 '10년산은 165,305원/80kg)

* 목표가격 대비 보전비율 : ('05) 97.3% → ('08) 102.2 → ('10) 97.2 → ('12) 108.9

- '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개방 초기 발생 가능한 쌀값 하락을 변동직불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목표가격 설정 필요

- 쌀 관세화에 대비한 국내대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큰 사안

③ AMS 한도 등 제약요인과 함께, 타 품목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 목표가격 4천원(2.4%) 인상시 1,6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 되고, 목표가격 인상 효과는 대농에게 집중

* 쌀 농가의 83%를 차지하는 1.5ha 미만 재배농가는 수취금액이 적음

- 변동직불금은 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금(AMS)이며, 한도액이 1조 49백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DDA협상에서 대폭 축소* 논의 중

* DDA협상에서 AMS한도는 1조 430억원(개도국)~8,195억원(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전망

- 쌀 이외 품목의 AMS 사용(배추 수매비축, 피해보전직불 등) 증가도 고려할 필요(쌀에 사용할 AMS가 점차 감소 불가피)

* '13년 국내산 수매비축(콩, 배추, 마늘, 고추) 예산 : 1,423억원

다 향후 조치계획

- 인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 최소화

- 국회 제출전 농업인단체와 목표가격 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 논의사항 등을 감안, 정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4월 임시 국회 기간 중 제출 여부 결정

* 농가 벌써 파종시기,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입장 정리 필요

붙임

목표가격 수준별 변동직불금 소요액 추정

○ 조건 : ha당 고정직불금 80만원, 생산량 63가마, 변동직불금 지급면적 747천ha('12년)

(단위 : 백만원)

산지쌀값 (원/80kg)	목표가격(원/80kg)					
	174,083	180,000	190,000	200,000	210,000	217,719
135,000	965,792	1,202,483	1,602,502	2,002,520	2,402,539	2,711,313
138,231	836,546	1,073,237	1,473,256	1,873,274	2,273,293	2,582,067
140,000	765,783	1,002,474	1,402,493	1,802,511	2,202,530	2,511,304
145,000	565,774	802,465	1,202,483	1,602,502	2,002,520	2,311,295
150,000	365,765	602,456	1,002,474	1,402,493	1,802,511	2,111,285
155,000	165,755	402,446	802,465	1,202,483	1,602,502	1,911,276
160,000	-	202,437	602,456	1,002,474	1,402,493	1,711,267
165,000	-	2,428	402,446	802,465	1,202,483	1,511,258
166,308	-	-	350,124	750,142	1,150,161	1,458,935
170,000	-	-	202,437	602,456	1,002,474	1,311,248
173,779	-	-	51,270	451,289	851,307	1,160,081
175,000	-	-	2,428	402,446	802,465	1,111,239
180,000	-	-	-	202,437	602,456	911,230

* 138,231원/80kg : '10년산 수확기 산지쌀값('05년 목표가격제 도입 이후 최저치)

* 166,308원/80kg : '11년산 수확기 산지쌀값

* 173,779원/80kg : '12년산 수확기 산지쌀값(사상 최고치)

⇒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산지쌀값이 같을 때, 목표가격이 1만원 인상되면 변동직불금은 4,000억원 증가

⇒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이 같을 때, 수확기 산지쌀값이 1만원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은 4,000억원 증가

2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개선방안

가 추진 현황

- 최근 농업재해의 빈도·규모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 등 경영 위험 증가에 따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 증가
 - 지난 12년간 1조 4,551억원의 보험금 지급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보장범위·공정성 등에서 한계 노출
 - * 국정감사('12.9월), 상임위(10월) 등에서 재해보험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재해 빈발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사 경영 악화, 국가 재보험기금 고갈 등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위협
 - * '12년 보험금은 5,603억원(농작물 4,910, 가축 693)으로 '11년(1,806) 대비 210% 증가
- 한정된 정부재원 내에서 재해피해 농가의 실익제고와 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그간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 활동('12.8~), 농가 현장간담회 (9개 시·도, '12.11), 공청회('12.12)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 *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보험개발원, '12.11~'13.3)
 - 농식품부 업무보고('13.3.22)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신속한 손해평가체계 구축, 전담기관 설립 등 제도개선 방안 보고
- 4월 중 '농업 재해보험 개선방안' 확정·발표 예정

나 주요 개편내용

< 개편 방향 >

- ◇ 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 등 농가 실익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도 구축
 - 보험이 정착될 때까지는 재해지원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1) 재해보험

-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 확대로 재해보험의 내실화 도모
 - 대상품목은 '17년까지 66개로, 전국사업은 54개로 확대
 - * ('12) 51개 품목(전국사업 30) → ('13) 56(41) → ('17) 66(54)
 -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과수 5개 품목도 '13년 배(시범)부터 '17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 영세·소규모 농가의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가입 최소기준* (품목별 일정면적 이상 제한) 완화 방안 강구
 - * (벼) 농가당 4,000㎡(농지별 1,000㎡), (과수) 1,000㎡, (콩) 4,500㎡ (고추) 1,500㎡ 이상 등
-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과학화로 손해평가 신속성·정확성 확보
 - 전문평가인력 400명 선발('13.4), 교육·훈련(5월) 및 6월부터 투입
 - * 전문손해평가인력 : ('13) 400명 → ('14) 600 → ('15) 800 → ('16) 1,000
 - 손해평가 기법의 과학화를 위해 피해도감 제작 및 스마트 카메라와 3D분석 등 측정기기 개발('13년 연구개발 착수)
- 자기부담비율 등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차등화 (예시 : 50% → 40~60%)하여 재정지출 형평성 제고
 - * 미국 재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38~67%로 차등 지원

□ **보험사업 관리의 체계화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보험사업자의 정기점검·보고(반기 1회, 가입실적 등) 의무화 및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일몰제 도입)
- '농업 재해보험 우수 사례집' 발간('13.5월) 등 **민관합동 홍보 강화**

□ **국가 책임 부담 확대로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13년은 손해율 180% 이상의 보험금을 국가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150% 이상 손해 발생시에는 **예산 지원**

* 재보험을 통한 국가 책임 확대방안은 재해분야사업 심층평가(~7월)를 거쳐 '14년 예산 반영

□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 **전담기관**(가칭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추진)

◆ 농업재해는 특성상(계절성·전문성) 민간시장만으로는 손해평가, 조사·연구 등 보험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공공성격의 운영주체 필요

* (가능) 재보험금 운용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율 산출 손해평가인력 양성 보험정책 연구, 교육 홍보 등

(2) 재해지원

□ **과도기 단계인 농업재해보험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재해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산정 기준에 가축·수확기 과수 등 포함, 정전 2차 피해지원 및 가구당 한도·품목별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4개부처 합동고시)' 개정 필요

붙임 2012년 농업재해보험 실적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13년 대상품목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콩, 옥수수, 마늘, 양파, 벼 등 40개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및 그 축사
보상재해	특정위험방식	주계약	태풍(강풍)·우박
		특약	동상해, 집중 호우, 나무보상
	종합위험방식	모든 자연재해(All Risks)	-
보장수준		최대 가입금액의 85%, 80%, 70% 보장	- 가축 : 시가의 80~95% - 축사 : 손해액의 100%
국고지원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13년 예산 (억원)		1,594	422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 초과 손해 정부지원	-
'12년 가입실적	대상품목수	35개	16개
	가입규모	74,983호, 108,373ha	128,805천두
	가입률*	48.5%	71.4%
	보험료 (위험보험료)	151,609백만원 (137,477백만원)	100,126백만원
	가입금액	25,397억원	36,429억원
'12년 지급실적	지급농가수	46,337호	16,430건
	지급보험금	490,978백만원	69,309백만원
	손해율	357.1%	69.3%
사업시행주체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움

* 농작물(48.5%) : 사과 84.9, 배 68.6, 단감 43.8, 뽕은감 37.8, 감귤 1.0

* 가 축(71.4%) : 돼지 85.2, 소 7.5, 닭 79.5, 말 5.0

3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부문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 대기업 진출
 -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인
 - (당초) 50% → ('04) 75 → ('09) 90 → ('12) 90(80억원 초과시 8억원 제외금액)
 - * 일본의 경우 '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에 대한 농지 임대제한 및 출자제한(1/10) 폐지, 임대차 상한기간 연장(20년 → 50)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농업참여 확대
 - 식품가공·제조, 농자재, 농산물 유통, R&D 및 농업·농촌 인프라 정비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
 - 다만, 농업생산분야는 농지 소유 및 임차 제한으로 인해 농업 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몇몇 대기업이 참여
 - * 동부팜화옹(토마토 유리온실, 동부), 예본농원(한약재 재배, KT&G), 굿가든(화훼종묘, 대성) 등 대부분 2010년대 전후 진출
- 최근 농식품 수출전문단지(화옹간척지, 15ha)를 둘러싸고, 토마토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 반대
 - '10~'12년까지 467억원[국고 87(기반시설), 자부담 380(생산시설)]을 투입, 생산농산물의 90% 수출 조건으로 토마토 시험재배 중
 - * 당초 사업자인 (주)세이프슈어는 '12.7월 (주)동부팜화옹으로 명칭 변경

- 토마토 생산자단체 등은 'SSM의 골목상권 침투'에 비유, 농업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동부제품 불매운동 등 반대
- 동부팜화용은 생산자단체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결국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사업 중단 선언(3.26)
 - 성명서 발표(2.4), 농민사랑 봉사단 발대식(2.22), 상생방안* 제시(3.19) 등
 - * 농민단체와의 공동생산, 사외이사 선임, 지분참여 허용, 토마토단체 참여, 연구·홍보활동 지원, 자체 생산량 조절, 시설농업 발전기금 출연 등
-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농업분야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 대두
 - (찬성) 민간투자 확대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수출농업 육성 등을 위해 대기업의 농업참여 필요
 - (반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여 일선 농업현장의 생존권 보호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후 상생방안 정립(상반기 중)
 - 다양한 채널(4월 중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공론화 추진
 - 기업-농가의 상생·보완을 위해 기업의 참여범위와 참여방법, 정부지원 등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기 정상화 노력
 -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인수자 물색 및 관리방안 마련 등

4 소·돼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1) 소·돼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가 가격동향 및 추진실적

□ (가격동향)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소·돼지 가격이 낮은 상황

- (소) 소비촉진(할인판매 등) 등으로 평년가격(548만원/마리)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13.4.4일 가격은 평년대비 13% 낮은 수준

* 큰수소가격 : ('11.12) 474만원/600kg → ('12.9) 557 → ('13.1) 514 → ('13.3) 465 → ('13.4.4) 477

* 사육마리수(전체/가임암소) : ('09) 264만마리/109 → ('10) 292/120 → ('11) 295/125 → ('12) 306/123

- (돼지) '11년 구제역 이후 생산기반 회복에 따른 사육마리수 및 생산성 증가(MSY 15.6 → 17)에 따라, '13.4.4일 가격은 평년(33만원/마리) 대비 18.2% 낮은 수준

* 돼지가격 : ('12.8) 35만원/110kg → ('12.10) 26 → ('12.12) 28 → ('13.3) 24 → ('13.4.4) 27

* 사육마리수(전체/모돈) : ('09) 959만마리/97 → ('10) 988/98 → ('11) 817/90 → ('12) 992/96

□ (추진실적) 가격회복을 위해 공급감축과 소비확대 등 추진

- 감축장려금 지원(처녀소 50만원/마리, 2産이하 30) 및 노산우(80개월령 이상) 농가 자율도태를 통해 암소 16.3만마리 감축('11.6~'13.3)

- 돼지 도매시장 출하물량 구매·비축('12.10~'13.2, 123천마리) 및 모돈·자돈 자율도태('12.9~12월, 83·106천마리)

- 농협매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 및 '12년도 군납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1,284톤)

나 향후 계획

◇ 어미가축 도태 등 공급량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 수요확대 중점 추진

□ (공급감축) 암소 3.7만마리 추가 감축^{*}(4~5월) 및 모든 10만마리 자율도태('13.3~8월), 출하체중 감축(115kg → 110) 등 추진

* 암소 총 감축마리수('11.6~'13.5) : 20만마리(장려금 10, 자율 10)

○ 어미가축 감축 이행여부 확인을 통한 공급감축 효과성 제고

* 소는 이력제 활용, 돼지는 관계기관(한돈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등) 점검체계 기동

□ (수요확대) 관계기관·민간기업 협조 등을 통해 국내산 소비 촉진

○ 대량 소비처(육가공업체, 100대기업, 단체급식 영양사 등)에 국내산 축산물 사용 확대(간담회, 장관서한 기 발송) 및 할인·시식행사 지속

○ 돼지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위해 정육점에서 수제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완화(식약처 협조)

□ (유통구조개선) 산지-소비지간 가격연동성 제고 및 관측기능 강화

○ 농협중앙회(안심축산)를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고,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2) 소10.9%/돼지4.7 → ('13) 18.6/8.6 → ('16) 37.1/25.0

* 정육점/정육식당 : ('12) 300/301 → ('13) 500/364 → ('16) 900/600

- 소비자단체 통한 소비지 유통실태(소매·음식점 판매가격 등) 조사·공표

○ 관측자료 발간주기 단축(3개월 → 1), 관측모형(KASMO) 개선 등 축산물 수급예측 기능 강화

(2) 사료가격 안정대책

□ (국제곡물 가격동향) 미국 가뭄 등으로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2.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7월) 299→(8월) 316→(10월) 295→('13.2) 278

○ 국제곡물가격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어 '13년 상반기 국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KREI)

* 사료가격(축종별 가중평균) : ('10) 468원/kg → ('11) 512 → ('12) 539 → ('13.2월) 538

□ (지원방안)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중

○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신규 지원('13 : 1,700억원) 및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연장('11말 → '14말)

-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 고려, 특별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검토(관계부처 협의중)

○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 확대 (22개)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12 : 600억원 → '13 : 950)

○ 조사료 공급 확대('12 : 재배면적 27만ha → '13 : 35), 축산물등급제 개선(돼지 체지방기준 하향 조정 등) 등 사료급여량 절감 추진

※ 다만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여부는 농가실익, 재정부담 등 종합검토 필요

* 고려요인 : ①농가참여 저조, 사료업계 부담금의 사료가격 전가 우려 등으로 실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②과거 5개년('07~'11) 가격기준으로 기금보전액 추산결과, 5년간 최대 2.5조원(정부부담 1조원) 수준

5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가 발생 현황

- (중국) 매년 기축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초로 H7N9형 바이러스에 의해 인체감염 및 사망사고 발생(3.31~4.5일, 14명감염·6명 사망)
 - * 전 세계적으로 가금류에서 발생('13.3월기준, 중국, 인도네시아 등 17개국)되고 있으며, 사람은 H5N1형에 감염되어 최근('03~'13.3월)까지 15개국에서 371명 사망
- (국내) '11.5월 마지막 발생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11.9.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회복
 - 다만, 발생국으로부터 철새 유입(3~5월) 및 여행객 증가, 저병원성 AI 검출 증가('11 : 17건 → '12 : 67) 등 고려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나 조치 사항

- 중국노선 검역탐지견 투입(18편 → 24) 및 휴대품 검사 강화, 여행객 교육·홍보(농장방문 자체, 가축접촉 금지 등) 등 특별검역 실시
 -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14일간 특별관리(전화·임상예찰)
- 상시 소독 및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
 - 축산시설 일제소독(매주 수요일), 전화예찰(월2회이상)과 함께, 야생 조류에 대한 포획검사(2천수) 및 분변검사('12 : 4.5천건 → '13 : 7) 강화
 - AI 가상방역훈련을 실시(반기1회 이상)하고, 위험시기('12.10~'13.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 가동
 - 농식품부 현장점검(4.5일 장관 등) 및 중앙기동점검반 확대 운영(8반·16명 → 24반·48명) 등 방역실태 집중 점검

6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1) 한·중 FTA

가 추진 현황

□ (경과) 그간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개시 선언('12.5.2) 후 4차례** 협상 진행

* ('12.24) 공청회 → (4.13) FTA 추진위원회 → (4.16) 대외경제장관회의 → (4.23) 국회보고

** 1차('12.5, 북경), 2차('12.7, 제주), 3차('12.8, 위해), 4차('12.10, 경주)

○ 5차 협상은 '13.4월말 중국에서 개최하여 분야별 협상의 틀 논의 예정

□ (협상구조) 농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

○ 1단계는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등에 관한 협상의 틀(Modality) 논의

* 상품을 일반품목군(10년내철폐), 민감품목군(10년초과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부분철폐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민감성 보호장치 마련

○ 2단계는 합의된 틀(Modality)을 기초로 각 분야별 전면협상 진행

○ 현재 1단계 협상중이며, 상품개방수준을 포함한 모델리티 타결 방식에 있어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협상진전이 더딘 상황

- 중국측은 제조업이 민감분야라는 이유로 상품 자유화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WTO FTA요건에 부합*할 것을 주장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고(90%이상) 10년 이내 관세철폐 필요

나 대응 방향

◇ 농업에 대한 한·중 FTA 파급력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

□ (협상)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체계적 대응

○ (품목) 중국의 농산물 생산여건·전망 등을 감안,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

- 농산물이 양허제외 등 협상에서 예외적으로 취급 받을 수 있는 비중(초민감품목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SPS) 지역화* 등 동식물검역(SPS)은 WTO 규정수준으로 대응

* 지역화 : WTO 협정문에 명시된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

□ (공감대 형성) 주요 품목별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

* 의견수렴 실적('12년중 총 94회) : 품목별전문가회의(33회), 장차관 현장활동(15회), 설명회(22회), 농어민단체간담회(5회), 자문단회의(3회), 기자간담회(3회), 전문가포럼(6회), 토론회(7회)

□ (협상이후) 국내 피해 최소화와 함께, FTA 기회 활용에 만전

○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국내대책 마련 검토

○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도모

*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 : ('09) 4.2억불 → ('10) 5.6 → ('11) 9.2 → ('12) 9.1

(2) 기타 FTA 추진동향

- (캐나다) 쇠고기·돼지고기 관세양허, 수입쿼터 물량(대두·맥주맥 등) 등의 쟁점에 대하여 비공식 논의 중
 - 쇠고기 등 쟁점 품목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미, 한·EU FTA 양허수준과 차별화되도록 노력

- (한·중·일, RCEP*) 한·중·일 FTA는 1차 협상을 개최('13.3, 서울)하여 협상의 기본지침, 범위 등을 논의하였고, RCEP은 5월중 협상 개시 계획
 -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권역내 포괄적 경제연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광역 FTA
 - 한·중 및 한·일 FTA 협상 추진동향, 한·ASEAN FTA 등 기 개방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인도네시아, 베트남) 협상초기 단계*로 기존 한·아세안FTA의 추가 개방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확대 등 국별 여건을 감안하여 대응
 - * 인도네시아는 2차례('12.7, '12.12), 베트남은 1차례('12.9) 공식 협상 개최

- (호주, 뉴질랜드,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 중단 상황
 - 호주는 쇠고기·낙농품 개방수준 및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며,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 노력
 - 일본과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비관세장벽 완화, 뉴질랜드와는 과도한 개방 기대 수준 조정 유도

Ⅱ.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1.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2. 국정과제 실천계획
 - (1) 농가 소득·경영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 (2) 농촌 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 (3)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5)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 추진

1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 [여건] 기상이변,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 경영여건* 악화, 일상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필요성 증대

* 농가교역조건(판매가격지수/구입가격지수) : ('00) 111.7 → ('12) 94.4

- 농촌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요구 지속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12) : 일반시 10.4, 도농복합시 9.8, 군지역 9.4

- 중국, 캐나다 등 농업 강국과 FTA협상이 진행되고, 쌀 관세화
유예종료('14년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등 통상이슈 잠재

□ [추진방향]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3대 축으로, 농식품분야 5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4월부터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천방안 구체화



2 국정과제 실천계획

(1) 농가 소득·경영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 농가 유형별·발전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 추진

- * (전업농)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IT·BT를 활용한 경영혁신 지원
- * (중소농) 전문·공동경영체로 육성, 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
- * (영세·고령농)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지원

□ **[직불제]** 현행 제도를 내실화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경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보완

○ 쌀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13 : 80만원/ha → 100)하고, 밭작물은 품목확대*('12 : 19개 → '13 : 26), 지목제한 폐지 등 추진

*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시료작물 등'15.1.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 중심으로 농업 수입 보장보험제도 도입 검토(3월~, 콩 등 5개 품목 도상연습)

○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5월~, T/F 운영)

□ **[자연재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지원수준 현실화

○ 수리안전담을 확대하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추진

* ('12) 수리안전담율 56%(541천ha), 배수개선율 52%(158천ha) → ('17) 61%(572), 60%(183)

○ 농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피해 조사기간 단축(7~10일 → 3~5) 및 손해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자연재해 복구지원 수준 현실화(피해산정 기준, 복구지원 단가 등)

□ **(농업경영비)** 농기계 공동이용, 사료가격안정 지원 등으로 투입비를 절감하고, 담합 방지, 농자재유통센터 설립으로 농자재 가격 안정 도모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기계화

* 농기계임대(지자체, 발) : ('12) 250개소(기계화율 50.1%) → ('13) 293(53) → ('17) 400이상(65)

* 농기계은행(농협, 논) : ('12) 692개소(지역농협의 80.4%) → ('13) 700(81.3) → ('17) 800(92.6)

○ 조사료 공급확대('12 : 27만ha → '14이후 : 37) 및 농가·사료업체 지원* 지속

* 농가 직거래구매자금('13년, 1,700억원 신규) 및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가격급등 등 필요시), 할당관세 및 원료구매자금('12 : 600억원 → '13 : 950), 부가세 영세율 적용('11)

○ 농자재 가격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4월)

□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검역 강화 및 제도기반 구축

○ 구제역·AI 위험시기에 특별방역기간('12.10~'13.5) 설정·대응

- 기상방역훈련(반기별 1회 이상), 시군 가동방역기구(상시)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방역시설 의무화,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13.2.23) 기업농가 → ('14) 전업농가 → ('15) 준전업농가 → ('16) 50㎡이상 농가

○ 돼지이력제(12월)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시범사업) 시행

□ **(FTA보완대책)**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에 대응한 보완대책 추진 철저

○ FTA 피해상황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FTA이행지원센터)

○ FTA 대책 성과보고서(매년 5월) 및 투융자계획(매년 9월) 국회 제출

○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13신규 4개 사업, 3,354억원) 지속 발굴·추진

(2) 농촌 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특성(고령화·과소화 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 전개

□ [생활환경] 기초 인프라,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마을은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심지에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마을-중심지간 교통체계를 구축(접근성 제고)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마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지붕 교체(1.5만동, 환경부), 주택 신·개축, 공동 생활 홈 시범조성(4개소), 마을 공동급식시설(신규 240개소), CCTV 확충(신규) 등
 - (중심지) 복지·보육시설 확충, 보건소 현대화(복지부, 588억원), 거점 산부인과(복지부, 11개소), 농촌공원 조성(신규 11개소), 문화·체육시설 등
- 주택개량 지원* 확대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연구(국토부)
 - * 주택개량 융자지원 : ('12) 8천동, 4천억원 → ('13) 10, 5
- 지역주민·학교가 여건에 맞는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시범운영('13 : 4억원)
 - 읍면 보육시설 설치(36개소) 및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44천명, 1인당 11만원/월)
- 농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13 : 신규 5개소)하고, 보건소 등 시설현대화(복지부)

□ [복지여건] 고령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복지지원 강화

-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방법 변경(공시지가 → 감정평가가)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12년말 기준, 1인당 평균 81만원/월 지급)
-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2 : 930개소, 12일/연 → '13 : 1,400, 24)

- 결혼이민여성 대상 기초 영농교육(600명) 및 멘토 교육(700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13년 하반기,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 **[공동체 복원]** 소득·복지,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체 활성화
- **농어촌공동체 회사***(54개소) 지원 및 농식품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 *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및 컨설팅 등 지원(15억원, 개소당 50백만원)
 - 농촌·농식품산업 분야 **협동조합 교육과정** 신설(상반기)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교육-정착 단계별로 **정보제공, 창업·영농 교육, 자금·세제** 등 지원
 - * 농지·주택 융자지원(3%, 5년거치 10년상환) : (‘12) 600억원 → (‘13) 700
 -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13년 신규) : 2개소, 80억원
- **[활력창출]**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 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발전
-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13까지 3천개)
 - **현장활동가 육성**(1천명) 및 광역단위 **활성화지원센터 설치**(9개소)
 -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발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현장포럼 실시**(234개소)
 - 농촌에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재능기부운동본부**’ 운영(6월)
 - * (‘12) 연계단체 38개 → (‘13) 연계단체 52개, 10개 지자체
 - **핵심리더 육성**(강소농 등 43천명), 역량강화 모델 정립 및 프로그램 마련
 - 농촌주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한 ‘**(가칭)지속가능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법**’ 제정 추진(‘13)

(3)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新성장동력 확충, 정예인력 육성, 6차산업화, 식품산업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 [新성장동력] 첨단기술 활용, R&D 투자 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

- 생산, 유통, 지역개발 등 농업·농촌 현장 접목형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6건), RFID 등 유통효율화** (2건) 및 신소재 기술*** (6건) 개발

* IT기반 돈사 모니터링, 사료급이 제어 등의 양돈 교육농장, 유기농 디지털 마켓 구축 등

** 농축산물 생산·유통 추적 RFID 태그 개발 등 *** 봉독을 이용한 식의약품 개발 등

- 현장애로 해소,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로드맵' 마련(6월)

- Golden Seed 프로젝트('12~'21, 4,911억원) 품목별* 상세기획 수립(4월)

* 수출 품목(10개) :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넉치, 전복

* 수입대체 품목(10개) :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감귤, 백합, 김, 버섯

□ [인력육성]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 (예비농업인) 농고·농대 등 학교별 현장 중심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 농고 : 1교 1특화 학과, 진로탐색, 산업체 연계교육 등 지원(10개교 → 17)

- 농대 : 현장실습, 창업·취업 교육, 멘토링, 인턴십 등 지원(10개교 → 15)

- (신규농업인) 농지구입·시설 등 창업 초기자금* ('13 : 1,800명), 경영·기술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지원규모(조건) : 1,012억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전문농업인) 자율 학습조직 지원('13 : 200개), 단·장기 교육* 추진

* 품목 단기 교육(2주) - 농업인 대학(6개월) - 농업마이스터대학(2년)

□ **[6차산업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 제고

- 특화농공단지 조성('12 : 17개소 → '13 : 22)을 통한 향토산업 집적화 및 농공상 융합·가공·컨설팅 등 지원('12 : 1,697억원 → '13 : 1,714)
-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등 기반 구축('12 : 체험·휴양마을 700개소 → '13 : 800)
- 실태조사(5월), '6차 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6월) 및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12월) 등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식품산업]** 농업인·중소기업과 연계·상생하는 식품 공급망 구축

-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산업 참여* 촉진
 - 공동가공센터(16개소), 지역전략식품사업단(67개소), 농공상융합형기업(300개소) 육성
 - * 문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오미자·사과 농축과즙 등 11개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 국내산 식재료의 판로 확대를 위한 '외식 식재료 전문몰(사이버 거래소)' 운영 활성화('12 : 15품목 → '13 : 50)
- 중소식품기업 R&D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13 : 4,000명 교육)
 - * ('12) 식품 R&D 예산 290억원, 중소식품기업 우선배정 비율 50% → ('13) 313, 60

□ **[축산업]**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축산업 체질개선

- 경축 자원순환형 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 * ('12) 공동자원화 시설 88개소, 액비유통센터 162개소 → ('13) 101, 177
 -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4월)
- 무허가 축사 시설·제도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건축법,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 개정 및 시설현대화 지속('13 : 4,325억원)
-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축산 모델개발(3월~, 관계기관 합동 T/F운영)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 생산자는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 마련
 -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 직거래 확대, 도매 시장 거래 효율성 제고, 공정거래 정착 등 추진

□ [계열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 계통출하 및 판매기능 확대

- (농산물) 산지에서 안정적인 **물량확보**, **물류인프라 확충**, **소비지 판로확대**
 - 산지의 농협 전속출하조직 육성('12 : 1.6천개, 1.1조원 → '13 : 1.7, 1.4),
 -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건립(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장성·강원·제주)
 - 지역조합 하나로마트(2,070여개소) 계통판매 확대, 대도시 농협 판매모델 설정 등
- (축산물)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키지 육성**
 - * 안심축산 한우/돼지 시장점유율 : ('12) 11%/4.7% → ('13) 18.6/8.6 → ('16) 37.1/25.0
 - * 육계·오리는 민간업체 중심의 계열화 기 구축('11년 계열화비율 : 육계 94%, 오리 92)
 -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식당(가맹점, 지역축협 직영점)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도(산지와 소비지 연동 제고)
 - * ('12) 정육점 297개소/정육점식당 269개소 → ('13) 370/300 → ('17) 1,000/600

□ [직거래] 소비자 참여, IT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확대

- 소비자·생산자 주도형 **직매장 확충**(20개소), 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2개소), **사이버거래소(유통공사) 운영 활성화*** 등 추진
 - * ('12) 거래액 1.1조원,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중심 → ('13p) 1.4,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

-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4월, 유통공사) 및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물류 효율화 및 시설보완 등 지속**

○ 경매의 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방안** 마련(5월)

* 도매시장 거래비중('12, 청과) : 경매·입찰 79.3%, 정가·수의매매 8.9%, 기타 11.8%

○ 출하단위 규모화를 위한 **품목별 최소 출하물량** 설정 및 포장화율 제고, 하역기계화 등 **도매시장 물류개선 방안** 마련(11월)

* ('13) 품목별 경매단위 분석 및 도입방안 마련 → ('1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계획** 마련(5월)

□ **[공정거래]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사례조사, 교육·홍보 등 강화**

○ **공정거래사무국**(4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을 운영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접수·실태조사(4~9월) 및 **관련규정 개선*** 등 추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위 협조)

○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거래 우수사례 및 불공정거래 조사·홍보**

□ **[수급관리]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관리 체계화**

○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4월)하여 품목별 수급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하여 수급정책 결정에 활용

* 생산자·소비자·유통관계자·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채소류 우선 운영 후 확대 검토

○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5월)하여 품목별 가격수준에 따라 체계적 대응

심각	심각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위협: 해외물량 도입, 권세 인야 등
경계	상당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지장: 비축물량 공급, 저유권세 중량
주의	다소간의 공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심층시장 조사
중심가격	가 격 안 정 대
주의	다소간의 수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심층 시장 조사
경계	농가소득 손실 일부 발생: 저유권세 수입연기, 가공용 공급확대 등
심각	공급과잉, 소득손실 심각: 생산감축, 소비확대 등

○ **산지유통인(배추·무)**을 협동조합화하여 정부 수급안정사업 참여 유도
- 상반기 중 품목조합 또는 법인 결성 추진

(5)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민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 [국내기반] 식량·사료작물 생산 확대로 곡물자급률 제고('11 : 22.6% → '15 : 30)

-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 보전 및 유휴지 활용 확대**
 - 우량농지 전용 최소화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축소(3~6월 연구용역)
 - * 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를 부과, 규정에 따라 50~100%까지 감면
 - **농지매입비축 확대**('12 : 1,921ha → '13 : 2,921 → '17 : 6,921, 누계)
 - 전국 **유휴농지 실태조사 실시**(4~10월),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12월)
- **동계 유휴 논 활용 극대화**('17년까지 이모작가능 66만ha 중 29만ha)
 - '13년 겨울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 논의 용·배수 체계 정비 등 **농지이용 범용화계획 수립**(12월)
- 위기시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대상도 쌀에서 주요양곡(밀·콩)으로 확대**(9월,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해외 곡물조달] 해외 농업개발 확대, 곡물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곡물자주율 제고('11 : 24.6% → '15 : 55)

- 밀·콩·쌀·옥수수 4개 품목에 대한 **'국제곡물 가격전망 모형'**을 해외 연구기관(FAPRI)과 공동으로 개발(7월), 시범 운영
- '분기별 미래 선물가격지수 개발(12월) 및 단계별 **경보발령시스템 운용**(14)

- **해외농업개발 투자재원 다각화***, 해외곡물 확보량 확대('12 : 218천톤 → '13 : 531)와 함께, 해외 곡물유통망 확보 등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보완
 - * 투자재원 : 정부 융자금(2%) → 농식품 모태펀드, 수출입은행, 국제금융공사, 제3국 합작투자 등
 - 해외곡물유통망 확보방안(4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5월) 마련
- 해외 곡물확보 가능량을 점검, 곡물자주율 달성 가능성 점검(7월)

□ **[안전 농축산물] 친환경·GAP·HACCP 등 안전 농축산물 공급 확대**

- **광역 친환경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 지구(10ha 이상) 조성** 지속
 - * 광역단지/지구 : ('12) 42개소/1,076개소 → ('13) 44/1,112 → ('15) 60/1,300
- **농협 등 GAP 선도 생산·출하조직 육성 및 시설지원 확대**
 - * GAP 참여농가/시설지원: ('12) 40천호/718개소 → ('13) 45/800 → ('15) 120/1,000
- 주요 축종별(소·돼지·닭 등) **'HACCP 표준모델' 보급*** 및 **집유업의 HACCP 적용 의무화** 추진(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식약처 협조)
 - * 주요 내용 : 동물약품 휴약기준 준수, 주사침 잔류 확인, 원유냉각 보관 등
- 서민생활 품목 중심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속 확대
 - * ('12) 쇠고기, 쌀, 김치 등 12품목 → ('13.6) 염소고기 등 4품목

□ **[식생활·영양] 국민건강·영양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영양정책 추진**

- **맞춤형 식생활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4월)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식생활 안내서 및 조리법** 등 개발·보급(9월)
- **농촌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 식생활·영양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6월)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운영자금 신규, 220억원)**으로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

(6) 창의·혁신, 현장, 신뢰 농정 추진

◇ 창의·혁신, 현장에 기초한 스마트 농정으로 농업인 신뢰 회복

- **[공감대]** 학계·언론·소비자·생산자·정부부처 등으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4월~), 새정부 농정과제 실천계획 구체화
 -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방향설정이 필요한 과제, 물가 등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논의
 - 논의 결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에 반영
 -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드백 강화
 - SNS(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책공모 실시

- **[투용자·성과관리]** 엄정한 평가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선정) 공공기관(국세청 등) 정보를 활용한 지원의 적정성 확보
 - D/B(경영체, 공간 R&D 등)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및 이력관리
 - (점검)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현장점검(4~5월)
 - (평가) 분야별·사업별 성과지표 설정(4월) 및 내외부 심층평가(연중)
 -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제도개선 및 미흡사업 폐지 또는 일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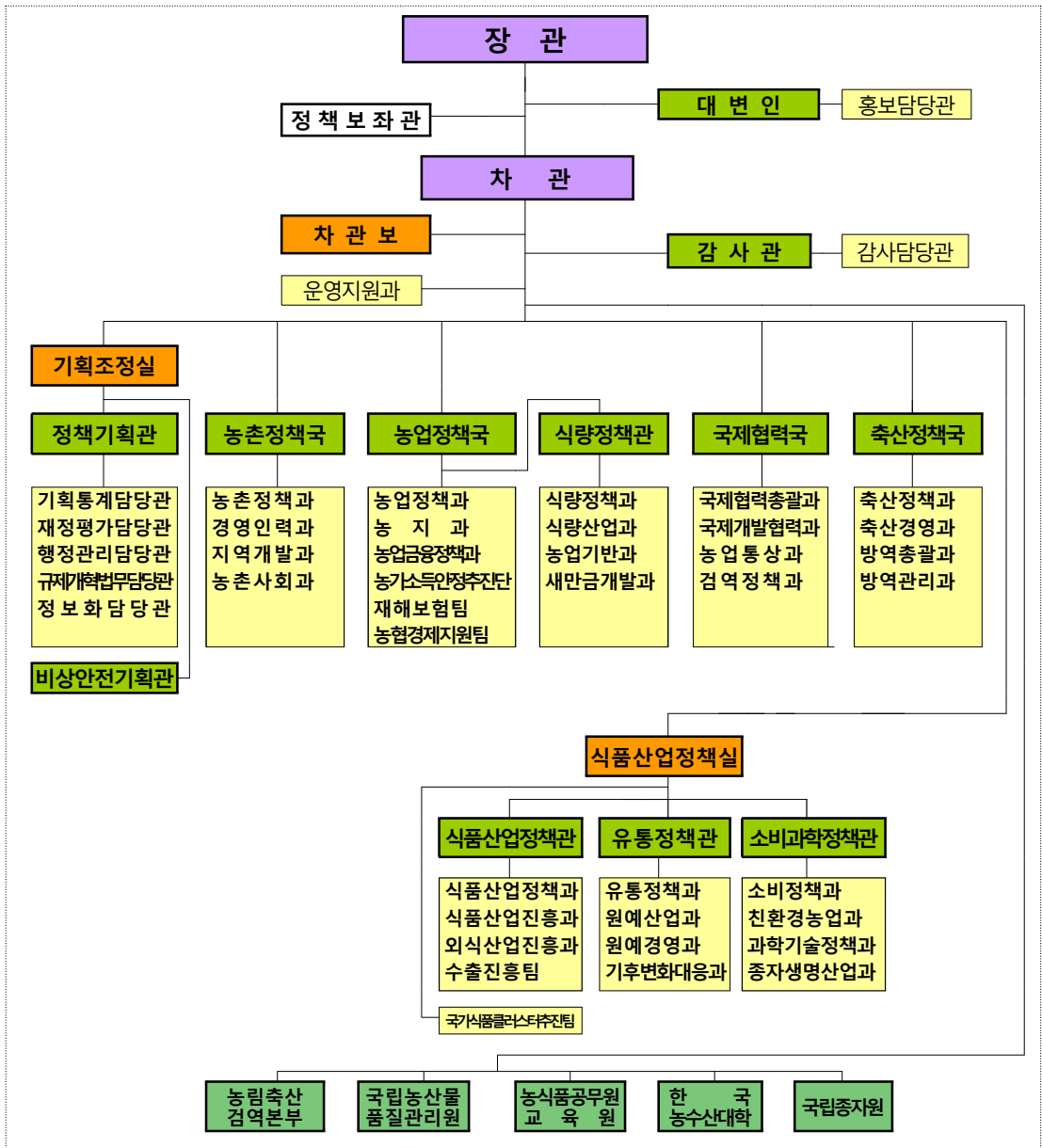
- **[기초통계]** 수요에 맞는 신규통계 개발, 농식품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 농촌 삶의 질, 외식산업 등 신규통계 생산 및 기존통계 품질 개선*
 - * (’12) 고랭지 작물면적 2회 → (’13) 3회, 행정보고통계 표본조사회(봄배추 등 3개)
 - 경영체 등록제 등 기존 D/B 활용 등 통계발전 방안 마련(6월)
 - 유관기관(통계청 등) 생산통계 등 통합 D/B 구축 및 기관간 D/B 연계

첨 부

농림축산식품부 조직현황

가 기 구

※ 조 직 : 1차관보 2실 4국 8관 43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



나 주요 기능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기 능	
대 변 인	주요정책 대국민 홍보, 정보·상황관리, 정책발표 관리 및 브리핑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감사, 재산등록·심사	
운 영 지 원 과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상훈관리,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농정시책조정, 국회업무, 농수산통계, 예·결산 및 기금총괄, 투융자 심사 평가, 변화관리, 조직·정원 관리, 성과관리, 법무행정, 정보화
	비상안전기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농 촌 정 책 국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 농업인 인력 육성, 농촌 지역개발, 농촌 복지, 여성정책, 농촌산업정책	
농 업 정 책 국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농지관리, 농업자금 관리, 협동조합 정책 수립·조정, 농가소득안정, 농업재해보험·대책, 농협경제지원	
식 량 정 책 관	식량정책 총괄 및 수급계획, 양곡 매입·공급, 영농대책, 농업기계화,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농업기반정비, 새만금 사업	
국 제 협 력 국	국제 통상협력 및 협상, 해외농업 개발,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양(다)자간 무역협정, 검역업무 총괄	
축 산 정 책 국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수급, 축산물 유통 및 동물 보호,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식 품 산 업 정 책 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 육성 및 학교 급식, 식품가공 활성화, 전통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유통 정책 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직거래활성화, 농업관측, 채소류·특용작물·과채류·과수류·화훼류 생산 및 수급안정, 시설원예산업,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소비과학정책관	농식품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농축산물·식품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관리,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자산업 육성 및 유전자원 관리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기 능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및 동물 검역, 동물질병관리, 동식물 위생연구, 동물약품관리, 해외 병해충 예찰·방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원산지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시험연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축산식품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교육훈련
한국농수산대학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주요 농작물 보급종 공급, 품종육종지원 및 종자관리